

#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開院 1周年 紀念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2. 4. 10

民族統一研究院

## 序 文

1973년 이래 金正日의 권력승계를 준비해 온 북한은 작년 年末에 김정일을 軍最高司令官으로 임명했고 지난 4월 21일에는 김일성의 80회 생일, 인민군 창설 60주년을 기해 김정일에게 원수의 계급을 부여했다. 신문, TV, 라디오에서 차지하는 金日成의 자리는 김정일로 거의 완전히 대체되었다. 이렇게 김정일의 승계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북한의 권력구조, 대내외 및 대남정책에서의 變化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학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民族統一研究院에서는 開院1周年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學術會議를 개최하여 北韓權力構造의 특성, 김정일 주변 엘리트들의 면면과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김일성 이후 北韓體制의 政策方向을 전망해 보았다.

이 報告書는 금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일부 논문은 그후 저자가 토론내용을 감안하여 다시 손질하였으며 토론내용도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앞으로의 남북관계 發展方向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남북대화 협력시대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2. 5.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目 次

I. 開會辭 .....	李 秉 龍	1
II. 第 1 會議：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		3
1. 主題發表 .....	梁 性 喆	5
2. 討 論 .....		81
III. 第 2 會議：김일성 이후의 政策方向 .....		107
1. 主題發表 .....	徐 載 鎮	109
2. 討 論 .....		155
〈附錄〉 會議概要 .....		175

##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展望」이라는 주제로 제4회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사회자·토론자로 참여하여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또한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來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蘇聯을 위시한 共產圈의 崩壞와 獨逸統一 등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세력구조와 나아가서 통일환경도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統一推進 力量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가의 統一政策 樹立을 지원하기 위한 專門研究機關으로 지난 해 4월 9일 발족된 본 연구원이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開院 1周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간에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되고 정치, 군사, 교류·협력의 3개 분과위원회 및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和解·協力時代를 열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民族史的으로 의미있는 일이지만, 진정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對南政策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4월 15일 80회 생일을 맞이하는 김일성의 고풍화와 관련하여 김정일의 權力承繼問題와 김일성 이후 북한의 政策方向이 최근 새삼스럽게 국내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본 연구원은 開院 1周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김일성 이후의 政策方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체제의 特性 및 앞으로의 政策方向, 南北關係 展望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學術會議가 북한의 향후 權力構造 및 政策方向에 대하여 심도있는 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斯界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고 진지하게 高見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92. 4. 10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乘龍

# 第1會議：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1. 主題發表 …………… 梁 性 喆(慶熙大 教授)

2. 討 論

- 司 會：李 容 弼(서울大 教授)
- 討論者：金 南 植(平和研究院 研究委員)  
徐 鎮 英(高麗大 教授)  
安 仁 海(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빈 면

#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 權力指導層 變動分析과 體制變革 展望 중심 —

梁 性 喆

(慶熙大 平和福祉大學院 教授)

##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로 1980년 중반부터 비롯되어 1990년대초로 이어지는 舊소련,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잇따른 괴멸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통해서 같은 공산권국가인 북한의 체제변혁에의 실마리를 직·간접으로 찾아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두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나는 왜 이들 나라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崩壞과정을 겪게 되었는가? 비단 舊소련·동구공산당 집권국가들뿐만 아니라 西歐의 이른바 구주공산주의(Euro-communism)라는 非집권공산당들도 崩壞위기 또는 급격한 쇠퇴 또는 탈바꿈현상을 맞게된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하나는 그 正反對의 질문이 가능하다. 위의 공산당 집권체제의 崩壞와 西歐 급진공산당 활동의 소멸현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공산집권체제 또는 유사 공산당권력틀에 물려있는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등 특히 이른바 四人幫으로 알려진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에서 아직도 공산당 일당독재체제가 건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와 근거



때문인가? 이들 나라들도 시간문제일 뿐 소련, 동구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공산당 정권붕괴와 공산당 정권건재라는 두가지 대조적 정치현상에 대한 일반이론적 분석과 해설이 가능한 것인가를 이 글에서 모색·점검해 보고자 한다.

둘째로 위의 일반이론적 접근에서 살펴본 공산당체제의 혁명적 변화와 일부 공산당정권의 체제수호현상에 근거해서 현 북한공산체제와 정권의 권력핵심엘리트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의 북한권력 핵심엘리트의 변동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서 몇가지 展望과 전략적 政策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舊소련, 동구집권공산당 체제붕괴의 이론적 근거

모든 이론은 본질적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작업이다. 복잡한 정치현상을 설명·해석하는 정치이론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사토리(G. Sartori)의 표현을 빌리면, “추상의 사다리(Ladder of Abstraction)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현실을 추상화하면 할수록 설명개념의 범위는 넓어지고 커지나 설명내용은 그만큼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sup>1)</sup> 똑같은 논리를 舊소련·동구공산권 국가들의 체제변혁 또는 혁명적 崩壞에 적용하면, 먼저 분석의 대상 또는 범위차원에서는 적어도 다섯가지 분석범위로 나뉜다. 이들 나라들을 하나하나 유일하고 固有한 케이스로 개별적 접근분석을 할 수

1) Giovanni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December 1970), pp. 1040~1041.

도 있고, 舊소련과 동구공산체제를 양분하여 그 대조성과 相異點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또 舊소련과 동구권 공산체제를 한류음으로 놓고 이들 체제崩壞의 상대적 공통성을 점검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이들 崩壞과정을 겪고 있는 공산권국가들뿐만이 아니고 아직 뚜렷한 崩壞과정에 접어들지 않고 있거나 적어도 公式的으로나마 공산체제수호를 고집하고 있는 이른바 위의 ‘四人幫’까지를 한류음으로 하여 이들 모든 공산당집권체제들이 안고 있는 體制崩壞·沒落의 普遍이론을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비단 집권공산당 체제뿐만 아니고 西歐 등에서의 공산당 정치조직·활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공산당 조직활동의 쇠퇴·소멸현상까지도 포괄해서 그 崩壞, 衰微의 일반이론의 도출을 시도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공산당 집권체제崩壞를 하나의 혁명적 정치현상 또는 혁명으로 가정할 때, 혁명의 일반이론의 틀에서 舊소련·동구권의 崩壞, 沒落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겠다. 공산권崩壞를 정치혁명<sup>2)</sup>으로 가정할 때, 정치혁명의 고전적 사례인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나 200년뒤 돌출한 1989년의 舊소련·동구권 공산당崩壞라는 정치혁명이나 근본적으로 같은 혁명일반이론 차원에서 그 분석과 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舊소련·동구 공산체제의 崩壞·괴멸현상을 정치혁명으로 가정할 때 적

---

2) 혁명에 관한 정의는 학자·전문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나 Kuran은 그의 최근 논문에서 혁명을 좁은 의미로 “사회질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 지지하의 정치권력의 장악”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기로 들 수 있다.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s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44(October 1991), p. 13.

어도 다섯 가지 정치혁명이론을 제시할 수 있겠다. 거시적 차원에서 구조주의적 접근(Structurists, ST), 미시적·집단심리적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RC), 특히 합리적 선택이론의 變形으로서의 쿠란(T. Kuran)의 선택위장이론(Preference Falsification, PF),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RD)에 근거한 혁명이론, 끝으로 이들 네가지 이론들을 포괄한 절충주의(Eclectic)적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조주의혁명이론 접근(Structurists, ST)으로는 스카치폴(Theoda Skocpol)을 그 좋은 보기로 들 수 있다. 그녀에 의하면 혁명은 구조적, 상황적 조건의 산물이며, 혁명은 두개의 조건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두개의 조건 중 하나는 어느 특정 국가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변화(진화)하게 되고 지방계급(세력)이 국가의 법과 질서 유지능력을 약화시킬 때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상황(조건)으로 침해된 엘리트들이 이러한 혁명상황전(The Status Quo Ante)으로 복원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었으나 정부를 마비상태로 치달게 할만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다.<sup>3)</sup> T. Skocpol의 접근은 정치권력 구조변화를 구조적, 객관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른바 주관적 요소들—신념, 기대, 태도, 선호, 의도, 목표 등—즉 미시적, 심리적 차원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한편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RC)은 혁명 또는

---

3) Theo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를 참조; Timur Kuran, *ibid.*에서 재인용.

4) Timur Kuran, *op.cit.*, p. 14.

군중봉기를 예견하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나 그러한 현상이 왜 드문 일인가를 설명하는 데는 공헌한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sup>5)</sup>

맨커 올슨(Mancur Olson) 등의 RC이론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 정권에 불만과 반대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그 정권의 제거를 위한 노력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혁명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갖게 되는 개인적 위험부담(Personal Risks, PR)이 그러한 운동이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개인적 혜택(Personal Benefits, PB)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R > PB$ ). 따라서 RC이론은 이타적으로 자기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정권에 도전하는 그 첫 희생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6)</sup> 동구공산권의 경우 동구인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잠자코 있었으며, 1989년에는 왜 또 그렇게도 급격히 양순함(Docility)이 폭발적인 변화요구로 돌변했는가를 RC이론은 설명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조주의이론은 소련의 변화, 즉 고르바초프의 동구국내정치 불간섭이라는 새정책신호들(동구권구체제를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폭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반하여 고르바초프는 동구 각 나라사정은 그 각 나라에 맡긴다는 이른바 시나트라 독트린을 주장하고 나선 것 등)로 동구와 舊소련관계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동구혁명의 구조적 측면을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ST이론도

---

5) 이 분야의 공헌으로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ory of Group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Timur Kuran, *op. cit.*

6) Michael Taylor, "Rationality and Revolutionary Action," in Taylor, ed., *Rationality and Revolu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63~97; Timur Kuran, *op. cit.*, p. 14에서 재인용.

왜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舊질서가 그렇게 급격히 崩壞했고, 더구나 1989년의 변혁이 모든 展望과 분석을 훨씬 앞질러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7)</sup>

마찬가지로 테드 거(Ted Gurr) 와 데이비스(James C. Davis) 등의 이른바 혁명의 원인을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s, RD)이론에서 찾는 것도 동구·소련공산정권의 돌변적 崩壞를 설명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단적 국민의 기대에 비해 경제적 실적(결과)이 부진할 때 RD현상이 일어나며, 이러한 불만이 충분히 팽배해지면 그 결과는 곧 혁명이라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T. Skocpol의 역사실증분석에 의하면 정치혁명(政制革命)은 국민의 불만도가 그렇게 이례적으로 충만했을 때 일어난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톨리(Charles Tilly)와 그의 공동연구자들도 프랑스에서의 집단폭력의 수준과 국민의 불만도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sup>9)</sup>

---

7) Timur Kuran, *op.cit.*, p. 15.

8) Ted Gurr는 혁명을 정치폭력행위의 현상으로 규정한다. 즉 정치폭력행위를 소요(Turmoil), 음모(Conspiracy), 내전(Internal War)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크게 나누고 혁명은 내전의 한 부류로 정의한다. Ted R. Gurr, *Why Men Rebel*(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 11 참조. 또한 James C. Davi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February 1962), pp. 5~19. Davis는 이른바 J-Curve이론을 제시한다. 즉 혁명은 상승하는 기대에 경제적 실적이 못미치고 갑자기 떨어질 때 이를 혁명적 상황이라고 가정한다.

9) David Snyder and Charles Tilly, "Hardship and Collective Violence in France, 1830 to 196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October 1972), pp. 520~532; Charles Tilly, et al., *The Rebellious Century: 1830~1930*(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Steven E. Finkel and James B. Rule, "Relative Deprivation and Related Psychological Theories of Civil Violence: A Critical Review," in Louis

위에서 본 바와 같이 RC이론이 혁명현상분석에 불충분·부적합한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Kuran은 RC이론의 變形으로써 選好 僞裝이론(PF)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개인의 선호성을 사적선호(Private Preference)와 공적선호(Public Preference)로 구분하고 전자는 어느 일정 순간 고정된(Fixed) 것인데, 후자는 그 개인의 통제하에 있는 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선호가 다른 경우 즉 그가 사적으로 갖고 있는 선호와 그가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선호에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는 選好 僞裝(Preference Falsification)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선택은 外的利得(External Payoff)과 內的利得(Internal Payoff)의 교차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권에 반대했을 때 오는 外的利得 또는 불이익은 개인적인 보상과 처벌이다. 內的利得 또는 불이익은 심리적인 비용으로 개인적인 자율성의 상실, 개인적인 성실성(Personal Integrity)의 희생이 그것이다. Kuran에 의하면 국민의 정권반대 목소리와 조직이 확대되면 될수록 반대세력에 가담했을 때 오는 외적비용이 選好 僞裝에서 오는 내적비용보다 낮아지는 점(상황)에 이르게 된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혁명적 분계점(Revolutionary Threshold, RT)이라고 한다. 공식화하면 혁명적 분계점(RT)은 정권에 반대하는데서 오는 외적비용(External Cost, EC)이 選好 僞裝을 하는데서 오는 내적비용(Internal Cost, IC)보다 작아지는 순간이다( $RT = EC < IC$ ).<sup>10)</sup> 나아가서 Kuran은 몇가지 가정을 한다. 하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

Kriesberg, ed.,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Greenwich, Conn.: JAI Press, 1986), pp. 47~69 참조; Timur Kuran, *op.cit.*, p. 16에서 재인용.

10) 상세한 설명과 분석은 Timur Kuran, *op.cit.*, 특히 pp. 16~25 참조바람.

불만에 가득차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세력과 정권지지세력간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RT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불만계층이 있으며 균형자체가 깨지지 않는 경우보다는 불만계층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덜 고조된 상황에서라도 누군가 그 균형을 깨는데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더 RT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選好僞裝(PF)모델은 혁명이론의 세가지 중요한 쟁점—사회변동의 지속(The Continuity of Social Change), 개인의 힘(The Power of the Individual), 조직화하지 않은 군중의 중요성(The Significance of Unorganized Crowds)—에 다음과 같이 해답을 주고 있다.

PF이론은 지속적인 또는 비지속적인 변화를 하나의 통일된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의 선호는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 변화하며 그러한 기간 동안의 公的反對(Public Opposition)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얼핏보기에 작은 사건(불만을 품고 있는 한 청년이 정치집회에서 지도자에게 달걀을 던진다든지) 또는 정부의 예기치 않은 큰 실수 등이 숨겨진 국민적, 집단적 불만(Latent Bandwagon)에 불을 붙이게 되면 순식간에 국민적, 집단적 公的反對의 폭발적 확장세, 이른바 혁명적 상황(Revolutionary Bandwagon)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맨 처음 시작하게 되면(Only if someone else goes first)—고양이에 쥐방울을 다는 모순—이라는 단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그러나 일단 불이 붙고나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혁명적 상황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PF모델에서

---

11) *Ibid.*, pp. 21~24.

는 개인이 힘없는(무기력한) 존재인 동시에 잠재적으로는 힘이 센(강력한) 존재라는 二重性을 강조한다. 개인이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은 혁명은 많은 인력의 동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잠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상황에선 폭발적인 연쇄반응을 일으켜 필요한 인력동원이 순식간에 가능하고 이는 혁명상황으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PF모델이 RC이론과 다른 것은 후자는 개인을 잠재적인 혁명가로서는 무기력한 마비된 존재로 과소평가하는데 있다.<sup>12)</sup> 그러나 PF모델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혁명이 일어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도 잠자코 있는데 누군가 자기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첫혁명의 횃불에 불을 던지게 되는 상황논리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PF모델은 조직된 압력집단과 조직되지 않은 군중이 정권을 崩壞시키는데 있어서의 상호보완적 역할도 포용한다. 조직된 반대세력(운동)은 지지기반(Support Network)을 제공하고 혁명의 성공기대감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의 반대의 외적利得(External Payoff)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 반대세력(운동)은 겉으로 보기에 흔들리지 않고 막강하게 보이는 현상유지현상(The Appearance of the Invulnerability of the Status Quo)을 깨고 선전·선동으로 개인의 선호가 현상유지보다는 변화의 추구로 바뀌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위대하고 무섭게만 보이는 지도자의 얼굴에 맨 처음 달걀을 던지는 사나이, 포악한 고양이 목에 맨 먼저 방울을 매다는 용기있는(무모한) 쥐의 혁명적 상황발전의 기여와 역할을 상징할 때, 조직된 반대세력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조직화되지 않은

12) *Ibid.*, p. 24.



군중의 힘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도 금물이다.<sup>13)</sup> 최근 공산권 붕壊·와해과정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사하로프, 샤란스키, 솔체니친, 파스테르나크, 하벨, 바웬사, 方勵之는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많은 이름없는 영웅들이 혁명이 성공하기 전에 강제집단노동 수용소에서, 정신병원에서, 창살있는 혹은 창살없는 감옥에서 사라지고 묻혀졌는가? 끝으로 Kuran은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름이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혁명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간의 비합리성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Kuran의 PF혁명모델도 RC의 變形일 뿐 RC이론의 전면부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포괄적 절충접근은 하나의 이론이나 접근모델이라기보다는 위의 네가지 이론과 모델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점검, 취사선택 등 선별작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산권 붕壊·와해과정을 ‘정치혁명’으로 가정하고, 그 구조적 측면, 개인의 심리적 측면, 개인의 비조직적, 조직적, 집단적 二重性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학문적 신중성일 뿐이다.

---

13) Pamela Oliver, "Bringing the Crowd Back In: The Nonorganizational Elements of Social Movements," in Louis Kriesberg, ed.,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Greenwich, Conn.: JAI Press, 1989), pp. 1~30; Timur Kuran, *op.cit.*에서 재인용.

### 3. 잔존 공산체제의 展望과 이론적 근거

잔존 공산권체제의 展望에 있어서도 분석의 대상을 크게는 현재까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하에 있는 나라—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뿐만 아니라 공산당체제 또는 유사 공산당체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캄보디아, 라오스, 아프카니스탄—을 한 묶음으로 놓고 분석할 수 있다. 작게는 이른바 四人幫을 한 묶음으로 분석대상을 삼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들 나라들의 固有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각 나라 하나하나를 분석대상과 기준으로 심층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을 초점으로 하여 크게 두가지 질문—북한도 舊소련·동구권의 공산당집권세력의 崩壞·와해과정을 견고 있는가? 왜 북한은 아직도 그러한 과정을 잠정적이거나 막고 있는가? 막을 수 있는가?—을 던지고 또 그 해답을 얻고자 한다.

위의 두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풀이가 필요하다. 하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현상을 공산권 혁명지각변동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희생, 인간성회복, 탈냉전·탈핵 새국제질서 형성이라는 지구적 차원에서 실마리를 찾자는 것이다. 지적 차원에서 이른바 後期現代主義(Post-Modernism)—중앙집권적 전체주의적 사고에의 도전, 나아닌 다른 것 즉 타집단·타사회문제들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대, 기술혁명에 의한 정보사회의 도래<sup>14)</sup>—가 그 보기가 된다. 현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며 공산

14) 후기현대주의에 대한 최근의 분석으로는 Val D. Rust, "Postmodernism and Its Comparative Education Implication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5, No. 4

정권하의 반체제의 선봉인 하벨(V. Havel)의 표현을 빌리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혁명은 합리주의, 보편주의, 과학주의에의 반발과 회의”라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崩壞는 세계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Knowable), 알려진 지식은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가정의 극단적 변태현상이라고 본다. 그는 공산주의의 패배를 군사력에 의한 패배가 아니고 삶 그자체, 인간정신, 양심, 조작에 대한 인간의 승리로 본다. 공산주의가 패배한 것은 모든 종류의 색깔, 확실성, 역사의 향거 그리고 획일적 이데올로기의 속박에 대한 인간개성의 승리로 본다.<sup>15)</sup> 같은 맥락에서 솔제니친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공산정권은 곧 당장 무너진다고 경고한다. 거짓말 안한다는 것(not to lie)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당신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not saying what you don't think)이라고 定義한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근거리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며, 손을 들지 않으며, 표를 던지지 않으며, 거짓웃음을 짓지 않으며, 안가야할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며, 일어서지 않으며, 박수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sup>16)</sup> 채소상이 자기 점포 앞에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붙혀 놓았는데 만약 그가 “세계의 노동자여, 양파와 당근을 먹으시오!”라는 구호로 바뀌달 수 있는 용기, 아니면 바뀌달 수 없는 정치환경도 같은 차원에서<sup>17)</sup> 음미할 수 있겠다.

(November 1991), pp. 605~626 참조.

15) Vaclav Havel, “The End of the Modern Era,” *The New York Times*, March 1, 1992.

16) Alexander Solzenitsyn, “The Smatterers”(1974), in Solzenitsyn, et al., *From the Rubble*, trans., A. M. Brock, et al.(Boston: Little, Brown, 1975), p. 275; Timur Kuran, *op.cit.*에서 재인용.

17) Timur Kuran, *op.cit.*에서 재인용.

Havel은 오늘의 위기를 단순히 공산주의의 위기가 아니고 일반성(Generality), 객관성(Objectivity), 우주적 보편성(Universality)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질서는 영혼(Soul), 개인적 정신성(Individual Spirituality), 사물에 대한 개인의 체험적 통찰, 자기일 수 있는 용기, 자기양심이 가르치는 데로 가는 길, 존재의 신비 앞에서의 겸허, 세계의 주관성과 그 자신의 주관성의 연계에의 신념 등이 새로운 세계의 지적 資産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8)</sup> 과학주의, 보편주의, 객관주의, 집단주의의 극단적인 변태적 모습의 공산주의에의 저항, 반응으로서 Havel은 개인주의, 주관주의를 역설한다. 또한 그는 실제 체험에서 오는 반항적 절규로서의 인간성회복, 인간의 재발견을 주장한다. 한편 이사야 버린(Isaiah Berlin)은 일방적인 주의와 주장의 강조보다도 西歐知性史에서의 합리주의(Rationalism)와 낭만주의(Romanticism), 보편주의(Universalism)와 민족주의(Nationalism), 과학주의(Scientificism)와 신비주의(Mysticism)의 지속적인 갈등과 시계추와 같은 움직임이 지적하는 것이<sup>19)</sup> 주목된다. 그의 책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며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이 창출해 낸 개념, 사상, 이념도 끊임없는 自淨과 여과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 Berlin의 표현을 빌리면, “추위보다는 따뜻함을, 거짓보다는 진실을, 무시되고 오해받는 것보다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찾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며 이는 보편성을 갖

18) Vaclav Havel, *op. cit.*.

19) I. Berlin, *The Crooked Timber of Humanity: Chapters in the History of Ideas*, ed. by Henry Hardy(New York: Alfred A. Knopf, 1991)을 참조바람.

는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서 이러한 추구를 보편적 윤리법칙이라고 부른다면 그보다는 덜 보편적이고, 덜 중요하고, 덜 깊이가 있는 가치들이란 습관, 관례, 품행, 취미, 에티켓 順이라는 것이다.<sup>20)</sup>

한편 뷰로워이(Michael Burawoy)는 현공산체제의 崩壞를 공산주의 沒落 또는 Havel과 같이 크게는 현대주의의 沒落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의 쇠망으로 보는 것이 주목된다. 그는 국가사회주의의 멸망은 특히 가장 부패한 형태로서의 소련 마르크스주의의 와해는 오히려 정통마르크스주의를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자체모순과 비합리성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적 해결방안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는 마치 시암의 쌍둥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생명은 마르크스주의의 생명이라고까지 역설하는 것도<sup>21)</sup> 경청할 만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공산당-黨독재정권들이 동구·舊소련에서 崩壞했고, 기타 지역에서도 崩壞 또는 체제위협에 당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사상 또는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닉슨(Nixon)이 주장하는 持論이다. 그는 공산주의(그가 얘기하는 것은 공산당정권)는 멸망했으나 그것이 곧 자유의 승리는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에서의 민주화개혁이 실패, 또다시 극단적인 러시아 민족주의에 근거한 훨씬 위험

20) *Ibid.*, pp. 204~205.

21) Michael Burawoy, "Marxism as Science: Historical Challenge and Theoretical Grow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No. 6(December 1990), pp. 775~793 참조.

스러운 전제정치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현재 열친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개혁이 러시아에서 성공한다면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의 보루들—북한, 쿠바, 베트남, 중국—에 큰 위협과 타격이 되며, 만약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다시 엄혹(嚴酷)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22)</sup> 따라서 러시아의 민주자유혁명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은 非공산주의국가들, 특히 미국의 책임이자 또 국가이익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Burawoy는 소련식 공산주의는 쇠망했어도 마르크스주의는 건재한다고 주장하고, 너슨은 소련식 공산주의의 쇠망이 곧 자유주의승리는 아니고 러시아 등에서의 자유주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서 공산 전체주의독재와 非공산 권위주의독재의 개념적 양분화가 갖는 문제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몇가지 보기를 들어보자. 정치학자요 한때 미국의 UN대사를 지낸 커패트릭(Jeane Kirkpatrick)는 西歐식 권위주의는 개혁될 수도(Reformed) 제거될 수도(Removed) 있으나 공산전체주의는 그렇게 안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sup>23)</sup> 1984년 헌팅톤(Samuel Huntington)도 “동구에서의 민주발전의 가능성은 사실상 무”<sup>24)</sup>라고 展望했다. 똑같은

22) Richard Nixon, “The Challenge: The West Faces in Russia,”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March 12, 1992.

23) Jeane Kirkpatrick, “Dictatorships and Double Standards,” *Commentary* (November 1979), pp. 34~36; Guiseppe Dipalma, “Legitimation From the Top to Civil Society, Politico-Cultural Change in Eastern Europe,” *World Politics* 44(October 1991), pp. 49~80에서 재인용.

24) Samuel Huntington,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Political Quarterly* 99(Summer 1984), pp. 193~218, p. 217; Guiseppe Dipalma, *op.cit.*에서 재인용.

해에 린즈(Juan Linz)도 전체주의독재와 권위주의독재의 개념적 구분은 전자는 정권의 변동가능성(Transformability)이나 회귀성(Reversibility)이 가능하지 않고 후자는 가능하다는 데서 찾았다.<sup>25)</sup> 아렌트(Arendt)는 공산주의는 가족, 공동체(Community), 종교, 직업에 뿌리박고 있는 인간들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개인들이 국가의 자선(Good Will)에 엄청나게 매달리게 함으로써 반공산주의항거를 할 수 있는 집단적 동원·봉기를 막는다는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다.<sup>26)</sup> 마찬가지로 울프(Bertram D. Wolfe)도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7가지 固有한 특성을 열거<sup>27)</sup>하면서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내구력(Durability)을 강조했다.

요컨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2차대전  
의 공산주의, 파쇼, 나치정권의 체험이 생생한 정치적 역사적 배경  
에서 아렌트(Arendt), 프리드리히(Friedrich), 브레진스키(Brzezinski-

25) Juan Linz, "Epilogue," in Guy Hermet, ed., *Totalitarismes*(Paris: Economica, 1984), p. 244; Guiseppe Dipalma, *Ibid.*에서 재인용. 전체주의 독재와 권위주의 독재의 개념에 대한 심층분석은 Sung Chul Yang, "Totalitarianism Versus Authoritarianism: The Case of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s,"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Korean Peninsula*, ed. by Chung-won Choue (Seoul: Kyunghee University, 1988), pp. 209~231 참조.

26)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New York: World Publishing, 1958), p. 3; Timur Kuran, *op.cit.*에서 재인용.

27) Bertram D. Wolfe, *Communist Totalitarianism: Keys to the Soviet System*(Boulder: A Westview Encore Edition, 1985) 참조바람. 권력투쟁, 문화의 조작(심리통제, 역사조작 등), 전국민의 인력동원, 소비에트식 선거(100% 투표, 100% 찬성), 크레믈린의 동맹주축으로서의 역할, 전체주의권력의 비밀시성, 비전가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28) Hannah Arendt, *op. cit.*;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nom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ski)<sup>28)</sup> 등은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한뫼음으로 놓고 전체주의의 공통점 발견에 역점을 두었다. 1960년대, 1970년대에 이르면 적어도 1917년 이후 등장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는 겉으로는 체제적 내구력을 보이고, 非공산권 파쇼나치독재, 군사독재, 권위주의 독재정권들은 수많은 부상과 부침을 보임으로써 독재정치로서의 공통점 발굴보다는 권위주의 독재체제와 공산전체주의 독재체제의 본질적인 異質性 발굴에 더 큰 매력과 관심을 쏟아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좋은 보기들이 위에서 지적한 Kirkpatrick, Linz, Huntington 등의 분석들이다.

그러나 1980년말을 기점으로 체제적 내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보였던 소련과 동구공산권이 거의 순식간에 崩壞됨으로써 공산권 전문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정치학자들의 지적 무기력, 수난시대를 다시 맞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知的 동향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의 異質性 발굴·발견보다는 다시 공통점 발견에 더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시 공산주의체제 崩壞를 보편적인 近代化, 산업화과정에서 오는 변화, 西歐 다원화사회에로의 수렴(Convergence)에서 찾고자 한다. 보기를 들면 루시안 파이(Lucian Pye)는 美政治學會長으로서의 기초연설에서 近代化가 가져온 발전들-경제성장, 과학과 기술의 확장, 통신의 급증과 확대, 교육제도의 수렴-이 정치변동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오늘의 권위주의 위기를 분석하는데 실패했다고 함으로써 오늘의 공산권 崩壞를 近代化라는 변화·변동의 산물로 보려고 한 것이 주목된다.<sup>29)</sup> 그러

29) Lucian Pye, "Political Science and The Crisis of Authoritarian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March 1990), pp. 3~19.



나 近代化접근은 공산권체제 崩壞와 非공산권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변동을 함께 놓고 봄으로써 두체제가 갖고 있는 異質性을 상대적으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직 崩壞하지 않고 있는 공산권체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지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退化이론(Devolution)을 들 수 있다. 야노스(Andrew Janos)는 베버(M. Weber)의 상투화·퇴화론(Theory of Routinization, Devolution)에 근거해서 구세주적 전체주의운동의 목표와 그것을 실현·실천하는 운동원의 기능과 지위에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가다가 궁극엔 체제관료와 정상화를 주장하는 집단(Normalizers)이 승리하게 되고 이는 체제위기로 치닫는다는 것이다.<sup>30)</sup> 그는 최근 논문에서 보다 일반화된 정치변동이론에서 공산주의변혁을 해석하려 하고 있다. 크게 그는 막스베버의 일상화(Routinization), 구제화(Salvationism), 스펜서(H.Spencer)의 호전성(Militancy)과 산업주의(Industrialism), 그리고 근대세계체제(Modern World System)이론으로 나눈다.<sup>31)</sup>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Spencer의 호전성과 산업주의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공산주의체제 崩壞를 공산주의 엘리트들이 이제까지의 혁명적 호전적 노선(Revolutionary Militancy)을 포기하고 발전전략(Developmental Strategies)을 채택하며 나아가서는 민주화까지도 추구하려는 전략적 전환, 사고의 전환에서 엿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32)</sup>

---

30) Andrew C. Janos, *Politics and Paradigms: Changing Theories of Change in Social Scienc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pp. 106~119; Guiseppe Dipalma, *op.cit.*에서 재인용.

31) Guiseppe Dipalma, *op.cit.*, pp. 57~58.

위의 여러가지 이론적 쟁점들을 감안하면서 다음은 본 논문의 초점인 북한체제가 아직까지 붕壊하고 있지 않은 체제내구력(System Durability)을 살펴보면, 체제붕壊이론을 가지고 우선 正反對의 시각에서 왜 붕壊하고 있지 않는가(물론 붕壊·피멸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아직 그것이 표면화, 표출화,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북한정치현실 분석일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첫째로 구조주의이론(Structuralists)의 시각에서 보면 혁명의 첫째 조건·상황 즉 북한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거의 “혁명적 상황”으로 변모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6공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성공은 한반도에 2차대전 후 지속되어온 二重三角동맹체제(남한, 미국, 일본 대 북한, 소련, 중국)를 근본적으로 대체했다. 남한과 러시아와의 수교, 구동구권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 남한과 중국과의 파격적인 관계증진, 북한의 對日, 對美수교·관계정상화접촉 등이 그것이다. 다만 중국에 현존하는 공산당 일당체제에 혁명적 변동이 없는 한 북한의 대외적 구조에 급격한 변혁은 아직 시기상조다. 두번째 혁명상황인 집권세력의 국내법과 질서통제능력의 상실은 아직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혁명적 상황이 절반이상 꿈틀거리고 있으나 결정적 관건인 중국의 혁명적 변혁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집권세력의 통제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숨쉴 여유는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로 합리적 선택이론(RC)의 측면에서 보면 인민 개개인의 입

---

32) Andrew C. Janos, "Social Science, Communism,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Change," *World Politics* 44(October 1991), pp. 81~112 참조.

장에서는 아직도 북한체제에의 도전에서 오는 물질적·물리적 희생과 부담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체제도전을 강행할 만한 개인적 여유도 객관적 여건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의 무기력, 무력감(Powerlessness, Helplessness)이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의 잠재적인 엄청난 힘(Power of the Powerless)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주체사상, 金正日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부자권력계승을 합리화하는 해괴한 주체이론에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직은 북한주민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sup>33)</sup>

셋째로 상대적 박탈감(RD)접근도 북한정치현실에는 한계가 있다. 金日成과 그 핵심 집권엘리트는 북한인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치술에 기교와 기만술을 지난 40여년 동안 갈고 닦아왔기 때문이다. 먼저 시간개념의 조작이다. 북한주민에게 있어서 과거는 크게 두가지로 상징되고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나는 金日成과 그의 빨치산 抗日유격대원의 혁혁한 영웅적 행위와 불멸 불후의 抗日민족투쟁사다. 다른 하나는 일본군국주의, 제국주의 식민통치사다. 여기에 해방후 분단, 6.25로 불리는 한국전쟁, 이른바 북한이 얘기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원수’인 미국, 미제국주의까지의 ‘만행’을 합쳐서 끊임없이 북한권력 핵심세력이 원하는 과장되고, 날조되고 또 극도로 도식화된 ‘과거’를 선전, 선동, 교양 학습하고 인민은 계속해서 이를 반추해야 한다. 북한주민에게 있어서 미래는 나름대로의 희망이다. 북한주민에게 ‘현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동원이다. 金日成의 1992년 신년사의

33)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대한 분석은 양성철, 「북한정치론」(서울: 박영사, 1991), pp. 121~152.

말을 인용하면, “조국의 만년대계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영웅적 로동계급과 인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수도 건설과 온나라의 건설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金日成의 抗日투쟁의 어려움과 역경에 비하면 오늘 북한인민이 겪고있는 시련과 곤경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의 북한주민의 생활형편은 과거 일제시대의 착취와 처참함에 비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외친다. 다시 말하면 북한주민의 한개인으로서 누려야 할 현재라는 시간, 개인으로서 간직하고 반추할 수 있는 과거라는 시간, 개인으로서 설계하고 추구해야 할 미래라는 시간이 북한 집권권력층이 정리·조정된 과거개념과 미래상에 묻혀서 현재는 끊임없는 집단적 노력동원을 뜻하고 한개인으로서 되돌아보는 과거도 미래도 똑같은 집단적 노력동원의 지속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金日成과 그의 집권세력이 북한주민에게 팔고 있는 휘황찬란한 미래와 미래상이 1992년의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다같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우리인민의 세기적 념원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당면하여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sup>34)</sup> 라면 이제 집권층의 북한주민에의 설득에 한계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공간개념의 조작이다. 분단상황을 이용, 북한의 모든 선전매체는 남한과 미국, 영국, 일본 등 非공산국가들의 이미지를 극도로 부정적인 것으로 이미지조작을 한다. 로동신문을 보기로

34)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2.1.1.

들어보자. 보통 6면으로 되어 있는 당기관지의 5면에 남한「소식」을 실는다. 1992년 1월 2일자에는 “1990년대에 들어와 지난 2년 동안에 120여개 나라에서 본 1,500여개 대표단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된 콘크리트장벽을 목격하고 분렬주의자들의 죄행을 규탄하였다”는 것과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학장실을 점거하고 통성을 벌려온 부산공업대학 학생들이 12월 5일 이래 교내의 25개 사무실과 교실에서 투쟁을 계속하였다”라는 내용과 “남조선의 한겨레신문이 지난 해 12월 15일자에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방북인사석방하라는 사설을 실었다”는 것이며 “은세계가 34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전향’하지 않는 전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를 북조선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12월 29일 경상북도 울진군안의 주민들 300여명이 괴뢰당국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투쟁을 벌렸다”는 것과 “12월 29일 전라북도 리리(이리)의 택시운전수들이 경찰의 폭행에 항의하여 집단적으로 택시운행을 거부했다”는 것, “파쇼도당은 12월 30일 괴뢰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있는 재판놀음에서 서울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정원택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파쇼도당은 이들이 강경대학생타살사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괴뢰국무총리에게 썩은 닭알세례를 안겼다고 하여 이런 횡포를 감행하였다”고 한 것이 남한소식의 전부다.

하나만 더 보기를 들어보자. 1990년 2월 17일자에는 “14일 평민당총재 김대중은 기자간담회에서 괴뢰총무처가 공무원들에게 3당통합을 선전하도록 지령한 것을 비난했다”는 것과 “팀스피리트 '90 전쟁연습을 현지에서 지휘감독하고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해 끼여든 미국방장관 체니란 자가 16일 전선서부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주력부대 미제2보병사단의 최전방진지에 대한 시찰놀음을 벌리고 북침전쟁을 선동했다”는 것과 “남조선의 로태우일당이 남조선사회를 범죄의 소굴로 만들었고 ‘민생치안’간판을 걸고 폭압소동을 벌린다”는 기사와 “충청북도 충주에서 14일 청년 여러명이 괴뢰시장관사를 공격했다”는 기사, “인천의 항동연안부두의 160여척 안강망어선 선원들이 선주들의 기만행위에 항의하여 14일 현재 계속 승선거부투쟁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 남한소식의 전부다.

마지막 면인 6면은 이른바 非공산·서방국가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1992년 1월 2일 6면에는 “일본에서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12월 26일까지 1만 932명에 달함으로써 연간 사망자는 3년 연속 1만명선을 넘어섰다”는 것과 “12월 28일 미국항공회사 「아메리칸에어라인즈」가 1,250명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것, 1991년 미국에서 총 2만 3,700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다고 보도, “부패한 미국정치풍토”, “미국에서 지난해 총 4만 7,777개 회사가 파산했고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65%가 늘어난 것으로서 1980년 이래 최고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강점지역에서 투쟁이 계속된다는 내용이 고작이다. 6면에는 또 형제의 나라 쿠바, 가나 등 친북한 국가들이나 친북한 해외 단체들의 긍정적 기사를 함께 심는다. 역시 1990년 2월 17일자 6면에는 “미군의 빠나마 강점종식요구”,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중지”, “미제핵미사일시험 또 감행”이라는 기사와 함께 “자본주의 사회의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뛰어오르는 소비품값, 교통사고, 범죄가 판을 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 집없는 사람들, 유조선 폭발사고” 등을 실고 있다.

예컨대 북한권력집권층은 시간개념의 조작과 공간개념의 조작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시간·공간비교의 준거물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인민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극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공간의 조작도 한계에 이른 것이다.

필자가 최근 참가했던 중국 山東省 위해市の 한 회의에서 만난 중국의 북한전문가가 1967년, 1986년 북한에 장기간 체류한 사실을 알고 묻는 질문에 그녀는 1967년의 북한주민생활이 1986년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시간조작’에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극도로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남한현실과 非공산서방국가들의 실상에 대한 「소식」과 기사들의 끊임없는 되풀이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방문자를 통해서, 해외여행자·체류자·유학생을 통해서 스며든 남한과 서방세계에의 다른 소식과 뉴스가 계속 번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북한인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부재한다기보다는 계속 증폭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체제변혁 등 혁명적 상황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겉으로는 적어도 북한인민은 잠재적인 강한 힘으로 보이지 않고 힘없는 군중, 비조직화된 약한 ‘어린양’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넷째로 選好偽裝모델(Preference Falsification)은 현 북한주민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는데 있어서 큰 적실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 개인의 처지와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선호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외치며 체제에의 공적선호와 지지를 눈치껏

열렬히 내보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며 따라서 選好偽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舊소련·동구권에서 심지어 중국에 서까지도 볼 수 있었던 반체제인사들이나 비밀지하출판활동 (Samizdat) 또 이러한 저술들이 서방세계로 밀반입되어 출판되는 (Tamizdat) 현상들이 북한에는 거의 부재할 정도로 북한의 정치·사회현실은 참울한 것이다. 따라서 솔체니친이 경고한 “거짓말”의 모습들이 아직도 극도로 만연하고 보편화된 정치비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주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가슴 왼편에 달고 다니는 金日成뺨지가 자랑스러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 개인으로서의 인간모독·모욕으로 느끼고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확산된다면 Kuran이 얘기하는 혁명적 상황에의 접근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그 첫도전자, 첫 반체제인사, 첫 혁명가는 누구인가? 누구일까?

다섯째, 舊소련·동구권 공산권崩壞로 지적 수난에 부딪치고 있는 이른바 공산전체주의의 특수성, 固有性을 주장해 온 학자들 - 린즈, 커패트릭 - 의 異見과 持論뿐만 아니라 칼 프리드리히, 브레진스키 등은 공산주의 특성을 나치즘, 파시즘을 포함한 전체주의로 규정했는데, 이러한 관점이 북한공산주의 전체주의독재에 아직도 적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공산주의는 개인을 국가의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가정, 공동체, 종교, 직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개인간의 유대를 약화시킴으로써 반공산저항의 집단행동이나 동원을 막고 있다”는 Arendt의 통찰은 북한의 현정치·사회현실에 커다란 적실성을 갖는다. 로동신문 1992년 1월 3일자를 보기로 들어보자. Arendt가 얘기하는 가정, 공동체, 종교, 직업에 대한 글은 찾아볼 수



조차 없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투지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는 것”이 인민이다. 또 이런 귀절들이 판을 친다. “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는 것은 혁명적 당의 생명으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보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었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친애하는 동지, 당이라는 삼위일체적 틀속에서 북한인민은 개인(개성)도 가정도, 종교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정치와 사회는 일당독재에서, 일인독재, 부자권력승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Havel이 얘기하는 가장 극도의 변태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주체사상은 획일적인 이데올로기의 典型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Weber 그리고 그의 현대적 變形이론으로서의 Janos의 이른바 상투화·퇴화이론도 어느 정도까지는 북한정치·사회의 인식에 적실성을 갖는다. 유일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계속 약속하는 구세주적·구원론적 상징성을 갖고, 밤낮없이 부르짖고 또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를 끌고가는 당과 정부 기타 북한 권력엘리트는 관료화, 상투화과정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밟아오게 됨으로써 혁명적 이상과 혁명집행자(권력엘리트)의 반혁명적 현실의 괴리의 골이 더욱 커지고 그러한 현재적 잠재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Spencer의 혁명적 호전성전략과 발전전략개념도 오늘의 북한정치·사회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국방비를 지난 수십년간 국가경제의 1/4이상 투자하고

100만이 넘는 정규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적어도 이제까지는 전형적인 혁명적 호전전략형 국가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sup>35)</sup> 그러나 모택동 사후 등소평체제하에서 시작된 일당공산당주도하의 개방·개혁정책과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舊 소련·동구 공산권체제의 붕壞, 남한 북방정책의 성공, 남북한 경제성장에서의 남한의 결정적 우위는 북한 권력엘리트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혁명적 호전성과 새로운 발전전략에로의 전환과 개발이라는 갈림길에서 뚜렷한 선택을 유보한 채 엉거주춤 임시방편적 적응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舊 소련·동구권의 공산체제 解體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An Ongoing Process)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진행과정의 기간, 형태, 궁극적 결과도 나라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공산정권이 붕壞한 다음 날 프라하의 한 슬로건이 “폴란드-10년, 헝가리-10달, 동독-10주, 체코슬로바키아-10일” 여기에 “루마니아-10시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붕壞의 속도도 체제변혁의 형태도 모두 다르다.<sup>36)</sup> 공산붕壞과정의 실증적 체험에서 우리는 몇가지 가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하나는 공산국가라도 과거에 민주정치の実천경험이 있는 나라, 또

35) 북한의 군사력의 한 평가로는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London: IISS, 1990), pp. 164~165 참조. 북한의 GDP는 1987년 \$45.54 billion으로 추정되고, 1989년 국방예산은 \$4.17 billion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병력은 1,040,000명이며 그 중 육군이 930,000명으로 기록되었다.

1962년 4월 8일부터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9기 3차 회의에서 1992년도 국가예산이 395억 92만원(1원=한화 390원)으로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1.6%인 45억 원으로 국방비 8%였던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국일보」, 1992.4.9.

36) Timur Kuran, *op.cit.*, p. 42.

그 경험이 많은 나라일수록 공산정권으로부터의 탈피와 민주화·자유화에의 탈바꿈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순조롭고, 그런 전통이나 경험이 부재할수록 진통과 시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를 西歐의 급진적 민주주의 전통에서 나타난 지적 산물이라고 가정한다면, 마르크스주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비민주주의적 실천의 갈등이 공산당내의 異見의 지속이었다는 Wiatr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지적 전통과 유산이 있는 나라의 공산주의체제의 崩壞와 이러한 지적 전통이 부재한 나라에서의 그것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sup>37)</sup>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 西歐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일수록 민주화·자유화과정이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문화적 전통, 특히 종교적 전통이 같은 나라일수록(보기를 들면, 기독교권 특히 천주교권과 희랍정교도, 회교도, 기타종교 등) 종교의 뿌리가 약한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산주의체제에의 반체제저항이 강했고 또 공산주의로부터의 탈피도 신속했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역사, 문화, 종교, 지리, 지적 전통 등도 공산체제 崩壞, 공산체제가 지속되는 현상에의 분석요인이 될 수 있다. 이들 차원에서 보더라도 현 북한공산정권의 경우, 동구나라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의 지적 전통도 민주주의 실험의 역사도 부재하고 오직 칼 비트포겔(Karl Wittfogel)의 持論인 水耕에 의한 농업에 기반한 이른바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sup>38)</sup>만이 역사적, 지적

37) Jerzy J. Wiatr, "Political Science and Perspectives of New Democracies," Paper delivered at the XVth World Congress of the IPSA, July 21~25, 1991, Buenos Aires, Argentine.

유산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문화와 종교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질서의 전통과 근원이 그리스·로마와 서양유태교·기독교문명에 있다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유교권, 불교권에 속하며 기독교는 훨씬 뒤에 찾아온 상대적으로 전통의 뿌리가 약한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구미 나라들과 북한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물론 西歐민주주의 전형과는 다르지만 2차대전 이후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을 감안할 때, 나아가서는 민주화·자유화과정의 진통과 시련 속에 있는 한국, 그리고 뒤늦게나마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대만을 상정할 때, 여기서 제기된 민주주의사상의 부재, 기독교문화·문명의 상대적인 빈곤, 西歐민주주의의 지리적 거리, 민주적 정치전통과 역사의 빈약이 반드시 북한의 공산체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권력엘리트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북한공산체제 내구력을 키우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분단이라는 한반도가 안고 있는 특수상황 역시 북한권력엘리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정권유지, 권력의 합법·합리화, 체제내구력을 위해 이용되어 온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제까지 북한엘리트는 남한 “과소정권”과 미제국주의의 전쟁위협과 침략이라는 이른바 위협의 가정(The Premise of Threats)을 북한주민 통제·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고(보기를 들면, 민주조선, 1991년 11월 2일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반대로 그러한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

38) Karl Wittfoge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자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인민을 파쇼정권으로부터 해방 시키겠다는 이른바 해방의 약속(The Promise of Liberation) 전략을 역시 북한주민의 집단적 노력동원 나아가서는 주민통치·통제수단으로 삼아온 것이다(보기를 들면, 로동신문, 1991년 11월 12일자의 “남조선에서 반미투쟁은 더 크게 터질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탈핵 새국제질서하에서 북한의 종래의 위협가정전략이나 인민해방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효용체감의 법칙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한체제는 중국, 베트남, 쿠바와 함께 마지막 남은 공산당 집권체제다. 그러나 중국은 모택동 사후, 베트남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스로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북한과 쿠바는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고 金日成은 1992년 신년사에서 외친다. 그의 외침이 생동감, 활기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고 북한 나름대로의 체제개혁·개방의 방안을 강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확대되고 있는 것도 감지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공산당집권국가들, 특히 북한도 이미 崩壞·와해과정을 거쳐 체제변신을 겪고 있는 舊소련·동구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걸을 수밖에 없는가? 공산당정권의 패망은 필연이요 시간문제인가? 아니면 舊소련·동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가게 되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런 여러가지 기초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만족할만한 해답은 아직 없다. 다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정책과 체제의 향방, 국내적으로는 金日成의 권력퇴장(죽음이던 은퇴이던 실권이던), 경제실정, 남한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성, 일본·미국의 역할 등이 위의 질문에 대

한 해답의 중요한 변수들임엔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 4. 북한권력엘리트 변동상황의 분석과 평가

위에서는 구소련·동구권에서 집권공산당정권이 왜 崩壞했고, 역으로 북한·중국·베트남·쿠바 등에서는 왜 아직도 공산당 일당독재가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점검해 보았다. 다음은 지난 몇년 사이의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변동·변화과정을 눈여겨 살펴봄으로써 두드러진 현상을 포착하고 또 앞으로의 전략적 展望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金日成정권이 전형적인 전체주의 공산독재체제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이 전체주의 지도자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델로 군림해 오고 있다는 것이 먼저 지적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은 현재 크게는 두개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부자권력세습과정의 가속화·공고화·공식화이고, 대외적으로는 對남한, 對일본, 對미 대화과정을 통한 경제적 난국의 탈피, 부자권력계승의 묵시적·현시적 인정, 외교적 고립의 극복, 나아가서는 국제적 위상의 제고를 얻는다는 것이다. 부자권력 세습과정은 金日成과 그의 측근 핵심세력이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면밀히 추진·진행시켜 온 장기적인 부자권력장악의 기반조성, 조직사업이다. 1973년 2월 시작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실무지도자로 金正日이 등장하고, 같은 해 9월 조선로동당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그의 삼촌 김영주의 자리인 조직·사상담당비서로 부상하고, 다음 해인

74년 2월 조선로동당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추대되었고, 80년 10월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에서는 金正日의 당내지위를 공식화했다.<sup>39)</sup> 민주조선 12월 24일자에는 새로 발간된 조선로동당력사(조선로동당출판사)를 소개하면서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金正日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당과 혁명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쓰고 있다. 金正日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를 고비로 사실상 제2인자로 부상했고, 1991년 12월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권력승계의 막바지에 이른 셈이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1992년 1월 7일자는 1면 첫구석에 “위대한 수령 金日成”만이 항상 소개되는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金正日동지”란이 등장한 것이나 金日成소식 밑에 金正日소식이 실리던 관례를 깨고 같은 위치에 金日成은 왼편, 金正日은 오른편에 실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정무원기관지인 민주조선도 마찬가지로 부자기사난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公式적으로도 金正日은 인민군최고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조선로동당 정치국상무위원으로 金日成 다음으로 오진우와 함께 자리잡고 있고, 비서국에서도 역시 金日成총비서 다음으로 당사업전반 담당비서이고, 15인 조선로동당 군사위원회에서도 金日成위원장 바로 밑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제2인자로, 더구나 오직 군경력이 전무한 민간군사위원으로 윗자리에 앉아 있고,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직속산하

39) 최근 북한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분석으로는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3권1호(1991. 봄), pp. 9~39; 정대규,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동아연구」 제23집(1991. 12), pp. 44~75 참조.

기관인 국방위원회에도 위원장 金日成 바로 밑에 제1부위원장으로 군림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金正日이 명실공히 북한 권력의 제2인자로 지위를 굳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의 지위가 얼마나 튼튼한 것인가? 그의 아버지의 後光 때문이며, 그 밑받침이 사라지면 그의 지위도 쉽게 무너지는 ‘모래위의 집’일 뿐인가?는 북한전문가나 학자들간에 異見이 있다. 金日成 사후 또는 자의·타의에 의한 권력퇴장 후 金正日의 권력수명이 “3분에서 3년”으로 展望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반추해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세가지 문제를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지난 몇년간의 북한권력핵심세력의 변동상황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이다. 또 하나는 金日成과 金正日의 권력장악과정<sup>40)</sup>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적·전략적 시사점을 찾는 작업이다. 끝으로 북한의 대화과정—對남한, 對미, 對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몇가지 제언이다.

### (1) 북한핵심권력의 變動分析

부록 I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의 핵심기구의 하나인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의 경우 1980년 6차 당대회때 19명에서 1992년 2월 현재로 16명으로 3명이 줄었다. 1980년 당시 위원 가운데 최 현, 오백룡, 전문섭 등 抗日빨치산 출신은 사망했고, 그뒤 2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인물은 백학림, 이을설, 주도일, 이두익, 조명록, 김일철, 최상욱, 오룡방 등 8명이고, 탈락

40) 최근 국제정치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소개된 양승합,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권력승계 비교연구”라는 논문에서 많은 시사점과 비교들의 간접적 도움을 받았음을 밝힘, 1992년 3월 19일 발표.



된 자는 오극렬, 김철만, 김강환, 태병렬 등 4명이다. 1990년 이후 1992년 2월 현재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서 탈락된 사람은 오극렬, 전문섭, 김강환 등 3명이고, 새로 위원이 된 사람은 최광, 이하일, 김익현 등 3명이다. 몇가지 두드러진 특성은 현당군사중앙위원의 경우 金日成과 같은 抗日빨치산이 16명 가운데 4명(金日成, 오진우, 백학림, 최광)뿐이고, 非군인인 金正日을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위원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고 만경대혁명학원 졸업후 舊소련에서 군사교육·훈련을 받은 인물들이며 대부분의 출생년도가 1920년대로 현재 60代들이 돌보인다. 이는 후계자인 金正日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金正日 권력구축과정에 있어서 군지지기반을 만경대혁명학원 졸업생, 동창기준으로 쌓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sup>41)</sup> 출생지별로는 큰 특징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함경도 출신(오진우, 최광, 이을설, 이봉원 등)과 만주출신(백학림, 주도일, 이두익, 조명록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지적될 수 있겠다.<sup>42)</sup>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산하 국방위원회의 경우 1992년 2월 현재 10명으로 그 가운데 군출신이 아닌 金正日과 전병호만이 유일하게 민간인 위원이라는 것이 돌보인다. 특히 전병호(1925년 함북 출생)는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유학배경을 갖고 金正日 권력승계의 기초조직인 3대혁명소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

41) 김정일이 만경대유자녀학원 졸업생이 아니고 편입했다가 삼석인민학교로, 다시 평양제4인민학교 5학년에 편입했다는 등 여러 학교를 거친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이종석, “김정일의 통치력,” 『말』誌 1992년 2월호, p. 82 참조.

42) 북한권력엘리트의 함경도출신의 상대적 두각현상에 대해서는 양성철, *op. cit.*, pp. 37~107 참조바람.

같으며 당의 핵심권력기구인 비서국과 정치국 정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6명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金日成, 金正日을 빼놓고는 사실상 3인자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경우에도 1980년 10월 6차당 대회때 정치국 상무위원은 金日成, 김 일, 오진우, 金正日, 이종옥이었으나, 1990년 5월에 이르면 김 일은 사망했고 이종옥은 탈락했으며, 金正日이 3위에서 2위로, 오진우는 2위에서 3위로 자리바꿈을 했고 이 현위치는 1992년 2월 현재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나 정치국 위원은 1980년 6차 당대회때 19명이었고 후보위원은 15명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최 현, 임춘추, 오백룡, 전문섭, 허 담이 사망했고, 1990년 5월에 이르면 정위원 15명, 후보위원 11명으로 줄었다. 다시 1992년 2월 현재로는 정위원 14명, 후보위원 9명으로 약간 더 줄었다. 더구나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1992년 2월 현재까지 정위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金日成, 金正日, 오진우 상무위원과 이종옥, 박성철, 연형묵, 계웅태, 강성산 등 9명이다. 1990년 5월부터 추적하면 한성룡, 최 광, 진병호, 서윤석이 들어가고 서 철은 1990년 5월 탈락했다가 1992년 2월 현재 다시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치국 정위원 프로파일을 보면 14명 가운데 군출신(오진우, 서 철, 최 광)은 3명이며, 모두 抗日빨치산 출신으로 70代가 훨씬 넘어 자연도태과정에 있는 인물을 빼면 대부분 기술관료 또는 행정, 지방관료 출신들이라는게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징은 정치국 후보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선로동당 비서국의 경우는 1980년 10월 9명에서 1990년 5월에는 11명으로, 1992년 2월 현재도 11명이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현재까지 비서로 남아 있는 인물은 金日成, 金正日, 김중린, 윤기복, 황장엽 등 5명이다. 1990

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인물도 위의 인물외에 서관희(농업), 전병호(경제), 최태복(교육), 박남기(경제), 한성룡(경제), 김용순(국제) 등이다. 비서국도 역시 1980년 이후부터는 전문기술관료 一色으로 변한 것이 돋보인다. 정치국·비서국 겸직위원은 계응태(공안), 전병호(경제), 한성룡(경제), 최태복(교육) 등 4명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권력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정치국·비서국 겸직자는 金日成, 金正日 그리고 위의 4인 등 6인 지배체제로 압축될 수가 있다(부록 I <표-1>의 2, 3 참조).

조선로동당 전문부서의 경우도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 5월을 기준으로 해도 전문부서가 총 26부서 였는데 1992년 2월 현재 16개 부서(연락부, 조사부, 제1경제부, 제2경제부, 제3경제부, 제4경제부, 과학부, 교육부, 문화예술부, 청소년부, 기계공업부, 계획재정부, 화학부, 노동단체부, 보건부, 대외연락부 등)로 절반 이상이 철폐된 것이 주목된다. 2년 사이에 부서명칭에 변화없이 남아 있는 것이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국제부, 군사부, 총무부, 재정경리부, 농업부, 건설운수부 등 8부에 불과하다. 1992년 2월 현재 전문부서는 22개 부서로 줄어들었고 그동안 통폐합으로 신설된 부서는 민방위부, 통일선전부, 사회문화부, 작전부, 대외정보조사부, 경제계획부, 중공업부, 경공업부, 과학교육부, 근로단체부, 행정부, 청년 및 3대혁명 소조부 등이다. 특히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은 장성택으로 金日成의 딸(長女) 경희의 남편으로 사위가 된다. 1985년 7월 당중앙위 청소년부 제1부부장이 되었고 金正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큰 규모의 당전문부서의 통폐합 및 신설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첫째는 당기능과 역할을 줄이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둘째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어느 정도 적응하려는 조짐도 엿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의 친인척들의 권력주변의 득세가 계속 두드러진다. 金日成의 장녀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은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을 맡고 있고 근로단체부장인 김봉주(金日成의 從弟)도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고, 정무원 부총리 김창주(1923년 평양출생, 金日成의 從弟)까지 합치면 金日成권력의 Nepotism이 두드러진다. 이 밖에도 부주석인 박성철(1914년 함북출생)과 金日成의 從妹夫, 최고인민회의의장,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의장인 양형섭(1923년 생 제주출생)은 金日成의 從妹夫, 91년 死亡한 前외교부장 허 담도 종매부로 아들 金正日과 함께 친인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강양욱(1904-1983) 전부주석은 金日成의 外從祖父, 김동규, 이용무, 황장엽, 김병화, 강현수, 강희원, 장정환, 김중린 등도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다. 金正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불가리아대사), 김경진의 남편 김광섭(체코대사)도 현재로서는 권력 밖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로동당전문부서의 새인물들의 면모도 재미있다. 당선전선동부장인 김기남(1926년 강원출생)은 김일성대학·모스크바대학·로동신문의 주필을 했고, 간부부장 김영채는 체신·통신관계 기술전문경력자이고 군사부장인 이하일은 金正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민방위부장인 김익현은 전정무원 인민부력부 부부장을 지낸 중장이며, 통일선전부장은 윤기복(1926년 함남출신)으로 경기고 중퇴, 모스크바대학 유학경력을 갖고 있으며, 대외정보조사부장 권희경(1928년생)은 1972년, 1980년 駐蘇대사를 지낸바 있는 고참외교관료이며, 중공업부장인 한성룡은 기계공업·지방행정 전문관료출신이다. 경공업부장인 김경희는 64년 12월 로동당 신의주시위 위원장을 지낸 평북출신이

다. 기계공업부장인 전병호(1925년 함북출신)는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 유학경력을 가진 한성룡, 과학교육부장 최태복과 함께 지금 현재로는 조선로동당 정치국 정위원, 비서국 비서를 겸직하는 실세·실력자로 분석된다. 행정부장은 김시학(1923년 평남출생)은 모스크바대 유학배경을 갖고 73년 중앙방송위 위원장을 지낸 방송관계 전문관료인 셈이다. 이밖에 위에서 지적한 金日成의 종제 김봉주는 신설된 근로단체부장, 큰사위 장성택은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을 맡고 있다.

요컨대 위에서 지적한 당군사위원회 정치국·비서국과 마찬가지로 당전문부서도 친金正日계로 보이는 만경대-김일성대-소련(모스크바대)유학으로 연결되는 현재 60대 전문기술직 인물들과 金日成의 친인척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경우 1990년 5월과 1992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면 탈락자(조세웅, 염기순, 홍시학, 김기선)가 4명, 새로 등장한 인물이 4명(이길송, 현철규, 백범수, 임수만)이고 역시 金日成의 외사촌으로 알려진 강현수가 황해북도 당책임비서에서 평양시책임비서로 승진한 것이 돋보인다. 하나 특기해야 할 사실은 국가주석하 중앙인민위원회의 9개 도당책임비서와 3개시(평양특별시, 남포, 개성직할시) 등 12개 당책임비서가 자동케이스로 위원이 되고, 주석·부주석(이종욱, 박성철) 역시 자동케이스(Ex-officio members)로 보면 유일하게 한성룡이 들어있는 것이 돋보인다. 국방위원회의 유일한 민간인 위원인 전병호와 함께 한성룡도 또한 모두 조선로동당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를 겸직하는 현재로서는 권력핵심의 실력자인 것으로 보인다. 정무원총리의 경우 연형묵은 정치국위원이나 1980년 6차 당대회 당시의 비서직은 빼앗긴 절름발이인 셈이다. 부

총리의 경우 1982년 4월 7차 정무원은 13명이었고, 86년 12월 8차 정무원은 9명으로 역시 숫자가 줄었고, 1990년 5월 9차 정무원도 10명이었다. 1992년 2월 현재 부총리는 11명으로 한명 더 늘어났다. 부총리 가운데 82년 7차 정무원 이래 지금까지 10년 부총리직에 있는 인물은 홍성남, 홍시학(8차, 9차에서 탈락), 김창주, 김복신 등 4명이다.

정무원 전무부처의 경우 인물변화는 화학공업부의 김 환이 주길본(前홍남비료연합기업소 로동당책임비서)으로 대체되고, 교통위원회의 이길송이 리용무(前인민군총정치국 국장, 抗日유격대출신 상장)로 대체되고, 농업위원회의 백범수가 김원진(前농업과학원 부원장)으로 대체되었다. 전자자동화위원회 위원장 백세운은 탈락하고 그 자리로 김창호(前체신부장)가 옮겼다. 체신부장에 김창호 대신 김학섭(제5차 내각때 체신부장)이 다시 등용된 것이다. 당의 전문부서와는 달리 부서의 통폐합이 거의 없는 것이 눈에 띄고, 또 90년대 이후 부서장의 변동도 미미한 것이 두드러진다. (부록 I <표-2> 행정기구 인물변동 참조)

끝으로 부록 I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북한권력핵심기구의 인물변동 프로파일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은 앞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대부분이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舊소련유학 등을 거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나이로 봐서 1920년대가 대부분이고 보면 金正日보다는 거의 20년 연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의 권력승계 성패를 제쳐놓고도 적어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은 舊소련유학과 내지는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 출신 엘리트들의 세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金日成 비호와 後光하에서 金正日 권력승계과정

이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 또는 구소련유학과(대부분 1950년대 유학)로 이어지는 지지기반이 金日成 사후 또는 권력퇴장 뒤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인가는 크나큰 의문으로 남는다.

## (2) 金日成-金正日 권력장악과정 및 프로파일 비교

부록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日成-金正日 부자의 권력장악 과정과 프로파일에는 본질적인 차이점과 대조성이 크게 두드러진다.

첫째로 金日成 권력장악 당시와 金正日 권력승계 시기의 국내상황의 대조성과 본질적 차이점이다. 金日成 권력장악 초창기를 1945년 9월부터 1948년 9월까지 그가 내각수상 취임까지로 보면 그 시기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해방 3년시기’로 극도로 혼란·혼탁의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또 2차대전 종전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고 38선 이북엔 소련군이 점령하여, 주둔 소련군의 정치후견과 간여가 팽배할 때였다. 또 이 시기는 金日成이 집권과정에 동시다발적으로 創黨, 創軍, 建國이라는 어려운 3대과업을 치루어야 했다.

한편 金正日의 경우는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70년대초 주로 1973년 2월을 권력승계의 첫 시작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본인 북한전문가인 사카이 다카시(坂井隆)는 이에 異見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는 북한권력의 요소를 군사력, 경제력, 여론을 지배하는 힘으로 나누고 金正日이 당중앙위원회에 근무(1964년 4월)한 지 8개월뒤 1964년 12월 8일 북한극영화촬영소에서 그의 영향력을 보인 때로 거슬러 올라 간다. 특히, 사카이는 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가 열린 1967년 5월에 이른바 ‘甲山派’ 숙청에 있어서 선전부문에서 영향력

행사를 본격화했다고 주장한다.<sup>43)</sup>

따라서 金日成은 1945년 권력장악기에 33세였고 金正日是 1972년에 30세이고, 최근 출판된 조선로동사의 1974년을 기준으로 하면 金正日도 그의 아버지와 같이 32, 33세가 된다(그의 생일을 1941년 또는 1942년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사카이 다카시의 기준으로 따지면, 즉 1964년에 金正日是 21세나 22세, 1967년엔 25세나 26세의 젊은 청년이었다. 사카이 다카시의 주장은 金正日이 북한권력에 데뷔한 시간과 아버지권력을 승계하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은데서 오는 것 같다. 더구나 1970년 조선로동당 5차 전당대회 때까지만 해도 당서열 6위로 부상했고 남북조절위원장이던 金日成의 實弟 英柱가 승계자로 부상했다는 說이 난무할 정도였으므로, 金正日이 부상한 것은 73년으로 잡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 같다. 아무튼, 1970년대초부터 권력승계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국내실정은 경제적으로는 극도의 침체와 궁핍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 외교적으로도 고립화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팎의 불안, 위협요인 때문에 체제수호, 방어적 성격이 짙다.<sup>44)</sup>

둘째로 국제환경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金日成이 권력장악을 하는 시기는 2차대전 직후로 소련이 전승국인 동맹의 일원으로 동구를 강점하고 한반도 38선 이북을 점령하는 등 공산주의 확장

43) 坂井隆, “김정일의 권력기반—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서울: 동화연구소, 1991), pp. 13~57 참조.

44) 최근 북한정세분석평가로는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세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확장세에 맞물려 공산·자유진영의 양극적 대결구도인 이른바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초창기였고 분단독일과 함께 분단 한반도는 당시 미·소를 주축으로 한 전후 냉전대결·갈등구조의 실험장이었다. 그러나 金正日 권력승계를 시작한 1970년대 초는 이른바 대땅뜨期로 일시적으로나마 미·소 및 공산·자유진영간에 긴장완화·화해무드가 일어나는 시기였다. 더구나 金正日이 수권의 막바지에 이른 오늘의 현실은 탈냉전·탈공산·탈핵이라는 지구적 새국제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권력장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탈린의 소련이 이제 '역사'가 되고, 舊소련연방은 사실상 解體되고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 공화국이 느슨하게 만든 이른바 독립연합(CIS)도 解體위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金正日의 권력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外勢는 없다. 중국이 싫든 좋든 부자권력승계를 묵과·묵인하는 자세이지만 현재 열리고 있는 중국공산당 全人大 5차 회의, 1992년末의 당 14기 전국대표대회(14全大會) 등에서 개혁세력의 권력장악이 展望되고 있는 상황에서 金正日에겐 중국이라는 마지막 남은 실오라기가 훨씬 더 약하고 흔들린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더구나 구소련의 핵심국가인 현 러시아는 옐친정권이 건재하는 한 金正日에겐 위협의 대상이지 협력의 근원은 아니다.

세제로 金父子의 성장배경, 경력, 권력장악의 후견자, 개성, 이념 등이 크게 다르다. 金日成은 현 만경대농가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그의 아버지의 평양승실전문학교 출신일 정도로 윤택하고 그 당시로는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도 富農家집안으로 특히 당시 기독교사상에 젖은 집안이라는 것이 강조될 수 있

다.<sup>45)</sup> 金日成은 그의 아버지(김형직, 1894~1926)를 따라 만주로 이주했고, 그가 마지막 다닌 학교는 만주길림의 중국계 육문중학 중퇴(1929?)이고 그가 14살때 아버지를 잃었고 동생 철주(1916~1935)는 公式적으로는 그와 같이 抗日빨치산대원이었으나 전사했고, 하나 남은 동생 영주(1922~현재)는 1970년초 이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편 金正日은 그가 7살 되던 해인 1949년 어머니(김정숙, 1917~1949)가 사망했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친동생(러시아어로 유라)과 누이(경희)가 있고 그의 계모 김성애로부터도 김평일(현 주불가리아 대사), 김영일, 김경진 등 이복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正日의 출생지도 소련영내 병영으로<sup>46)</sup> 알려졌다으나 金正日 후계구축과정의 신화만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금은 백두산밀영<sup>47)</sup>을 그의 출생지로

45) 특히 김일성외가의 기독교영향에 관한 분석은 Sung Chul Yang, *Korea and To Regimes*(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 1981), pp. 32~41 참조.

46) 김일성이 소련령내 하바로브스크 근처에 소재한 소련 극동군사령부산하 국제단위 88사단의 소령계급으로 보로쉬로프캠프와 오케안스카야 야전학교에 있었고, 그 때 소련이름 유라(정일)와 슈라(평일, 1944년생)를 낳았으며, 슈라는 평양에서 1947년 7월 수영하다 죽고, 딸 경희는 평양에서 낳았으며, 그의 모친 김정숙은 1949년 9월 22일에 애기를 낳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한 것은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1~52; Sung Chul Yang, 위의 책, pp. 376~389 참조. 최근 한 논문에선 김정일이 하바로브스크 근처 비야츠크에서 태어났다고도 한다. 이종석, “김정일과 통치력,” 『말』誌, 1992년 2월호, pp. 82~83.

47) 보기를 들면 『로동신문』, 1991년 2월 1일자 1면. 또 일체화 김일성이 백두산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일 당시 ‘항일전사’들이 그 곳 밀림의 나무껍질들을 벗겨낸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숙, 김정일을 찬양하는 구호들을 새겨넣은 ‘구호나무’를 1987년 5월 발견한 이래 수천 그루를 발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유영구, “김정일, 그는 누구인가?,” 『월간중앙』 1989년 1월호,

聖地化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金日成의 생가 만경대를 성지·성역화한 것처럼 1980년대부터는 백두산밀영을 성지·성역화하는 작업과 전설영웅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년기 성장과정도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金日成은 부모와 함께 일제시대에 수없이 많은 이주·이사를 경험한 극도로 불안정한 가정생활 속에서 자랐다면 金正日은 출생과 성장초기를 제외하면 북한최고권력자의 장자로 ‘황태자’의 위상을 지닌 채 자라난 것이다. 또한 그는 혁명유자녀 및 유가족자손이 가는 ‘귀족’학교인 평양만경대혁명학교 등을 다녔고 곧이어 김일성종합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했으므로 나름대로 정규교육과정을 거친 셈이다.

金父子의 경력도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金日成은 抗日빨치산 게릴라활동을 적어도 10년 남짓<sup>48)</sup>한 것은 사실이다. 해방후 또한 그는 사실상 북한의 권력제1인자로서, 세계 최장기집권자로서, 온갖 위장신화와 개인숭배조작을 연출하면서 이제까지 군림해 왔다. 반면 金正日은 그러한 아버지의 後光과 비호하에 마치 ‘황태자’와 같이 살아 온 것이다. 더구나 金日成의 경우, 초기 집권에 있어서 소련점령군의 후견과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스탈린이 그의 권력의 시혜자가 된다. 보기를 들어보자. 1946년 8월 28일~30일 평양에서 열린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소련의 붉은군대가 “조선민족의 해방군”<sup>49)</sup>이라고 감사하고

---

pp. 436~451.

48) Dae-sook Suh, *op.cit.*, pp. 37~47. 서대숙 교수는 1937~1940년간 항일게릴라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그가 거느린 게릴라는 150명 정도로 추정한다. 그 가운데 북한정치에 참여한 숫자는 80명, 북한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숫자(대부분 무교육자, 늙었거나 신체장애인)는 4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Dae-Sook Suh, *op.cit.*, 부록 1과 2를 참조바람.

“위대하신 스탈린 대원수”<sup>50)</sup>를 우리러 받들었다. 1948년 3월 27일부터 4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북조선 로동당대회에서도 역시 “스탈린 대원수”에게 올리는 메시지에서 “당신과 당신의 인민과 당신의 영예로운 소련군대는 오랜 노예의 생활에서 신음하던 우리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켰다”<sup>51)</sup>고 부르짖는다. 1990년대에 이르면 해방과 소련 붉은군대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백두의 혁명정신”과 “조선혁명”, “주체혁명완성”만이 크게 강조된다. “백두산 밀영을 찾는 답사자들과 참관자들은 사령부의 귀틀집을 감동깊히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抗日대전의 나날에 백두산밀영을 조선혁명의 중심적인 령도거점으로 하여 조국광복의 력사적 승리를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히 체득하고 있다”<sup>52)</sup>고 외친다. 더구나 백두산 밀영은 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고향집”이며 “세대와 세대를 거쳐 줄기차게 이어가려는 우리 청소년들과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사령부 귀틀집 앞에 휘날렸던 붉은기”<sup>53)</sup>를 휘날린다.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스탈린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조선민족의 해방자이며 후원자이고 은인이며 벗인 위대한 스탈린대원수 만세!”<sup>54)</sup>를 외치던 金日成이 이제는 인민이 한세대에 두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백두의 혁명정신의 창조자라

49)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1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 18.

50) *Ibid.*, p. 19.

51) *Ibid.*, p. 26, p. 111을 참조.

52) 「로동신문」, 1991년 2월 1일자 1면.

53) 「로동신문」, 1991년 2월 19일자 사설.

54) 「조선로동당대회집」 제1집, p. 19

는 것이다.<sup>55)</sup> 더욱 놀라운 사실(거짓말)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할 “위대한 령도자”는 金日成 하나가 아니고 金正日까지 둘이 되어가고 있는 선전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1992년 1월 3일)은 남녘인민들 이름을 빌려 “동서고금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한민족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의 출현은 드물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희세의 위인을 두분이나 모셨으니 이야말로 우리민족이 누리는 또하나의 대행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족의 태양 金日성장군님과 주체의 향도성 金正日선생님께서 파썸폭압에 얼어붙은 이남땅에도 민주의 새봄,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리라”고 뒤집어 씌우기식 날조선전을 하고 있다. 요컨대 金日成의 권력장악에 있어서 후견자가 스탈린 또는 당시 소련점령군의 치스차코프, 로마넨코, 슈티코프 등이다.<sup>56)</sup> 金正日是 그 후견자가 金日成과 최용건(死), 김 일(死), 오진우, 최 광 등 주로 抗日빨치산출신 주변 핵심인물이다.

金父子의 개성은 알 수가 없다. 알려진 바로는 金日成은 분명히 활달하고 사교적이나<sup>57)</sup> 아들 정일은 그늘에 가려져 있다. 그의

55) 「로동신문」, 1991년 2월 19일자 사설

56) 소련군의 김일성 후견·막후정치에 관해서는 양성철 엮음, 「남북통일의 새로운 전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9), pp. 41~54; Dae-sook Suh, *op.cit.*, pp. 60~73 참조. 소련점령군 사령관은 Ivan M. Chistiakov 대장, 그의 참모장은 Valentine A. Penkovsky 중장, Nikolai G. Lebedev 소장, 사령관정치 고문은 Gerasim M. Balasanov 그리고 북한민간행정은 Andrei Alekseevich Romanenko 소장이 맡았다.

57) Sung Chul Yang, *op.cit.*, pp. 335~362 참조. 김정일을 알았던 신상옥과 최은희는 김정일을 “단순, 즉흥적, 독선적, 변화무쌍한 성격”이라고 증언했다. 신상옥, 최은희, “우리가 만난 김정일,” 「월간중앙」, 1989년 9월호, pp. 452~469 참조.

영상사진 또는 기타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보다는 내성적인 것같이 보인다. 그의 正體와 實相이 너무나도 많이 가려져 있어서 아직 그 인물·성격평가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부자가 모두 바깥세상을 잘모르는 “폐쇄 또는 쇠국적 인간”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金日成의 경우 해방전 중국만주, 소련령 시베리아에 체류한 것, 해방후 49년 정부사절단장으로서의 소련방문, 53년 소련방문, 중국방문, 54년 중국방문, 56년 소련·동구·몽고방문, 57년 소련방문, 58년 중국·월맹방문, 59년 소련방문, 61년 소련·중국방문, 65년 인도네시아방문, 75년 4월 중국방문, 5월 루마니아·알제리·모리타니·불가리아·유고 등 순방, 86년 소련방문, 89년 중국방문, 91년 중국방문 등 그의 바깥세계란 구공산권과 북아프리카에 국한되었다. 그는 非공산 서방세계를 모르는 반쪽세계의 視界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金正日은 더욱 위험스럽고 답답하다. 1983년 6월 중국공산당 총서기 호요방초청으로 중국비공식방문, 그뒤 중국을 한두차례 더 방문한 것뿐이다. 어린시절 소련령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6월 그의 여동생 경희와 함께 중국동북의 吉林省에 피신하여 52년 11월 그 곳에 옮겨와 있던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에 4학년 편입했고 53년 8월에 평양으로 돌아와 제4인민학교에 5학년으로 편입했고 그뒤 평양제일초급중학교를 거쳐 1960년 7월 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그가 고등중학교를 마친 뒤 1959년 동독항공군학교에서 1년 6개월정도 유학생활동을 하고 1960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2학년에 편입했다는 것이다.<sup>58)</sup> 이렇게 보아도 그의 바깥 세계는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욱 좁아진다. 기껏해야 중국, 소련, 동구 한두 나라를 밟아온 '쇄

국적'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이러한 시계는 국제화, 개방화, 민주화시대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가예측적인 것이다.

金父子의 권력장악형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위에서도 지적되었지만 金日成은 소련을 업고 권력을 잡은 短期型(1945~48)이고 더구나 그에겐 그와 生死苦樂을 같이한 80여명의 抗日빨치산동료가 권력핵심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었으나, 아들 정일은 아버지의 後光과 후원, 아버지 동료인 빨치산원로의 지원, 그리고 정일 주변인물들—만경대학원 선·후배와 金日成종합대학 선·후배—의 도움을 얻고 있는 長期型 권력승계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더구나 金正日 주변인물들은 권력의 특혜, 특권을 서로 나누는 재미는 갖고 있으나 金日成의 빨치산동료들과 같은 '혈맹'관계가 아니므로 쉽게 이탈, 배신, 모반의 가능성이 큰 인물들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또한 金日成은 그의 권력장악후 권력투쟁과정에서 그의 정적들의 유혈숙청과 무자비한 제거작업을 불사했으나, 金正日의 경우는 그러한 김-김권력의 적극적 반대세력이 제거·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 권력장악의 반대세력은 설령 팽배하더라도 그것이 표면으로 부상하거나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숨겨진 집단선호(Hidden Collective Preference)같은 것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金日成의 권력장악 당시의 지지기반은 국내적으로는 빨

58) 유명구, *op.cit.*, p. 440. 이종석은 최근 「말」誌(1992년 2월호)에서 1990년 9월 金日成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를 입학했고, 1964년 봄에 졸업했다고 쓰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의 동독유학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의 글 “김정일과 통치력”을 참조바람.

치산전우, 국외에선 소련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기타 좌익정당·단체들의 연합전선적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金正日의 경우는 조직관리강화를 위한 3대혁명소조, 사상강화를 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생산독려를 위한 “속도전”(74년 2월), 80년대 “속도창조운동”(82년 7월), “200일전투”, “90년도 속도창조” 등을 통해 그의 주도권과 권력기반확충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부자승계는 외국에서는 큰 성원없이 중국의 경우 별로 탐탁치 않은 ‘목인’ 정도의 도움만을 받고 있는 정도다.

金父子의 권력장악의 합리화·정당화도 다를 수밖에 없다. 金日成의 경우는 친소정권수립, 마르크스-레닌이념의 공식화, 통일실현(미제, 일제잔재세력의 축출과 친일친미세력의 제거)을 위한 북반부혁명기지구축, 抗日무장투쟁세력의 권력기반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金正日은 金日成주체혁명사상과 전통의 지속강화, 반金日成·金正日세력, 반김체제세력의 사전예방·제거, 金日成혁명위업의 계승발전, 대내·대의 체제위협세력과 요인의 제거 및 북한체제의 고수, 보호 등을 들 수 있겠다.

金父子의 권력장악전략에 있어서도 金日成은 단기적으로 그의 抗日무장투쟁경력(“영웅”)을 홍보했고, 그의 공산당경력도 홍보하고 신속히 소련점령군의 후견, 지지, 비호를 구축했으며 그의 抗日빨치산전우들을 당·군·정치조직핵심에 침투시켜 권력기반저변확대에 기선을 잡고 더구나 파벌권력투쟁에서 利夷制夷전략을 활용했고, 장기적 전략적 이득을 위해 단기적 전술적 양보를 베푸는 정치관용을 과시했으며, ‘인민’과 ‘적’의 개념을 그의 권력투쟁과 권력기반확충에 최대한 활용한 것이 돋보인다.<sup>59)</sup>

반면 金正日의 경우는 장기적 전략으로 유아교육에서부터 金



日成-金正日부자 후계체제의 정당성, 합법성을 강조하고 만경대유  
 자녀학원-김일성종합대학 동창중심의 세력과 조직강화를 꾀하고 3  
 대혁명소조, 3대혁명붉은기쟁탈운동, 80년대 속도전, 90년대 속  
 도전 등 대중조직운동을 통해 반체제세력을 제거·숙청함과 동  
 시에 친金正日계 기초조직을 확대·확충하고 기존조직에 침투  
 감시·통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金父子의 권력갈등구조나 형태도 다른 것 같다. 金日成의  
 경우는 다른 권력세력들에 비해 그 조직이나 숫자에 있어 열세  
 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강한 파벌들-조만식 등 민족  
 세력, 박헌영 등 국내파·남로당파 공산세력, 김두봉, 무 정 등  
 연안파 등-연합전선전략으로 우익민족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  
 했고, 그 뒤 파벌중심의 권력갈등구조를 낳는 정치틀을 짜게 되었  
 다. 金正日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파벌간·세력간 권력갈  
 등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권력장악과정을 헤쳐나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잠재적·현재적인 권력기반중심 갈등 또는 정책노  
 선중심 갈등 또는 자질중심 갈등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  
 등이 노골화·침예화하는 것은 절대적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金日成이 권좌에서 죽음 또는 자의·타의에 의해서 물러날 때가 아  
 닌가 한다.

요약하면 金日成과 金正日의 권력장악은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상극적인 것이 많고 또 그러한 이유와 근거 때문에 金正日의 권력  
 장악 또는 그 성공에는 많은 불확실성과 불가예측성이 도사리고 있

59) 김일성의 권력장악과정에 대한 심층분석은 Such Chul Yang, *op.cit.*,을 참조:  
 Dae-sook Suh, *op.cit.*, Part II, Part III를 참조.

다.

### (3) 남북한관계개선과 전략

1991년말을 고비로 남북한간에 적어도 관계제도화, 대화 및 접촉 공식화를 위한 형식적인 많은 진전이 있었다. 12월 31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이 그것이다. 1992년 2월 7일엔 남북고위급회담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2월 20일)에서 약속한 대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그리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일단 형식적으로는 발족했고, 4개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남북관계접촉의 제도화와 대화의 형식화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뚜렷한 해답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큰 실책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남북관계접촉의 제도화, 대화의 공식화·정례화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 북한의 金日成-金正日 부자후계체제를 직·간접으로도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잠재 또는 현재하는 개혁·개방세력에 숨쉴 구멍을 마련해 주고 새로운 길을 트는 작업의 一環인가? 만약 전자라면 그것은 북한의 개혁·개방가능성을 배제·억제하는데 남한측까지 동조하는 정책적·전략적 과오를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현 부자세습 독재체제하에서 천부인권과 자유의 박탈은 물론이거니와 경제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2천만 북한주민에게는 도덕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후자라고 가정한다면 남한의 對北전략은 지금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정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남북한관계개선 및 궁극적 통일실현을 위한 새접근전략에서(궁극목표는 자유민주주의의 틀에서의 통일이라 하더라도) 당면과제가 金父子세습의 반대, 반체제 개혁·개방세력의 두둔 및 확장을 위한 여건조성에 있다면 적어도 몇가지 접근전략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남북한 현안문제, 장애요인을 총점검하고 그 중요성의 경·중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둘째로 그러한 평가작업과 함께 정책추진집행에 있어서 先後順位(Priority Setting)를 결정하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셋째로 그러한 순위가 결정되면 정책집행속도의 완급을 결정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현안의 경·중, 선후순위, 추진집행의 완·급에 근거해서 對북한 접근전략의 노선결정-강경 대 온건-도 이루어질 수 있다. <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북한에 두개의 정치세력-강경·수구세력과 온건·개혁세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나아가서는 강경수구세력이 현재 집권세력이고 온건개혁세력이 현 집권세력의 대체가능세력이라고 가정할 때 남한의 對北전략은 강경일변도로 추진하는 경우는 북한의 강경·수구세력의 주장을 강화시키고 온건·개혁세력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

<도표-1> 남북한 관계개선 및 궁극적 통일실현을 위한 접근전략

남한 전략	북한강경·수구세력(집권)	온건·개혁세력(잠재·현재)
강경일변도 접근	+	-
온건일변도 접근	+	-
강·온선별 접근	-	+

마찬가지로 남한의 對北전략이 온건일변도로 나아갈 때도 역시 북한의 강경·수구세력의 전략을 합리화 강화시키고 북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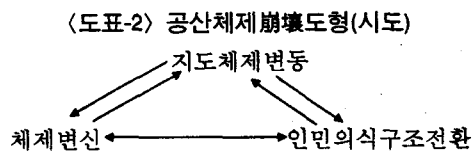
온건·개혁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측이 추구하는 당면과제(보기를 들면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 당근과 채찍을 놓고, 채찍만을(핵시설 파괴불사) 강행하는 경우도, 당근(모 남한재벌의 성급한 봉제공장 등 설치)만을 서두르는 것도 북한의 현 강경·수구세력만을 도와주게 된다. 어느 서방외교관의 말을 인용하면, “입가심을 위한 안주 정도를 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밥상을 미리 내놓는 어리석음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또는 미 등 동맹국과의 무모한 강경접근이 북한의 강경·수구세력을 더욱 폐쇄·호전적 정책을 고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남한의 무조건·무절제한 온건·양보접근은 북한의 강경·수구세력의 대남혁명전략의 환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겠다. 따라서 원칙에는 의연하고, 협상에는 설득타협과 양보 그리고 상호입장 고수전략보다는 상호이익 협상전략<sup>60)</sup>을 활용하며 북한의 긍정적·건설적 행위에는 보다 긍정적 건설적 협조적 대응으로, 부정적·시대착오적 행위에는 의연하게 원칙을 지키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세련된 강·온선별전략이 요구된다.

두번째 질문은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북한의 현 집권체제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통일에 따르게 되는 ‘삶의 질’, ‘삶의 터’ 등 통일개념의 문제<sup>61)</sup>로 집

60) 입장위주협상전력과 이익중심협상전략에 관한 분석은 O. Stephenson, Jr. and Gerald M. Pops, “Conflict Resolution Methods and The Policy Proc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September/October 1989), pp. 463~473 참조.

61) 양성철, “통일은 왜 하자는 것인가?—남북한 체제통합과정의 접근전략,”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논문(1991년 12월) 참조.

약된다. 또 하나는 구소련·동구 공산집권붕壊와 동·서독통일과정에서 목격하는 바와 같이 집권공산당체제의 지도체제변동(Leadership Change)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다. 그러나 구소련의 경우 70여년, 동구의 경우 40여년 집적된 공산체제의 체제변동(System Transformation)은 훨씬 오랜 시간과 시련을 겪어야 하며 아직도 바로 그러한 구체제의 파괴(System Deconstruction)와 새체제의 구축(System Reconstruction)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더구나 한세대 또는 두세대에 걸쳐 집권공산당 일당독재체제하에서 세뇌·정치사회화된 인민들을 새사회의 민주시민 의식구조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른바 구의식구조의 탈피(Deprogramming)와 새의식구조의 형성(Reprogramming, Re-political Socialization)이라는 이중과정을 동시에 치러가야 한다(〈도표-2〉, 〈도표-2-a〉, 〈도표-2-b〉 참조).



〈도표-2-a〉 지도체제변동과정(시도)

변 동 기 간	지도체제의 특성
신 속	최고집권자 교체, 실각, 축출, 제거
단기 또는 중기	당내 과도기 지도체제 등장 및 수습
장 기	당내, 당외파단체 또는 반체제세력중심 개혁파 지도체제등장

요컨대 남북한관계개선은 무조건 서두른다고, 무모하게 양보한다고 되는 단순한 문제도 아니며, 더더구나 통일은 시간, 비용, 시

〈도표-2-b〉 체제변모·변신과정(시도)

단 계	체 제 변 신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체제 舊최고집권자 대체</li> <li>* 당내 과도기 지도체제 등장</li> <li>*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 회복 및 보장</li> <li>* 다당제·복수후보경선에 의한 자유총선</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권공산당 지도체제 解體 및 체제개혁</li> <li>* 새정당활동의 활성화 및 離合集散</li> <li>* 부분적 경제개혁실시, 私營化, 市場化시도, 私有財産權인정</li> </ul>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세력의 등장 및 집권</li> <li>* 舊공산당조직의 解體, 교체</li> <li>* 舊군부조직의 解體, 교체</li> <li>* 舊비밀경찰·공안조직의 解體, 교체</li> <li>* 舊행정·관료조직의 解體, 교체</li> <li>* 全面的 私營化, 市場經濟개혁시도</li> <li>* 사유재산권회복</li> <li>* 법제도 재정립</li> <li>* 국제관계 재정립</li> <li>* 경제체제 재조정</li> <li>* 인권보장사회</li> </ul>

련이 뒤따르는 어려운 거족적 과제이며 통제할 수 있는 통합과정은 最長化하고 통제가능하지 않는 통합과정은 最短化하는 정책전략의 개발과 통일前 통합과정의 현안문제·장애요인의 제거, 통일後 통합과정에서 오는 지도체제, 체제변신, 인민의식구조전환이라는 결코 간단치 않은 막중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sup>62)</sup>

62) Ibid. 참조.

## 5. 요약과 결론

이 글에서는 공산체제,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에 함께 사는 숙명적 관계에서 오는 남북한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기본적 질문을 던지고 가능한 한 그 해답을 찾고자 시도해 보았다.

첫째로 왜 구소련·동구권에서 공산당일당독재가 그렇게 쉽게 빠르게 崩壞했는가? 이를 '혁명적' 현상으로 보고 몇가지 혁명이론들—구조주의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상대적 박탈감모델, 選好僞裝 모델—등을 적용해 보았다. 그러나 폭풍을 설명하는 과학이론이 실제로 폭풍이 어디서·언제·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듯이, 혁명이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 혁명이론들이 정확히 예측·예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과 모델이 함축·포용하기에는 자연현상이나 정치·사회현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이론의 기능은 혁명가능상황을 분석하는 것이지 언제·어디서·어떻게 꼭 일어난다는 것을 점치는 일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동구·구소련에서의 공산집권체제 해체현상을 단순한 공산주의·전체주의차원이 아니고 정치발전론적 차원(Lucian Pye)에서, 모든 정치체제의 관료화·상투화(Weber, Janos), 역사적 발전전략(H. Spencer)에서 이른바 세계체제모델차원에서 보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화·이론화 분석작업도 살펴보았다.

둘째로 첫 질문과는 正反對의 의문이 가능하다. 구소련·동구권의 공산당집권체제의 崩壞·解體에도 불구하고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에서는 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끝내 일어나지 않

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문제일 뿐 똑같은 崩壞·解體과정을 가고 있고 갈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이들 나라들이 동구·구소련과 다른 역사(정신·지식사, 정치문화전통), 지리(동양과 서양), 문화(異質性), 경제(발전단계), 종교(유교, 기독교문화권) 등을 들어보았다.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비구공산권 공통점외에도 분단, 특유의 金日成-金正日 통치스타일, 통치수단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서 위의 혁명일반이론과 기타 정치·사회변동이론을 현 북한정치·경제·사회현실에 적용하고 그 적실성을 타진·분석해 보았다.

세째로 70여년 공산당사에도,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사상이나 기타 사회주의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부재, 이론부재의 유례없는 金日成-金正日 부자권력세습체제를 둘러싼 권력핵심인물분석과 나아가서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金日成-金正日 권력장악과정의 차이와 대조점을 비교·진단하고 앞으로 성공·실패가능성을 展望해 보았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북한이라는 사회는 아직도 사하로프, 솔체니친, 하벨, 바웬사는 차치하고라도 중국의 방여지같은 인물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치환경이 황폐하고 동토로 변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2월 28일 주로 소련북한망명정치인·외교관·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동경에서 선언된 “민주통일구국전선”(이상조, 박갑동, 유성철 등 13인)은 허약한 반김체제의 시작이겠다.

끝으로 탈핵·탈냉전·탈공산 새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서두르는 남북한관계개선 및 진전에 있어서도 몇가지 근본적인 질문과 전략적 사고의 틀을 제시해 보았다. 남한은 북한접근에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金日成-金正日 부자세습체제를 도와주자는



것인가? 아니면 잠재·현재하는 북한체제 개방·개혁세력을 도와주자는 것인가? 통일을 서둘렀을 때,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충분한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위에서 제기한 중요한 몇가지 질문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답도 없고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도 없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입장에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줄 아는 마음의 자세—정원사의 지혜—와 對北정책·통일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와 정지작업을 마련하는 전략적 전문성—기능공의 기량—이라고 생각한다.

# 부록 I. 북한권력핵심구조의 인물변동

〈표-1〉 조선로동당기구 인물변동

## 1. 당중앙군사위원회

직책	비교연도			비고*
	80년 10월	90년 5월	92년 2월 현재	
위원장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위원	오진우	김정일	김정일	국방위제일부위원장
80년 10월:	김정일	오진우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국방위부위원장
18명	최현(死)	오극렬(落)	최광(新)	군참모총장, 국방위부위원장
90년 5월:	오백룡(死)	전문섭(落)	이하일(新)	당군사부장, 국방위원
15명	전문섭(死)	백학립	백학립	사회안전부장
92년 2월:	오극렬	김두남	김두남	대장, 前당군사부장
15명	백학립	김강환(落)	김익현(新)	당민방위부장, 국방위원
	김철만	이을설	이을설	대장, 수도방위사령관
	김강환	주도일	주도일	대장, 2군단장, 국방위원
	태병렬	이두익	이두익	대장, 항일유격대
	이을설	조명록	조명록	상장, 공군사령관
	주도일	김일철	김일철	상장, 해군사령관
	이두익	최상욱	최상욱	중장, 포병사령관
	조명록	이봉원	이봉원	상장, 前군총정치국부국장
	김일철	오용방	오용방	
	최상욱			
	이봉원			
	오용방			

변동상황 \*\*탈락자 - 3명

신진인물 - 3명

\* 비교관은 1992년 2월 현재인물의 직책을 의미함.

\*\* 변동상황은 1990년 5월과 1992년 2월의 비교내용을 의미함

\*\*\* 사망자는 1992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표시하였음.

2. 정치국

직 책	비 교 연 도			비 교
	80년 10월	90년 5월	92년 2월 현재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80/10:5명 90/5 :3명 92/2 :3명	김일성 김 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욱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총비서 당비서(사업전반) 인민무력부장
위원 80/10:19명 90/2 :14명 92/2 :14명	김일성 김 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욱 박성철 최 현(死) 임춘추(死) 서 철 오백용(死) 김중린 김영남 전문섭(死) 김 환 연형목 오극렬 계웅태 강성산 백학립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연형목 이종욱 박성철 한성룡 김영남 계웅태 허 답(死) 최 광 전병호 강성산 서윤석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이종욱(上) 박성철(上) 연형목(下) 김영남(上) 최 광(上) 계웅태 전병호(上) 한성룡(下) 강성산(上) 서윤석(上) 서 철(新)	부주석 부주석 총리 부총리, 외교부장 군참모총장 당비서(공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법안심의위원장 당기계공업부장, 당비서(경제) 당중공업부장, 당비서(경제), 중앙인민위 함북도당책임비서, 중앙인민위, 함북인민위원장 평남도당책임비서, 중앙인민위, 평남인민위원장
후보위원 80/10:15명 90/5 :11명 92/2 :9명	허 답(死) 윤기복 최 광 조세웅 최재우 공진태 정준기 김철만 정경희 최영림 서윤석 이근모 현무광 김강환 이선실	현무광 최태복 김철만 최영림 홍성남 김복신 조세웅(落) 정준기(落) 강희원 홍시학 이선실	현무광 최태복 최영림(上) 홍성남(上) 홍시학(上) 김철만(下) 김복신(下) 강희원(上) 이선실	당검열위원장 당비서(교육), 당과학교육부장 부총리, 국가계획위원장 부총리 부총리 부총리 부총리, 평양시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장

변동상황: 사망 - 1명  
지위상승 - 11명

탈락자 - 2명  
신진인물 - 1명

### 3. 비서국

직 책	비 교 연			비 고
	80년 10월	90년 5월	92년 2월 현재	
총비서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비서	김정일	김정일(사업전반)	김정일(사업전반)	정치국위원 정치국위원 정치국위원 정치국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자격심사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예산심의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통일정책심의위원장, 당통일선전부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외교위부위원장
80/10:9명	김중린	황장엽(사상)	계웅태(공안)(上)	
90/5:11명	김영남	계웅태(경제)	전병호(경제)(上)	
92/2:11명	김 환	서관희(농업)	한성룡(경제)(上)	
	연형묵	전병호(경제)	최태복(교육)(上)	
	윤기복	최태복(교육)	김중린(사회단체)(上)	
	홍시학	박남기		
	황장엽	김중린(대남)	박남기(경제)	
	박수동	한성룡		
		윤기복	서관희(농업)(下)	
		김용순(국제)	윤기복(대남)(上)	
			김용순(국제)(上)	
			황장엽(사상)(下)	

변동상황: 지위상승 - 7명  
지위하락 - 2명

### 4. 검열위원회

직 책	비 교 연 도		비 고
	1990년 5월	1992년 2월 현재	
위원장	현무광	현무광	
부위원장	주창복	주창복	
위원(4명)	김창환	김창환	
	정관률	정관률	
	이용모	이용모	
	한석관	한석관	

변동상황: 변화없음

5. 전문부서

비 교 연 도			
1990년 5월		1992년 2월 현재	
부 서 명	부 장	부 서 명	부 서 장
조직지도부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선전선동부	김기남(新)
국제부	김용순	간부부	김영채(新)
군사부	김두남(落)	국제부	김용순(下)
통일전선부		군사부	이하일(新)
연락부(廢)		민방위부(新)	김익현(新)
조사부(廢)	임호군	통일전선부(新)	윤기복(新)
총무부		사회문화부(新)	이창선(上)
간부부	김국태(落)	작전부(新)	임호군(下)
제1경제부(廢)	김광진(落)	대의정보조사부(新)	권희경(新)
제2경제부(廢)	강순희(落)	경제계획부(新)	
제3경제부(廢)		중공업부(新)	한성룡(新)
제4경제부(廢)		경공업부(新)	김경희(新)
재정경리부	노명근(落)	기계공업부	전병호(新)
과학부(廢)	박송봉(落)	건설운수부	
교육부(廢)		농업부	
문화예술부(廢)		재정경리부	신상균(新)
청소년부(廢)		과학교육부(新)	최태복(新)
농업부	서관희(落)	근로단체부(新)	김봉주(新)
기계공업부(廢)		행정부(新)	김시학
계획재정부(廢)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新)	장성택(新)
화학부(廢)		총무부	
건설운수부			
노동단체부(廢)			
행정 및 소조사업부	김시학		
보건부(廢)			
대의연락부(廢)	이창선		

변동상황: 탈락자 - 7명

지위하락 - 2명

신진인물 - 13명

지위상승 - 1명

6. 시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시 / 도	비 교 연 도		비 고
	1990년 5월	1992년 2월 현재	
평양시	최문선	강현수(上)	김일성의 외사촌, 前황북당책임비서('89)
남포시	박승일	박승일	
평안남도	서윤석	서윤석	
평안북도	조세용(落)	김학봉(上)	
자강도	이봉길	이봉길	
양강도	염기순(落)	이길송(新)	정무원교통위원장('85)
함경남도	홍시학(落)	현철규(新)	
함경북도	강성산	강성산	
황해남도	김학봉	백범수(新)	
개성시	김기선(落)	임수만(新)	前남포시 인민위부위원장('86)
황해북도	강현수	최문선(下)	前평양시 당책임부서('89)
강원도	임형구	임형구	

변동상황: 탈락자 - 4명

신진인물 - 4명

지위상승 - 2명

지위하락 - 1명

〈표-2〉 행정기구 인물변동

1. 국가주석

직 책	비 교 연 도		비 고
	1990년 5월	1992년 2월 현재	
주 석	김일성	김일성	
부주석	이종옥 박성철	이종옥 박성철	

변동상황: 변화없음

2. 중앙인민위원회

직 책	비 교 연 도		비 고
	1990년 5월	1992년 2월 현재	
수위	김일성	김일성	
위원(15명)	이종옥 박성철 한성룡 강성산 서윤석 조세웅(落) 홍시학(落) 최문선 김학봉 강현수 박승일 이봉길 임형구 염기순(落) 김기선(落)	이종옥 박성철 한성룡 강성산 서윤석 김학봉(上) 현철규(新) 최문선 백범수(新) 강현수 박승일 이봉길 임형구 이길송(新) 임수만(新)	
서기장	지창익	지창익	

변동상황: 탈락자 - 4명

신진인물 - 4명

지위상승 - 1명

### 3. 정무원

직 책	비 교 연 도				비 고
	82년 4월	86년 12월	90년 5월	92년 2월 현재	
총리	이종욱	이근모	연형목	연형목	
부총리	강성산	홍성남	김영남	김영남	외교부장
82/4 - 13명	계응태	김영남	최영립	최영립	국가계획위원장
86/12 - 7명	허 담	김복신	홍성남	홍성남	정치국 후보위원
90/2 - 10명	홍성남	최 광	김복신	홍시학(新)	
92/2 - 11명	홍시학	정준기	강희원	김복신	
	최재우	김창주	김윤혁	강희원	당정치국 후보위원, 평양시 행·경위원장
	공진태	김윤혁	김달현		
	최 광		김 환	김윤혁	
	김창주		김창주	김달현	정무원 무역부장
	김희일		장 철	김 환	
	김두영			김창주	농업
	김복신			장 철	정무원 문화예술부장
	정준기				

변동상황: 신진인물 - 1명

### 4. 국방위원회

직 책	비 교 연 도		비 고
	1990년 5월	1992년 2월 현재	
위원장	김일성	김일성	
부위원장(3명)	김정일(제1) 오진우 최 광	김정일 오진우 최 광	
위원(7명)	전병호 김철만 이하일 이을설 주도일 김광진 김봉률	전병호 김철만 이하일 이을설 주도일 김광진 김봉률	3대혁명소조관련

변동상황: 변동없음



5. 전문부처

부 처 명	비 교 연 도		비 교 고
	1990년 5월	1992년 2월 현재	
외교부	김영남	김영남	
사회안전부	백학림	백학림	
국가계획위원회	최영림	최영림	
경공업위원회	김복신	김복신	
화학공업부	김 환(落)	주길본(新)	
대외경제위원회	김달현	김달현	
국가검열위원회	이용무	이용무	
교통위원회	이길송(落)	리용무(新)	
전력공업위원회	이지찬	이지찬	
농업위원회	백범수(落)	김원진(新)	
수산위원회	최복연	최복연	
국가건설위원회	김용상	김용상	
인민봉사위원회	공진태	공진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자방	이자방	
전자자동화위원회	백세윤(落)	김창호(上)	부처변동
금속공업부	최만현	최만현	
기계공업부	계형순	계형순	
광업부	김필환	김필환	
석탄공업부	김리룡	김리룡	
자원개발부	김세영	김세영	
선박공업부	이 석	이 석	
건설부	조철준	조철준	
건재공업부	주영훈	주영훈	
임업부	김재를	김재를	
지방공업부	김성구	김성구	
원자력공업부	최학근	최학근	
도시경영부	이철봉	이철봉	
체신부	김창호	김학섭(新)	
노동행정부	이재윤	이재윤	
재정부	윤기정	윤기정	

부 처 명	비 교 연 도		비 고
	1990년 5월	1992년 2월 현재	
교육위원회	최기룡	최기룡	
문화예술부	장 철	장 철	
보건부	이종률	이종률	
철도부	박용석	박용석	
해운부	오성렬	오성렬	
무역부	김달현	김달현	
대외경제사업부	정송남	정송남	
상업부	한장근	한장근	
과학원	김경봉	김경봉	
국가체육위원회	김유순	김유순	
중앙은행	정성택	정성택	
중앙통계국	신경식	신경식	
중앙자재총연합상사	채규빈	채규빈	
정무원사무국	정문산	정문산	

변동사항: 탈락자 - 4명, 신진인물 - 4명, 지위상승 - 1명

#### 6. 시·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시 / 도	비 교 연 도		비 고
	1990년 5월	1992년 2월 현재	
평양시		강희원	
남포시		방용덕	
평안남도		김만성	
평안북도		염재만	
자강도		김종호	
양강도		김홍삼	
함경남도		이동연	
함경북도		김충일	
황해남도		최홍주	
개성시		한광립	
황해북도		김형정	
강원도		한영남	

〈표3〉 북한권력핵심구조의 변동인물 프로파일

이름	변동상황*	소속	전직	여행	교육	지방	출생	비고
강성산	(1-2-上)	당/정	도당	유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대학	평양	1926 1931?	
강순희	(1-5-落)	당	당	유				女
강현수	(1-6-上)	당	유격대(도당)	유	중앙당학교	평양	1925	
강희원	(1-2-上)	당/정	공산활동	유	모스크바대학	평양 합북?	1921	
계응태	(1-3-上)	당/정	공산활동	유	남만주대학 소련고급당학교	합북	1918	
권희경	(1-5-新)	당	외교	유		자강	1928	주소련대사
김강환	(1-1-落)	군/당	군	유	만경대혁명학원	평양	1931	
김경희	(1-5-新)	당	도당		중앙당학교	평북		
김광진	(1-5-落)	군/당	군	유	만경대혁명학원 소련군포병기술학교	평남	1918	
김국태	(1-5-落)	군/당	중앙당	유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대학	합남	1918	
김기남	(1-5-新)	당	인륜	유	김일성대학 모스크바국체대학	강원도	1926	
김기선	(1-6-落)(2-2-落)	당	도당		중앙당학교 소련고급당학교	황해	1926	
김두남	(1-5-落)	군/당	군		만경대혁명학원 소련군사아카데미		1928	
김복신	(1-2-下)	당/정	경공업	유	중앙당학교	평북	1926	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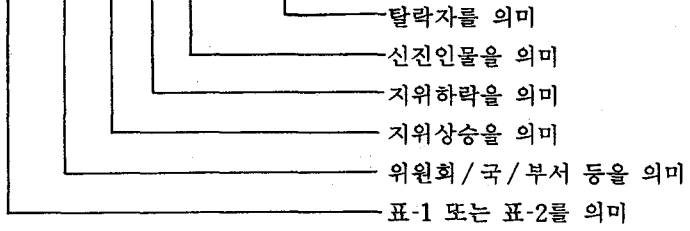
이름	변동상황*	소속	진직	여행	교육	지방	출생	비고
김봉주	(1-5-新)	당	직총	유	김일성대학	평양	1930	金日成의 從弟
김영남	(1-2-上)	당/정	외교	유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합북	1925	
김영채	(1-5-新)	당	체신	유				
김용순	(1-3-上)(1-5-下)	당	외교	유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합북	1934	
김원진	(2-5-新)	정	농업	유				
김익현	(1-1-新)(1-3-新)	군/정	군	유				
김중린	(1-3-上)	당	공산활동	유		합북 평북?	1924	
김창호	(2-5-上)	당/정	기술관료	유				
김철만	(1-2-下)	군/당	유격대	유		만주	1910	
김학봉	(1-6-上)(2-2-上)	당	도당	유	김일성대학	합북	1926	
김학섭	(2-5-新)	당/정	체신	유				
김환	(2-5-落)	당/정	기술	유	만경대학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유학	평북	1926	
노명근	(1-5-落)	당	당관료					
박성철	(1-2-上)	당/정	유격대	유	일본공산당원 일본上智大學중퇴	합북	1912 1914?	金日成의 從妹夫
박송봉	(1-5-落)	당	당관료	유				
백범수	(1-6-新)(2-2-新) (2-5-落)	당/정	도당	유	만경대학명학원 김일성대학	합북	1928	

이름	변동사항*	소속	진직	여행	교육	지방	출생	비고
백세윤	(2-5-落)	당/정	진자					
서관희	(1-3-下)(1-5-落)	당	농업	유	모스크바대학	평남	1926	
서운석	(1-2-上)	당	도당	유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북간도	1929	
서철	(1-2-新)	당	유격대	유		동만주	1907	주월맹대사
신상균	(1-5-新)	당	당관료					노력영웅('87)
연형목	(1-2-下)	당/정	기술	유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우랄공과대학	북만주	1925	
염기순	(1-6-落)(2-2-落)	당	도당					
오극렬	(1-1-落)	군/당	군	유	만경대혁명학원 소련공군대학	만주 길림성	1928? 1931	
윤기복	(1-3-上)(1-5-新)	당/정	교육·경제	유	경고중퇴 모스크바대학	함남	1926	
이길송	(1-6-新)(2-2-新)	당/정	도당(교통)	유	만경대혁명학원 레닌그라드공과대학	함남	1923	
이용무	(2-5-落)	군/당	유격대					반김정일연루
이종옥	(1-2-上)	당/정	좌익활동	유	하르빈공과대학	함북	1911? 1918	
이창선	(1-5-上)	당	문예	유				
이하일	(1-1-新)(1-5-新)	당	당관료					김정일수행
임수만	(1-6-新)(2-2-新)	당/정	지방당					
임호근	(1-5-下)	당	당관료					

이름	변동상황*	소속	진직	여행	교육	지방	출생	비고
장성태	(1-5-新)	당	청소년					김일정사위 (長女 京姬 남편)
진문섭	(1-1-死)	당/군	유격대		중앙대학교	합북	1921	89/4 사망
진병호	(1-2-上)(1-3-上) (2-2-新)	당	당관료(경제)	유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1925	3대혁명소조관련
정준기	(1-2-落)	당/정	언론(선전)	유	모스크바대학	합남	1924	
조세웅	(1-2-落)(1-6-落) (2-2-落)	당	도당	유	김책공업대학 소련유학	평북	1927	
주길본	(2-5-新)	당/정	화공	유				
최광	(1-1-新)(1-2-上)	군/당	유격대	유				
최문신	(1-6-下)	당	도당	유		합북	1918	
최영림	(1-2-上)	당/정	당관료	유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대학	황북	1926	3대혁명소조관련
최태복	(1-3-上)(1-5-新)	당	교육	유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강원	1926	
한성룡	(1-2-下)(1-3-上) (1-5-新)	당	기술(지방행정)	유	만경대혁명학원 동독유학	합북	1929	3대혁명소조관련
현철규	(1-6-新)(2-2-新)	당/정	도당					
홍성남	(2-上)	당/정	경제	유	체코프라하대학	원산	1924	
홍시화	(1-2-上)(1-6-落) (2-2-落)(2-3-新)	당/정	도당	유	중앙대학교 소련고급당학교	합북	1922	
황장엽	(3-下)	당	교육(주체사상)	유	소련유학	합남	1925	

\* 변동상황

번호-번호-上, 下, 新 또는 落



## 부록 II. 김일성-김정일 권력장악과정 및 프로파일 비교

기 준	김 일 성	김 정 일
1. 국내상황	해방후 혼란기, 소련군점령 및 정치후견 창당·창군·창국기	경제적 침체, 국제적 고립, 체제수호·방어
2. 국제상황	소련주도 공산주의확장세, 2차대전후 공산-자유진영 양극적 냉전체제 형성혼란기	소련주도 공산주의해체기, 탈냉전·탈핵 탈공산, 지구적 새국제질서 형성기
3. 개인적 프로파일		
①성장배경	1912년 4월 15일 출생 농가(지식인) 만주중국어 육문중중퇴 아버지死亡(1926년, 14세때) 계부無, 이복형제無	1942년 2월 16일 출생 항일빨치산가족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어머니死亡(1949년, 7살때) 계모(김성애)有, 이복형제有
②경력	抗日계월리활동(1932? - 1941) 在소련 시베리아 소련군정보군사 훈련캠프 (1941 - 1945) 북조선공산당책임비서(1945.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1948 - 19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1972 - 현재) 조선로동당 총비서(1948 - 현재)	3대혁명소조우동 주노(1973. 2) 조선로동당 중앙위 조직신진책(1973. 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정치국·비서국 위원 (1980.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1990.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1991. 12. 24)
③후견자	스탈린, 로마넨코	김일성, 오진우
④개성	활달, 사교적	내성적(?)
⑤이념	주체사상(자주, 자립, 자위 등 대외선전용이 강)	주체사상(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 국내부자승계 선전용이 강)



기 준	김 일 성	김 정 일
4. 권력장악형태	단기형(1945 - 1948) 1945년 10월 사실상 공산당지도자로 부상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총비서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조선로동당 실권자	장기형(1972 - 현재) 승계과정
5. 권력지지기반 ①국내	벨치산 동료엘리트, 군, 당, 기타 모든 외곽단체	3대혁명소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당, 군, 기타 모든 외곽단체(형식적?) 중국(?)
②국외	소련	
6. 권력장악합리화	진소정권수립 마르크스-레닌이념 공식화 통일실현을 위한 북반부 혁명기지구축 항일무장투쟁 세력권력기반확립	김일성 주체혁명의 지속과 혁명위업의 계승 반김일성세력·반김체제의 사전예방 및 복합체제의 고수, 보호 대내·대의 체제위협요인의 제거
7. 권력장악진략	단기적 김일성 항일무장투쟁경력홍보 김일성 공산당경력홍보 소련정형군의 후견·지지 항일빨치산동료의 정치·당조직 핵심침투 권력기반 저변확대 연합전선전략활용 파벌간 투쟁·갈등조작으로 어부지리 장기적·전략적 이득을 위한 단기적·전술적 양보 “적”과 “인민”개념의 융통적인 정치적 활용	점진적 차세대교육에 총력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 동창중심의 조직강화 3대혁명소조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 기본조직으로 한 조직확대, 조직기반확장, 기본조직침투통제 김일성후광(Halo Effect) 최대이용

기 준	김 일 성	김 정 일
8. 갈등구조 * 체제내적 갈등 ① 권력기반중심갈등 조직내갈등 조직간갈등 ② 파벌중심갈등 ③ 정권, 노선중심갈등 보수·기존노선고수세력 혁신·개방개혁세력 중도·중간은진세력 ④ 자질중심갈등 주체사상혁명파 전문기술관료파	有  有(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 微弱  微弱	強  強(구김일성계 - 친김정일계) 強  強
* 체제외적 갈등 ① 인민 對 지배세력 ② 북한 對 남한 ③ 북한 對 외세 ④ 북한 對 동맹국	微弱 強 → 弱 弱 有	可能性 ? ? ?
9. 권력장악과정의 기관의 역할 ① 정치국 ② 비서국 ③ 당중앙위원회 ④ 국가보위부 ⑤ 군부		

빈 면

## 第 1 會議 討論

이용필 : 고맙습니다. 양박사님께서 비교정치학적 관점과 北韓 현실을 접합시키면서 발표하셨고 또 대북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안인해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해 : 이 논문은 대체로 보아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北韓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설명 둘째, 北韓 핵심권력의 변동분석 셋째, 金日成-金正日 권력장악 과정 및 profile 비교 넷째, 南北韓 관계개선과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자의 의도대로 네개의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北韓核心權力的 變動分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양교수님께서서는 北韓權力的 핵심엘리트들의 인맥을 개별인물이 어떠한 직위에 임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실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교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日成과 金正日의 친인척들이 대거 득세하고 있으며 또 소련유학과,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엘리트의 대다수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해석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양교수님께서서는 金正日이 권력승계에 실패할 것이라거나 金日成

이 죽으면 이러한 엘리트들이 와해되어 金正日의 지지기반이 상실될 것이라는 암시를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교수님께서도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金正日은 지난 20년간 권력승계 준비를 해왔고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金正日의 권력기반이 매우 튼튼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경제난 때문에 밑으로부터 봉기가 일어나서 실각하게 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金正日만큼 완벽한 승계준비하에 승계를 하는 후계자도 드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日成이 죽은 후 金正日은 빨리 3일천하로 끝날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사실분석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냉전적 사고의 연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金日成-金正日 權力掌握過程 및 프로파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金日成과 金正日의 권력장악과정을 金日成의 등장시기와 현재의 국내상황, 국제환경, 성장배경, 경력, 후전자, 개성, 이념, 경력, 권력장악 형태, 권력장악의 합리화, 정당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양교수님께서서는 金日成과 金正日의 권력장악은 너무나 대조적이고 상극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金正日의 권력장악 또는 그 성공에는 많은 불확실성과 불가예측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교수님의 이런 결론은 반대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력장악의 국내적 상황으로 볼 때 양교수님께서서는 北韓이 현재 국제적 외교적으로도 고립화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팎의 불안, 위협요인 때문에 체제수호, 방어적 성격이 짙다고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金正日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권력이 승계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방 직후의 연안파, 갑산파, 국

내과 등의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공고화해야 했던 당시의 金日成과 비교해 보면 金正日은 차려놓은 밥상을 혼자서 먹기만 하면 되는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과정의 차이, 경력, 개성 등에 관한 부분도 金日成과 金正日은 분명히 다르며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金正日의 권력승계에 영향을 미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金正日은 해외유학을 하고 대학교육을 받은 테크노크라트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빨치산 중심의 행동과 당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金日成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金正日은 아직은 金日成보다 카리스마가 약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당, 정, 군내의 권력기반으로 볼 때, 金正日이 권력승계에 실패한다거나 金日成 사망 후 축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점은 양교수님의 결론과는 상반된 해석입니다.

세번째는 南北韓關係改善과 戰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지적되었지만 남북관계에 관한 전망이 북한체제변화의 전망이라든지, 북한핵심권력의 변동분석이라든지, 金日成과 金正日의 비교에 관한 사실분석에서 시사되는 정책전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정책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서 연구방법론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北韓의 권력구조와 金正日 주변 엘리트에 초점을 둔 南北韓 관계개선과 전략이라면 권력구조에서 남한과의 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은 어떤 것이며, 그 성격은 어떠한가, 누가 책임자로 있는가 또

는 金正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당조직지도부 등의 심층적 분석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金正日 주변 엘리트 중에서 어떤 인물과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 유리하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에서 최고위급회담, 군축협상, 남북교류분과위원회 담당자의 성격등을 파악하고 그들의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北韓 權力엘리트 分類方法에 관한 문제입니다. 北韓 權力構造의 특징이라면 극히 소수집단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사카이 다케시 교수가 지적했듯이 金正日은 수직적·수평적 조직체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면에서 층별 분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엘리트 분류방법을 北韓에 적용하는 경우 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별무리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Michigan 대학의 Oksenberg와 Lieberthal 교수가 중국의 권력엘리트를 4 계층으로 분류한 것을 北韓에도 적용해 보면, 최고권력자, 원로급 인사, 지도급 인사, 전문가 집단으로 층별 분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시기별로 각 층별의 변동상황을 파악한다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北韓과 중국의 차이가 있다면 원로급인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데, 중국에서는 등소평, 진운, 양상곤 등이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北韓에서는 金正日의 존재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로급들의 역할이 무력화(neutralization)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양교수님께서 이러한 분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分析理論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론부분에서는 사회과학의 혁명이론 중에서 네가지를 원용하여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체제변화에 대한 설명과 北韓의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주의 체제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네가지 이론들이 하나의 일관된 틀(framework)로 통합되지 못하고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이론들이 하나의 논문에서 통합된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양교수님께서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론이 北韓에는 적용될 수 없는 이론으로 파악하고 그 이유를 北韓에서 만연하고 있는 언론, 교육 등 국가기구에 의한 여론조작이 대내외의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 박탈감이론을 원용함으로써 北韓에서는 인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세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론이 적용되지 못하는 정치적인 외적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이론을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오류를 낳게 되는 부분이 합리적 선택이론과 위장선택이론의 적용이라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론과 위장선택이론은 北韓에서 인민들이 국가의 강제와 폭력의 위협 때문에 감히 체제도전을 감행할 만한 개인적 유인동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보고 이것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국가이론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와 같은 학자의 국가이론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에 관한 측면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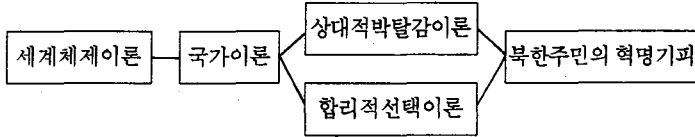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로 국가이론은 양교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스카치폴(T. Skocpol)의 이론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이론이 스카치폴 이론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스카치폴이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혁명을 설명한 고전적 저작인 「States and Social Revolution」의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스카치폴은 국가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선택이론과 위장선택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국가의 억압이라고 본다면 스카치폴의 구조주의 이론을 더욱 분해하여 세계체제이론과 국가이론으로 나누어서 양교수님께서 도입하고 있는 이론들간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체제이론은 양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北韓에서 혁명적 상황이 절반 이상 꿈틀거리고 있으나 결정적인 관건인 중국의 혁명적 변혁이 아직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국가이론은 국가의 교육, 언론매체등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군대, 경찰을 포함하는 물리적 국가기구(coercive state apparatuses)가 어떻게 상대적 박탈감을 사전에 예방하는지(상대적 박탈감 이론), 그리고 양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모하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행동을 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피하는지를(선택이론과 위장선택이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이론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론, 선택이론과 위장선택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입

니다. 예를 들면 北韓에 중국과 소련같은 나라가 北韓의 국가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가 인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인민들의 위장선택에 영향을 미쳐 혁명참여를 기피한다는 식의 이론들간의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재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필 : 여류학자의 토론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자칫하다간 정치학 이론논쟁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진영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영 : 고려대학교에 있는 서진영입니다. 양교수님의 글이 대단히 의욕적인 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안박사님께서 매우 상세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저는 다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교수님의 문제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교수님이 제기하신 주제들은 매우 흥미있는 주제로 저 자신도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제기 방식과 그 해답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문제제기는 蘇聯 및 東歐의 共產政權이 붕괴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반해 北韓, 中國 등의 共產國家들이 현재 붕괴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나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

에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사이에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big question' 이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北韓의 權力構造에 관련한 문제제기입니다.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문제로서 첫번째 문제제기가 범세계적인 주제라면 두번째 문제제기는 실증적인 주제라 하겠습니다. 또 이들과 연관하여 남북관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미의 관심대상이며, 양교수님의 문제제기 방식도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소련이나 동구에서 붕괴된 원인, 北韓이 붕괴되지 않는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논리적인 연계 속에서 규명해 내고, 그다음 北韓의 권력구조를 분석해야, 그결과 현재 北韓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석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바람직한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라는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근거있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와 과정이 논리적인 연계 속에서 제기되고 토론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논리적 연계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양교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려다 보니까 각각의 주제들을 상호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점을 가장 문제인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理論的인 次元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東歐와 蘇聯의 革命的 變化를 설명하는데 여러가지 이론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구조주의, 합리적 선택모델, 상대적 박탈감 등등. 그런데 왜 이런 이론들을 열거해서 제시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론이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면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혁명의 일반론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혁명적 변화를 겪는 원인이 무엇이나,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가 아니라 동구와 소련에서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나 등 좀 더 구체적인 사회주의 변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키치폴(T. Skocpol)의 이론이나 상대적 박탈감 이론 등이 이러한 사회주의 변혁에 적합한 이론인가? 그리고 분석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꼭 필요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소개된 여러 이론들 중 야노스(Janos)의 논문에서 나타난 베버(Weber)와 스펜서(Spencer)를 인용해서 공산주의 운동의 기원과 전개와 몰락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점에 초점을 두고 양교수님의 발표가 이루어졌더라면 훨씬 치밀하고 논리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덧붙여 루시안 파이(Lucian Pye)의 근대화론과 결합한다면 왜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가 붕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시아의 공산주의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내용들이 양교수님의 논문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걸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점들을 좀 더 명확히 하면서, 양교수님의 논리적 수순을 따랐다면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즉 소련과 동구의 사례를 설명하고,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 동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北韓과 아시아 사회주의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면 北韓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의 변화를 좀더 포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전망해 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남북 관계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필 : 양박사님의 논문이 대단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provocative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정치학계에서 이론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김남식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는데 아마도 北韓, 南北關係에 있어 가장 현실감각이 뛰어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의 두분이 주로 이론적인데 초점을 두었다면 김남식 선생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식 : 양교수님께서 이 논문에서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했고 이에 근거해서 北韓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연구의 이론적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논문을 보면 北韓의 80년 당대회 이후 권력서열을 비롯한 여러가지 권력변동상을 도표로 정리해주셨는데, 저로서는 이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회자께서 理論보다 現實的인 問題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앞의 두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체분량의 절반을 이론이 차지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양교수님이 3장 마지막 부분에 “안타깝게도 이러한 여러가지 기초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답은 아직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이 없는 방법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그뒤에 계속해서 “다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정책과 체제의 향방, 국내적으로는 金日成의 권력퇴장, 경제실정, 남한의 정치·경제·군사적 안정성, 일본, 미국의 역할이 위의 질문에 대한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고 견

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용을 보면 구절구절 본인의 결론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런 문제에서 논리적으로 치밀한 해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 이해합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안박사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金正日의 權力承繼와 金日成의 權力掌握過程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는 내용과 내용의 설정 등 그자체로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것처럼 두사람의 차이가 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만 막연하게 金正日의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정도여서 아쉬움이 큼니다. 비교한 내용에 비해 결론이 빈약하다 할까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분석해서 그 결론을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北韓 社會主義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이 붕괴하지 않고 아직도 존속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앞에서 얘기된 것처럼 소련, 동구와 비교해서만 얻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와 더불어 서구사회주의 즉 제2인터내셔널과 연결해서 지속되었던 서구사회주의를 포함한 총체적 사회주의 속에서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을 비교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사회주의는 의회민주주의 속에 수용되면서 현실에 적응해 왔고 자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사회주의는 제3세계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정권 장악과정이 계급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식민주의 민족해방을 전면에 내세워 정권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해 나갔지만 민족주의자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이 현존 사회주의인 중국, 베트남, 쿠바라

고 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산정권에 대한 지지도 아직도 깊숙이 뿌리내려 있으며, 그들 정권이 내세우는 주장들에 대한 지지도 높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볼 때, 단순히 정권을 잡은 동구소련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지 못한 서구사회주의까지 포함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번째, 구체적인 문제로 金正日에 대한 權力承繼 문제입니다. 北韓의 권력에 대한 어떠한 이론들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北韓에서는 어떠한 내적 논리에 입각하여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사회주의를 형성하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는가 등, 내적 논리에 입각한 정확한 분석이 일차적으로 깔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서구이론을 도입하더라도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6차 당대회 이후 권력구조의 변동상황들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만경대 출신, 金日成 대학, 소련유학파들이 지배적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권력 엘리트들은 70년대 중반에 이미 기초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점은 北韓의 내적 논리에 근거해서 보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분석을 요구합니다. 원래 北韓의 권력승계는 단순히 당의 총비서, 국가주석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北韓 권력구조의 특징의 首領의 유일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首領의 승계, 곧 金正日의 수령승계가 北韓 권력승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당의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승계하느냐 아니냐는 수령승계에 있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 首領으로서의 金正日이 이미 지목되었고 미래 首領으로서 자질 향상에 노력해 왔고, 미래 首領으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게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金日成의 유일영도체제라는 틀 속에 金正日의 당 유일적 지도로 연결된, 즉 金正日의 당 유일

적 지도와 金日成의 유일적 영도가 접목된 체제가 北韓의 권력 체제입니다. 후계체제는 首領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首領의 혁명사상을 당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金正日은 당을 통해 권력승계작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의 유일적 지도가 확립되었다는 것은 벌써 金正日의 후계체제가 확립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점들은 이미 74-5년도 당기관지 논문들에서는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北韓권력의 틀은 이미 70년대 중반에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박사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金正日은 64년 졸업과 동시에 정치일선에 나섰고 후계자로 지목된 다음 20년 동안 당의 총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金正日이 그기간 동안 당을 장악·육성·배치해 왔음을 의미하므로 일단 권력은 안정되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경대 혹은 金日成대 혹은 모스크바 출신이라는 경력상의 문제도 중요시 해야 하지만 하부구조에서 상부구조까지 권력구성에서의 변동이 어떤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첫째, 당에 대한 충실도 둘째, 실무능력 셋째는 사업방식 등인데, 이런 기준으로(이점들은 어느 문헌에서나 지적되는 것) 초급간부에서 중양간부까지 구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北韓의 권력구조는 老·壯·靑으로 3자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자결합은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들 구성이 老·壯·靑으로 되어있어 이를 반영하는 면도 있습니다. 또 老(간부)는 상당히 경험이 풍부하고, 壯은 경험과 이론을 겸비하고, 靑은 경험보다 이론이 앞서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결합하여 단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자결합은 북한정



권 초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계승성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북한권력의 총체적인 내적 논리를 바탕으로 외국의 유명한 이론들을 수용해야 좋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다음으로 黨의 機能 弱化的 문제입니다. 당의 기구가 축소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의 기능 약화, 서대숙씨도 얘기하는 당의 기능 약화, 정무원의 역할 강화는 사실과 다릅니다. 北韓 공산당의 가장 큰 특징은 당 영도의 확보입니다. 당 건설에 있어서 당의 영도를 계승성있게 나간다는 것이 北韓에서는 가장 귀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당의 영도가 관철되고 있지만 北韓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은 몇가지 새로운 이론 때문에 보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수령론, 당의 영도 그리고 이데올로기 문제 등으로 이들을 정치, 경제, 문화의 전편에 보완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당의 영도는 철저합니다. 특히 金正日 등장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계획경제를 채택할 때에도 당의 간섭이 별로 없었으나 이제는 먼저 당에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에 회부합니다. 최고인민회의 7기, 8기, 9기에서 보면 1차 회의에서 국가지도기관을 선출하기 마련인데 그때 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에 넘겨줍니다. 이 정도로 당의 영도는 北韓에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南北對話의 문제입니다. 물론 남북대화는 양교수님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北韓의 대남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또 우리의 대북정책기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냉전시대가 해체되고 상호협력

시대로 재편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럼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구조로 있으란 말인가? 냉전구조는 대결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대결상태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화해와 협력밖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설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南北韓 당국자들의 의지표현이 남북합의서이고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흐름과 민족사적인 통일운동과정에서도 맞는 것이라 봅니다. 더구나 고위급 회담이 1년 7개월 예비회담과 1년 5개월 본회담을 통해서 언론과 학자들의 자문과 비판 속에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합의서를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가 의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처럼 어렵게 이룩한 것을 가지고 金正日을 도와준다 혹은 金日成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한반도 우리의 문제는 언제 해결할 것입니까? 남북문제는 제가 보기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필 : 고맙습니다. 그러면 많은 쟁점이 제기되었는데 양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답해주시고 미진한 것은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철 : 세분 선생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4개 논문이 되어야 할 주제들을 욕심을 내어 한 논문에서 다루려다 보니까 불충분한 점도 많고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우선 안인해 박사님의 문제제기, 제가 金正日체제가 오래 못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답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자들 사

이에서 金正日체제가 3분 또는 3년 걸릴 것이다 라는 의견을 지적해 본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모든 공산주의체제가 망하기 전, 말하자면 인민대중의 봉기가 있기 전까지는 매우 안정성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北韓도 그러한 안정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김남식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계구축도 하루이틀에 걸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언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展望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질학자나 천문학자가 이론을 전개하면서 지진과 폭풍이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언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가능한한 객관적인 자료나 분석을 통해서 명백한 해답보다는 일정한 可能性 또는 確率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답변이 미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인해 박사님께서 공산주의 붕괴를 혁명현상으로 해석해서 제가 제시한 몇가지 이론들을 국가이론과 결합시키면 짜임새가 있을 것이라는 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다루면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北韓은 아직도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무의식적으로 깔고 전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불충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진영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하는 과정중에서 제가 질문은 해놓고 답변은 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왜 아시아에 있는 공산국가들

은 멸망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답변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구에서 유고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점령군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힘이 쇠퇴하여 고르바초프가 내정불간섭원칙 소위 '시나트라독트린'이라는 정책을 폈을 때 바로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유일하게 몽고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는데 그건 바로 몽고가 자생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소련의 힘에 의해 1923년에 수립된 공산정권이었고 이후에도 대소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쇠퇴하면서 그 여파로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베트남과 중국의 공산주의는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장기적인 투쟁과 시민전쟁을 통해서 뿌리내린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北韓도 물론 소련 점령군 하에서 金日成 정권이 등장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신의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으로 北韓의 합법성을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구나 몽고에서 처럼 소련의 점령하에서 이루어진 체제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동구나 소련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서구정치사상 특히 민주주의 사상이라든지 민주주의 경험까지 있는 나라들인 반면에 우리는 오랜동안 동양적인 전체정치의 유산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깊이는 다룰 수 없습니다만 문화적인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교나 불교에서 오는 문화권과 기독교에서 오는 문화권과의 차이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아세아권의 공산주의 체제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식 선생님이 金正日과 金日成 권력승계과정 비교에서 저

나름대로 설정한 여러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차이점만 지적했을 따름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공식은 아니고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남식선생님께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교할 때 공산당 집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구에 있는 공산당이나 사회당 세력들도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분석단위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사실 지적만 했지 다루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北韓 지도체제를 내적인 지도체제 논리로 봐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해주신 것이 黨의 役割과 機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기구의 개편이나 신설차원에서는 정무원의 체제개편은 거의 없는 반면 당의 기구는 26개에서 16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내용면에서 그 나름대로 국제정세에 걸맞는 내용들로 기구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양상과 당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北韓 변화의 조짐은 과거 소련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났던 제도수정,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런 시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南北問題에 대해서 제가 혹시 김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것처럼 인상을 준 것 같은데, 통일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일

단 형성된 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나 北韓 인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 예를 들자면 北韓의 핵개발 문제라든지 北韓의 화생방 무기의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에 중점을 뒀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 성급하게 통일을 원한다면 자칫 똑같은 선전선동 차원의 되풀이가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이미 성사된 제도적인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필: 고맙습니다. 사회과학 학술발표를 하게되면 발표자에 대해서 비판과 반비판이 제기되면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항상 끊임없이 논쟁하는 가운데 서로 배우는 과정이라 보는데, 세분 선생님들께서 양교수님의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1,2분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안인해: 반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부분에 대해서 서진영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이론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도 이 이론을 이용해서 일관된 틀 (framework) 속에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논리적인 틀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北韓에 대해서는 北韓의 시각으로 北韓을 연구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北韓의 시각에서 분석틀을 개발하고 그간 축적해 오신 방대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후학들에게 많은 도

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영: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저에게 차례가 왔으니까 두가지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北韓의 엘리트 분석에서 만경대, 모스크바대, 김일성 대학 출신 등등의 출신배경을 거론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엘리트그룹 중에서 서울대, 육사 등등의 출신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北韓에서 이런 출신배경을 갖지 못한 인물들이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물이 北韓의 최고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찌면 당연한 얘기의 동어반복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번째 또 하나 의문은 지금까지 엘리트가 기술관료 출신이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온건개혁주의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관료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나의 문제, 즉 그것이 金正日 세력이 공고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그것이 실용주의적이고 개혁적이고 온건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가 등의 문제를 분석할 때, 기술관료를 즉각적으로 온건개혁주의자로 자동적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미시적으로 분석해서 여러가지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남식: 北韓의 권력승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金正日이 최고사령관직에 오르고 또 여러가지 칭호사용이 달라지는 변화상을 보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金日成은 위에 있고 그 밑에 金正日과 노대통령을 대화시키려는 의

도에서 권력승계를 서두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승계의 핵심이 首領직의 승계이고 한 시대에 首領이 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金日成 首領이라는 유일적이고 영웅적인 틀 속에 당의 총 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金正日이 가질 수 있습니다. 首領이 반드시 당의 총 비서와 국가주석을 겸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권력 구조의 변동이 필요한 시기인가 하는 점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金正日이 지금 실질적인 首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총비서와 국가주석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상회담은 金日成과 이루어지지 金正日과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승계의 절차 문제가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당대회라든가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와 같은 공식절차들이 아직 예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 총비서직이라든가 국가주석직의 승계는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양성철** :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안인해 박사님께서는 저보고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서진영 교수님의 질문 중에 한국의 엘리트 학맥이나 北韓의 학맥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몇가지 한국과 다른 점들이 있어 지적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北韓에서는 지맥, 소위 출신지방에 따른 그룹형성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양출신보다 함경남북도 출신, 특히 함북 출신 인물들이 40년동안 우세를 보이지만, 이것도 남한에서 TK,



부산, 또는 호남 등의 지맥에 비하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맥이라는 것도 北韓의 경우는 빨치산 그룹의 인맥과 김일성, 김정일 친인척 인맥이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한국과 같이 인맥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北韓이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기술관료가 등장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심층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점은 중요한 지적이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식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론 수령론이 중요하다는 요새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한 세기에 위대한 영도자가 한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는 한세기에 위대한 영도자가 둘이나 있다고. 또 北韓에서는 일국가·일민족·이정부·이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北韓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소위 일국가라는 논리가 말이 안되는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적어도 자기들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노대통령은 首領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의 자격이고, 北韓의 경우에는 아까 바로 김남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首領은 초헌법적인 차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金正日이 주석이 된다면 정상회담의 상대방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노대통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노대통령이 각각 金日成과 金正日을 만난다고 가정하면, 金正日을 만났을 때는 두사람의 국가원수가 만나는 것이고 金日成을 만났을 때는 바로 일

민족의 위대한 유일한 首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노대통령이 격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필 :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플로어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간단히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의 유길재라고 합니다. 양교수님께 이론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北韓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맹점이 저희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北韓의 특수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北韓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보편적인 경로를 걷고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또 北韓에 대한 특수성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되더라도 양자간의 조화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족통일 연구원에서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양교수님이 에이든 포스터카터가 北韓의 위기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에이든 포스터 카터가 과도하게 北韓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시면서 또 北韓이 왜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평론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는데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양교수님께서 왜 北韓이 viable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로 억압과 조작이라는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교수님께서 「World Politics」 작년 10월달에 나온 잡지에 쿠란(T. Kuran)과 야노스(Andrew C. Janos)의 글을 많이 참조하신 것으로 이해됩

니다만은 같은 호에 실린 디팔마(G. Dipalma)의 '위로부터의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北韓분석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위로부터의 정당화 과정을 통해서 北韓의 viability를 설명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사실적인 질문인데 중앙인민위원회의 인물들이 90년도에 대폭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고 나서 중앙인민위원회 역할이 강화되고 그것이 정책집행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90년도의 그러한 변화가 중앙인민위원회의 중요한 성격변화가 아닌지, 불행하게도 그 논문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김남식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의 영도는 北韓에서 아직까지 관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양교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정무원의 위상변화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주목할만 하고 특히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당 국제부보다 정무원 외교부 역할이 이미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남 외교부장이 83년도 외교부장으로 취임된 이래로 국제부장들의 활동보다도 김영남 외교부장의 활동이 훨씬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곧바로 당의 기능 약화, 정무원의 역할 강화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김선생님처럼 당의 영도라는 기본노선에 집착하다 보면 정무원의 위상변화와 같은 과거와는 다른 상황의 변화, 다시 말해 점진적이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필 : 새롭게 제기된 질문에 답해야겠는데, 예정된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北韓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사실 北韓은 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金日成이 지난번 고위급 회담때 “남조선에서는 설렁탕 맛이 좋다” 혹은 “노태우대통령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말하겠다” 라는 표현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이런 표현은 北韓에 무슨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北韓의 권력구조 변동을 주제로 한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앞으로 방법론적으로 더욱 풍부해지고 北韓문제와 통일문제를 보다 적실성있게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양교수님과 토론해주신 세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빈 면

## 第2會議: 김일성 이후의 政策方向

1. 主題發表 ..... 徐 載 鎮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2. 討 論

- 司 會 : 金 甲 喆 (建國大 教授)
- 討論者 : 都 俊 鎬 (朝鮮日報 北韓部長)  
都 興 烈 (忠北大 教授)  
崔 平 吉 (延世大 教授)

빈 면

# 김일성 이후의 政策方向

## —사상통제 강화와 경제적 개방—

徐 載 鎮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 1. 序 論

1972년 이래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준비해온 북한은 지난 연말에 김정일을 군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신문, TV, 라디오 등의 모든 대중매체에서 김일성의 자리를 김정일로 거의 완전히 대체하였다. 김정일은 黨, 國家, 軍隊의 실무를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김일성이 차지하고 있는 중앙인민위원회 首位, 국가주석, 또는 당총비서 중의 어느 하나를 이양받아 공식적 권력의 지분이 강화될 시기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확실하다면 김정일체제의 정책방향은 어떠한 것인가? 얼마만큼 김일성 시대의 연장일 것이며, 얼마만큼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변화일 것인가?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승계가 정책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改革促進說과 改革遲延說의 두 가지 대조적인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개혁촉진설에 의하면<sup>1)</sup> 새 지도자

---

1) Valerie Bunce, "Elite succession, and policy innovation in Communist systems: an empirical assessmen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9 (1976), pp. 3~41; ———, "The succession connection: policy cycles and politic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4



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개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sup>3)</sup> 새 지도자는 과거를 비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새 지도자로서의 가치를 부각하며 새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정책혁신을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새 지도자로의 승계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 주로 승계의 초기에는 인민대중의 경제생활 개선을 우선시 하다가 권력이 공고화될수록 대중보다는 엘리트 지향적인 정책으로 점차 옮겨가거나 정체를 따른다는 것이다.

개혁지연설에 의하면<sup>3)</sup> 새 지도자는 지도력이 낮기 때문에 권력승계의 초기에는 오히려 권력의 공고화에 주력하며 따라서 개혁은 지연된다는 것이다.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새 지도자는 초기에 대중보다는 군부와 같은 세력있는 지지자들의 무마에 주력한다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승계의 초기에는 엘리트 지향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권력이 공고화된 다음에 대중 지향적인 개혁적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두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중 지향적 개혁과 엘리트 지향적 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차이에 있는 것 같다. 개혁지연설은 권력이 공고화된 후에 개혁한다는 점에서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

(1980), pp. 966~977; Esherick, J. & Perry, E., "Leadership success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risis or opportunity?,"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16 (1983), pp. 171~177.

- 2) 덩소평이 권력을 공고화하는 방법으로써 개혁을 채택했다고 예를 든 사람은 Lowell Dittmer, "Patterns of elite strife and succession in Chinese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No. 123 (1990).
- 3) Philip G. Roeder, "Do new Soviet leaders really make a difference? Rethinking the succession conn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1985), pp. 958~976.
- 4) *Ibid.*, p. 959.

서 초기부터 개혁한다는 개혁촉진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이론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새 지도자가 승계이후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은 서로 공유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어떠한 것인가? 김정일 체제는 최근 두 가지 대립적인 방향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체사상을 재해석하고 있다.<sup>5)</sup> 지난 1월 3일에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된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에서 북한은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붕괴가 북한에서도 재현될까봐 매우 우려하는 위기의식을 노정하고 있다. 37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담화의 전체 내용이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원인을 해석하고 북한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개조, 3대혁명의 계속발전, 관료제 병폐의 치유, 노동계급적 원칙 및 혁명적 원칙의 고수 등을 주장하며 그래야 사회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등,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부단속은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 경제적으로는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최근 북한은 청구자금과 기술도

---

5) 서재진, “북한 사회변동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 1991년 후기 한국사회학대회 발표논문.

6) 북경방송은 1992년 2월 18일 “대외개방의 문을 열고 있는 朝鮮”이라는 제하의 新華社 통신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으로 채택한 羅津·先鋒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 설립계획이 순조롭게 집행되면 북한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대외경제무역관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

입을 목적으로 일본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두만강 유역개발, 나진·선봉 경제특구건설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UN가입, 남북한 합의서 채택 등 일련의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고립에서 탈피하여 부분적이거나 재편입을 시도하며 자력갱생적 발전전략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경제정책은 각각 북한식 사회주의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두 기둥이다. 주체사상은 사회구성의 원리로서 정치적 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적 토대의 제반 부문도 규정한다. 주체사상이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의 노동동원의 원리와 경제관리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력갱생에 기초한 대외무역의 원리를 제공한다. 한편 북한식의 경제적 토대는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김정일 체제는 주체사상을 강화하고 경제적 토대에서는 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양면적인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의 개혁축진설과 개혁지연설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의 경우는 양자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다. 정치부문의 경우는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개혁이 더욱 지연되고 있으며 경제부문의 경우는 이미 대중지향적 경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를 선택하게 하는 객관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북한이 대외경제부문의 일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

다. 「내외통신」, 1992.2.20. 또한 중국 두만강국제개발관리위원회의 한 간부가 1992년 3월 25일 북한이 두만강지역 개발을 '대외개방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외통신」, 1992.3.26.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주체사상을 포함한 상부구조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토대의 일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일 것인가? 즉 경제적 부문의 변화가 주체사상과 체제의 상부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일까? 또 이러한 양면적인 정책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 김정일 체제의 정책방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 2. 金正日 體制의 定義

북한에서 김정일 승계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10월 2~15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중국의 지도층에게 “나라를 오래동안 비워두어도 김정일 비서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몇번이나 강조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은 근 보름간 중국에 체재하였는데 김일성이 나라를 비운 기간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장기간의 방문이었던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김일성의 이러한 언동에서 김정일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의 결정적인 기점이 된 것은 1980년 10월의 제6차 당대회이다. 당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의 수를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의 172명에서 248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당, 군부, 만경대혁명학원, 3대혁명소조 출신의 자기사람들을 대폭 기용하였다. 이때 기용된 신진 간부의 수는 70.6%에 달했으며 이들은 김정

7) 「中央公論」(1992.1); 통일원, 「月刊 北韓動向」(1992.1), p. 131.

일 후계체제 확립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1980년대의 전 과정을 통하여 김정일 후계체제의 강화와 간부진의 교체는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김정일은 1980년대초 이래 외교부 및 권력핵심기구인 당중앙위원회 및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을 거의 장악하였다. 1983년 4월 이후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을 제치고 당서열 2위로 부상하면서 黨·政事業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명실상부한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시작하였다.

軍部內에서도 김정일은 1985년 4월 25일 인민군창설일에 저격여단, 경비병단 등 군특수여단의 단장계급을 대좌에서 소장으로 진급, 발령낸 것을 계기로 군은 ‘金正日の軍’으로 위상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1986년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40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공언하기까지 하였다.<sup>8)</sup> 특히 지난 1990년 5월 24~26일 간에 걸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1차 회의를 통해 中央人民委員會 산하에 있던 國防委員會는 中央人民委員會와 동격의 기관으로 확대개편되었다. 김정일은 동위원회(위원장 김일성)의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정부기관내의 지위획득과 함께 군부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고 1991년 12월 24일에는 군최고사령관직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김정일 비서는 왜 아직 당총비서직과 주석직을 이양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세 가지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아직 70~80대의 원로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로들과 개인적, 이념적, 정치적 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23.

은 김일성이다. 따라서 중국의 원로 지도자가 실세로 남아 있는 한 김일성의 역할은 남아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적인 전통에 의하면 부친이 건재함에도 그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으면 불효가 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친을 잘 모시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다. 그리고 김정일로서는 親父를 축출하면서 서둘러 전면에 나설 이유가 없다.

셋째, 소련의 역대 서기장이나 중국의 모택동 당주석이 임종시까지 현직을 고수했던 것을 볼 때 김일성도 죽을 때까지 당총비서직 정도는 고수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이 당총비서직을 유지하면서 김정일을 최고 실권자로 승계하는 이원적 권력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당 우위의 권력구조에서 정무원 우위의 권력구조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확고하기 때문에 김일성이 사망하더라도 현재의 북한 권력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둘째, 김정일이 사실상의 '최고지도자'로서 당, 국가, 군부의 일상 업무를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일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김정일 체제의 시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은 후 김정일이 당총비서직, 국가주석직, 그밖의 김일성이 보유하고 있는 공식적 직위를 이양받았을 때 김정일의 권력은 더 강력해질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김정일이 군부나 제3의 인물에 견제를 당하거나 축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자연적 사망은 아직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정

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의 김정일 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김일성 사후는 부분적으로만 다루기로 한다.

### 3. 政策決定의 분석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기된 시각이나 변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분석틀을 만들고자 한다.

#### (1) 기존의 政策決定 분석모델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기존의 분석에서는 김일성·김정일 결정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누가 정책결정을 하느냐 할 때 김일성·김정일이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권과 협력을 해야겠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각은 자유화 바람의 우려 때문에 정책으로 쉽게 연결되지 못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핵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미국, 한국, 일본의 억제 때문에 마음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일본과 수교를 하겠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각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정책입안이나 결정된 정책의 집행이 김일성·김정일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중앙집권적이고 독재적인 체제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경우에서도 정책결정에 대한 김일성·김정일 결정론을 넘어서 여러가지 환경적 변수를 포괄하는 분석모델이 필요하다.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모델로 합리성(rationality) 모델, 파워 모델 등이 있다.<sup>9)</sup> 합리성 모델은<sup>10)</sup> 정책결정이란 주어진 정책대상에 대하여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관점에서 정책대안들을 평가한 결과라고 본다. 정책입안자의 최대 관심은 국가이익의 극대화에 있다고 가정한다. 주어진 정책대상에 대해서 대립되는 정책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이익이 무엇이나는 문제에 대한 상반된 정책노선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지도자들이 충분한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어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에이든 포스터 카터(Aidan Foster-Carter)가 북한 경제정책이 합리성의 위기에 빠졌다고 한 말은<sup>11)</sup> 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대한 보다 적합한 접근법은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덧붙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인들이 무엇이나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도표-1>참조).

파워모델은<sup>12)</sup> 정책결정이 대립하는 지도자들간의 투쟁의 결과로서 산출된다고 가정한다. 지도자들이 정책대안을 인식하는 방법이

- 
- 9) Kenneth Lieberthal and Michel Oksenberg, *Policy Making in China: Leaders, Structures, and Proces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10) 이 모델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s: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1971).
  - 11)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1).
  - 12) 파워모델을 정책결정과정 분석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Roderick MacFarquhar,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2 Vo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and 1983); Lucian Pye, *The Dynamics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Oelgeschlager, Gunn, and Hain, 1981).



란 그 정책대안이 자기파벌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본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모델은 큰 효용성이 없다. 북한에서 파벌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현재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엘리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로 새롭게 충원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의 경우 혁명 1세대 엘리트가 선택하는 정책대안과 기술관료출신의 엘리트가 선택하는 정책대안은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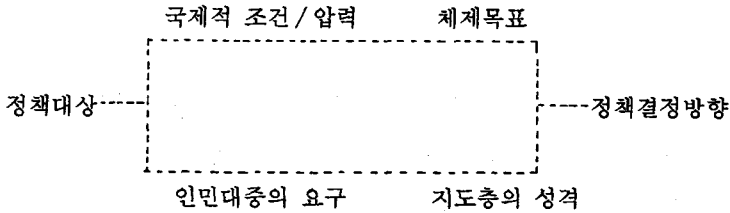
## (2) 代案的 모델

지금까지 살펴본 합리성 모델 및 파워모델과 세계체제이론 등의 사회과학 일반이론은 경제정책결정 분석에서 고려해야할 변수를 제시하여 준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국제적 조건, 지도층의 성격, 인민대중의 요구, 그리고 체제목표이다. 우선 정책결정을 해야할 정책대상이 주어지면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일수록 국제적 조건의 압력을 받는다. 그것은 정책결정의 내용과 방향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북한이 사회주의권에 치중한 대외무역을 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권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枯死시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한 봉쇄정책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결정은 또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지도자와 엘리트의 성격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주어진 정책대상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국제적 압력, 밑으로부터의 요구, 체제목표를 어떻게 다르

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1〉 정책결정 분석틀



정책결정은 인민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위로부터의 억압으로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통제할 수 있었으나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면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여 억압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북한에서도 어찌면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지도층에게 가장 두려운 중요한 변수인지 모른다.

정책결정은 국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책노선 또는 체제목표의 영향도 받는다. 소련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군사대국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대내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경제성장 위주로 정책노선을 변경하고 기존의 무기를 판매하거나 폐기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체제목표는 정책결정의 준거들이 된다. 체제목표는 물론 지도층의 정책적 성향, 국제적 환경, 인민의 요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국제적 조건, 지도층의 성격, 인민대중의 요구, 그리고 체제목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전부가 아니다. 판료체제의 성격이라든지 문화적 전통과 같은 변수도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위의 네 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김정일 체제의 정책방향을 분석하는 틀로 삼고자 한다.

#### 4. 金正日 體制的 政策決定 環境變化

위의 정책결정의 분석틀에서 제기된 변수들이 현단계 북한 경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에서 현재 그리고 김정일 체제에 어떠한 방향의 정책이 선택될 것인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환기에 놓여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세계질서의 재편에 적응해야 하며 또 한편 김일성 이후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심대한 내외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은 경제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외적 관계에서 교섭력을 잃어 체제안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군부나 밑으로부터의 도전의 가능성이 심화될 것이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들의 붕괴는 경제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체제의 정당성을 잃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鄧小平을 중심으로한 중국의 개혁파들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제개혁의 실패에 있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鄧小平은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체제전복위협(和平演變)이 아니라 인민들

의 경제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기 보다 인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체제전복의 위협이 없어진다고 보고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을 심화시키며 개방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sup>13)</sup>

북한의 경제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특히 제2차7개년계획(1978~1984)이 실패함에 따라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하였다. 제2차7개년계획이 진행중이던 1980년에 ‘수출확대대책’을 마련하고 수출의 해로 정하였으며 수출상품 우선생산, 포장 및 품질개선, 수출입 다변화 및 다각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1984년에 제2차7개년계획을 끝내고도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을 시작하지 못하고 2년간이나 조정기를 두면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때 나온 개혁이 1984년 8월 3일부터 시작된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며 같은 해 9월에 채택된 합영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자력갱생전략 자체의 비효율성에도 기인하며 또 한편으로는 경제협력의 파트너였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침체와 체제붕괴에 기인한다. 북한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규정할 요인들의 變移內容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3) 신상진, 「중국의 개혁·개방심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2-3); 「동아일보」, 1992.2.29.

### (1) 周邊環境의 變化

북한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의 주요 변화는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권의 붕괴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련의 붕괴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무역의 50%를 차지하던 소련과의 교역량은 1991년에 전년대비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말았다. 북한의 주요 기술공여국이었던 東獨은 서독에 흡수·소멸되었다. 이러한 대외경제 협력관계의 급변은 북한으로 하여금 종래의 자본주의권과의 관계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한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보다 후진적이었던 한국이 고도성장으로 북한을 크게 앞지른 것은 아시아의 네 NICs와 같이 수출주도의 대외개방적 발전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여러나라들이 한국을 포함한 NICs의 수출주도전략을 채택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한 것은 북한에도 수출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고 있다. 최근 남북한 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채택 등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72년의 남북한 7·4공동성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다시 70년대 초반에 시도되었던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sup>14)</sup>

14) 林陽澤, “북한경제의 개방 및 개혁전망,”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3권1호 (1991,봄), p. 87.

세번째, 일본과 한국의 압력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자본을 북한에 진출시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방하여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켜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정치적으로는 자유화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체제를 개방시키려 하고 있다.

네번째,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최근 중국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중국이 공식참가하면서 북한과 중국간의 동맹관계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개방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내세우는 중국이 결국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고 이같은 토대위에 韓·中 修交도 시간문제일 뿐 제어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느끼고 있는 듯하다.<sup>15)</sup> 중국은 이념적으로 북한과 동질성을 유지하며 정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무역관계는 정치적 유대와는 달리 경제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경제지원 호소에 중국식 경제개방 권고로 대응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중국식 경제개방 모델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sup>16)</sup>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는 북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개혁파들은 동구 및 소련 몰락의 원인이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경제우선 정책으로 선회하여 사상을 해방하고 경제의 개혁·개

15) 陶炳蔚, 「민족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1991.11.15).

16) “고영환증언,” 「서울신문」, 1991.10.30.

방을 확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북한에 미칠 영향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개혁은 保·革의 갈등을 수반할 것이고 개혁파의 승리는 보수파의 세력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강조해 왔던 보수파 지도자들의 입지가 약화되면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개혁파의 입지가 대폭 강화되어 북한에 대해서 개혁파 개방의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sup>17)</sup> 둘째, 중국이 더욱 사상적으로 해방되면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자유화 바람이 스며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으로서는 정책선택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 (2) 北韓 權力엘리트의 性格 變化

김정일체로의 권력승계는 한 개인의 승계일 뿐만 아니라 혁명세대에서 비혁명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의미한다.<sup>18)</sup>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엘리트도 대거 세대교체되었으며 권력구조가 김정일 후계체제를 지지하는 세력들로 이미 구축되어 있다. 김정일 체제의 엘리트는 대부분이 기술관료이다.<sup>19)</sup> 그런데 이들은 紅과 專을 겸비한 신

17) 신상진, *op. cit.*.

18) Robert Scalapino, "Inter-Korean relations: prospects for the future,"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Korea: Its Political and Economic Future」, sponsored by The Asian Studies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and The Asia Society, New York, (1992).

19) 혁명 1세대 일부도 잔존하는데 이들 노간부들은 김정일을 지지하는 대가로 계속적인 지위의 유지 및 발전을 보장받았다. 최광의 경우는 독자적인 세력의 가능성이 있는 혁명 1세대 오진우를 견제하기 위해 기용된 라이벌 1세대이다. 또한 현재 2명이 담당하고 있는 부주석 자리도 실권자로서의 위치보다는 당의 革命元老들에 대한 예우적

계급(new class)임이 특징적이다.<sup>20)</sup>

당의 권력중추인 정치국은 1990년 12월 현재 15명 중에서 10명이 경제기술관료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은 혁명 1세대의 군출신 김철만을 제외한 9명 전원이 경제기술관료 출신이다. 또 黨의 비서국은 12명의 비서 모두가 경제기술관료로 채워져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성분비율을 보면 박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 지식인의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982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의 7기와 1990년 5월의 9기의 학력을 비교해 보면 인텔리 계층은 1982년의 49.4%에서 1990년에 64.5%로 증가했으며 대졸의 비율도 82년의 50.4%에서 90년에는 68.2%로 상승했다.<sup>21)</sup> 또한 현재 김정일이 이끌고 있는 10명의 당중앙위 비서들은 유학 또는 해외여행을 통해 잘 훈련된 50대 중반의 당관료 출신들이다.

북한이 점차 고립에서 벗어나 외국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이미 현재의 문제는 黨性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령 외교정책에서는 김영남과 강석주가 분석한 내용을 고성순이 유려한 필체로 정리하여 김정일에게 올리면 외교실무 능력이 없는 김정일은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곧장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어 시행된다는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도 김정일 비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박남기 경제계획담당비서, 전병호 중공업담당비서, 한성룡 기

---

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20) 도홍렬, “엘리트 형성과 순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21) 남문희, “북한의 권력이동,” 「시사저널」, 1991.5.2.



계·금속담당비서, 서관희 농업담당비서, 그리고 김달현(대외무역), 김복신(경공업), 김환(화학공업), 김창주(중공업), 정무원 경제부총리 등의 경제브레인에 의존하는 편이라고 한다.<sup>22)</sup>

군부엘리트에서도 성격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군부엘리트 역시 혁명 2세대가 대부분이다. 오극렬을 비롯한 혁명 2세대와 김정일 사이의 결합은 김일성과 빨치산 동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념중심의 공감대와는 다른 이익중심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23)</sup>

체제유지를 위해 사상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만 실제 정책면에서 이러한 경제기술관료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향하여 정책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紅과 專을 겸비한 신계급(new class)이기 때문에 개혁지향적이라고 해도 체제도전이 아니라 기존체제의 틀 내에서 개량을 추구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sup>24)</sup>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권력엘리트의 대부분은 이미 전문기술관료 엘리트로 전환했다. 이러한 권력엘리트의 특징은 다음의 정책방향을 시사한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권력엘리트라면 이념에 의한 통제보다는 경제성

---

22) “고영환 증언,” 「서울신문」, 1991.9.28.

23) 차두현, “김정일 권력승계체제와 북한군부: 최고인민회 제9기 1차회의의 결과를 중심으로,” 「국방강론」, 제2집 (1990.9), p. 378.

24) 지난 1987년 인민경제대학 공업경영학부 강좌교원들이 중국식 가족책임제 농업방법(일종의 토지임대제도)의 도입을 건의, 테크노크라트의 한 사람인 김환 화학 및 경공업위원장이 이를 김정일에게 올렸다가 김정일의 분노를 사 서열 10위에서 50위로 내려앉은 적이 있다. “고영환 증언,” 「서울신문」, 1991.10.1.

장에 의한 물질 기초를 통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스칼라피노(Robert Scalapino)도 김정일의 정치적 정통성은 經濟的 治績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25)</sup>

### (3) 人民의 要求水準의 變化

1945년 이후 북한사회에서 일어난 큰 변화의 하나는 우선 혁명세대의 死滅과 혁명후기세대로의 교체이다. 6.25전쟁(1953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명세대라고 불리는 전쟁전에 태어난 사람은 21.5%에 불과하다. 엄격히 말하여 일제기간 동안 항일운동에 참여했거나 6.25 전쟁기간 동안 ‘美帝’와 싸운 경험이 있는 세대(6.25 당시 10세 이상을 포함하면 현재의 50세 이상)를 혁명세대라고 한다면 그들은 12.1%에 불과하다.<sup>26)</sup> 이것은 북한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혁명 2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혁명 2세대는 일제의 지배, 전쟁,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혁명세대에 비해 대체로 사상성과 혁명성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지도부의 표현에 의하면 “학생 등 새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黨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물들기 쉽다”는 것이다.<sup>27)</sup> 언론매체에 자주 지적되는 바와

25) Robert Scalapino, *op.cit.*, p. 6.

26)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4 Census, Washington, D. C. (July 11, 1990).

같이 북한의 새세대는 강력한 체제유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黨性和 혁명성이 약한 것은 북한사회의 기존체제유지에 도전적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새세대는 혁명세대보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더 참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의 경제적 곤란은 김정일에 대한 불만으로 직결되고 있다. 1970년대 초에는 북한이 잘 살았는데 김정일이 등장한 7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인식하며 그것은 “철없는 아이가 정치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김정일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주민들 역시 상층부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지만 김정일에 대해서는 불만 및 비판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이 1972년에 후계자로 등장하고부터 평양시 건설과 대규모 상징적인 혁명전적비, 80년대 초에 준공된 「인민대학습당」, 「창광거리」, 「창광원」, 「평양산원」, 「평양제일백화점」, 「만경대 유희장」, 「빙상관」, 「청류관」, 「주체사상탑」, 「개선문」, 「국제친선박물관」 등 20여개가 넘는 이른바 「대기념비적 건조물」을 비롯하여 41층짜리 아파트 건립(2동), 「김일성경기장」 확장(「모란봉」경기장을 5만명에서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확장), 105층짜리 류경호텔 등은 결국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비경제적·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상품 생산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건설추진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사정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인정한다고

---

27) 「로동신문」, 1991.6.5.

한다.<sup>28)</sup>

김일성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인데 김정일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경제적 실책을 김정일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의 관점이야 말로 '절대성'을 초월하는 관점의 첫 출발이 된다. 정보통제 때문에 외부와 직접 비교가 어려워도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의 준거들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사유를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김정일이 경제문제를 크게 개선하여 김일성 시대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기 전에는 북한에서 사회적 불만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김정일 체제에게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정책대안을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

#### (4) 體制目標의 變化

체제목표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국제환경, 지도층의 성격, 인민의 요구에 의해서 규정되는 종속변수이다. 그럼에도 체제목표는 북한체제의 기본적인 지향방향을 지칭한다는 측면에서 下位政策을 규정하는 독립변수(엄격히 말하면 매개변수)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매우 중요한 체제목표의 하나로 추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남적화통일이 이데올로기적 측면으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체제의 중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한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인식하고 나서부

28) 통일원, 「통일속보 91-21」, 1991.7.23.

터 한국에 대한 전략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태도변화를 그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영환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남북관계에서 경제위주의 실리주의로 이행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는 경제전문가 윤기복이 당중앙위원회 대남담당비서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sup>29)</sup> 이것으로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의 경제력으로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체제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체제붕괴시 한국에 흡수통일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先經濟成長 後赤化統一이라는 논리로 일단 수정된 듯이 보인다. 체제 목표의 이러한 변화는 산업구조와 성장전략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1984년 이후 경공업 혁명, 인민소비품생산운동 등을 주도하면서 중화학공업 우선전략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그것은 대규모 군사력 유지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방향과 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체제의 固守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체제목표이다. 부분적인 대외경제개방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강화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는 모순적이며 또 한편 북한식 체제수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사상의 이완이나 외부정보의 유입을 조장하는 개혁·개방은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의 상호작용이 북한식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29) 「서울신문」, 1991.10.16.

## 5. 金正日 體制의 經濟政策方向

1978년 이후 중국이 개혁을 시작한 이래 북한에서도 1980년대 들어서 이미 자력갱생 원칙의 경제정책에 한계를 인식하고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다. 1984년 8월 3일에 시작된 8·3인민소비재생산운동, 1984년 9월에 채택된 합영법 등은 사회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종의 개혁적 조치였다. 8·3인민소비재생산운동은 중앙계획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시장주의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었다. 합영법은 자본주의권과 합작을 시도하고 합영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조선합영은행을 설립·운영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개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공통점은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도입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에 동화적이며(assimilable), 개혁적 특징을 일반대중에게는 감추었다는 점에서 숨은 개혁(hidden reform)이었다.<sup>30)</sup> 과거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미래에도 북한은 동화적이고 숨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sup>31)</sup>

30) Hy-Sang Lee, "The economic reforms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s,"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h Int'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 sponsor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91).

31) 이러한 개혁방식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一個中心, 二個基本點」의 원칙하에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이 원칙은 1978년에 덩소평이 개혁을 시작할 때 부터 최근까지 견지되고 있다. 199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70돛 기념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은 "우리는 중국의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며

### (1) 輸出擴大政策으로의 轉換

북한은 경제발전전략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자력갱생전략에서 수출산업확대로 전환한다는 정책의 가닥이 잡혔으며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확대전략이 본격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의 경제발전은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숨은 개혁'의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 가.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지도부의 認識變化와 수출확대정책이 채택된 경과

북한이 경제정책에서 대외무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수출품의 우선생산 및 품질향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터이다.

현시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우리는 앞으로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물건들을 대외시장에 적극 내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때에 들여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수출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까.<sup>32)</sup>

---

중국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체제, 문화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강택민, "중국 공산당창건 70돐 기념집회에서 한 연설," 「근로자」(1991년 10호).

3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80. 10.10).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 공포하는 등 극히 부분적으로나마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고, 제3차7개년계획(1987~93)에서 무역증대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책적 측면에서 대외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과는 달리 자력갱생적 통제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대외무역을 수행해 왔다. 그 동안 북한의 수출정책은 '수입을 위한 수출'의 원칙에 입각해 있었으며 대외무역을 하면서도 사회주의권내의 구상무역 형태에 치중했고 '주체적인 대외무역정책'에 기초해 왔다.<sup>33)</sup> 최근 무역부장 김달현도 "대외무역을 철저히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복종시키며 자립적 민족적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여 왔으며...이 때문에 항상 외화사정이 좋지 않았다"<sup>34)</sup>고 지적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수출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수출정책에서 대폭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시도를 시사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길은 대외무역과 수출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부 원료, 자재

33) 1967년 12월 김일성이 발표한 '10대정강' 뿐만 아니라 대외개방화로 정책노선을 전환한 1984년 1월의 발표내용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의 의안 "남북협조와 대외무역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것에 대하여")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다.

34)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1989년 2호), p. 61.



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된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있는 풍부한 부원자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다...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은 수출을 첫 공정으로 선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 수출을 늘여야 그만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사올 수 있으며 수입물자의 일정한 예비도 조성할 수 있다. 수출을 늘이는데서 기본방향은 가공공업을 발전시켜 완제품, 가공품의 수출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수출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가공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함께 새로운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야 한다...수출을 늘이기 위한 사업은 튼튼한 수출품생산기지와 수송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된다...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sup>35)</sup>

이러한 인식은 한수길 무역부부장의 논문에서도 되풀이 나타나고 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수출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이다...수출품생산을 맡고 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수출품생산에 모든 것을 복중시키는 원칙에서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수출품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수출을 적극 늘여야 수입원천을 늘이고 대외지불능력을 높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대로 사올 수 있으며

35) *Ibid.*, pp. 61~64.

수출과 수입간의 균형을 옹계 보장할 수 있다.<sup>36)</sup>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1980년 부터 나타나던 내용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최근에 와서 더 구체화되어 강조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겠지만, 매우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나. 輸出擴大를 위한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의 최근 政策決定 內容

최근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무역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무역확대에 관한 새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은 1992년 2월 13일에 개성시 당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토의되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대외무역발전이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을 높이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무역활성화 방안으로서 수출품 생산기지 조성과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대를 촉구했다. 각공장·기업소별로 가공무역사업의 강화, 모든 경제부문에서 수출품직장, 수출품작업반을 꾸려 한 가지 이상의 수출품을 생산하도록 촉구했다.

이 회의는 또한 개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중의 하나인 개성인삼의 생산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인삼재배면적의 확대, 과학기술적인 인삼재배관리, 효율적인 인삼가공 등을 강조했다.<sup>37)</sup>

36)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 「근로자」(1991년 4호), p. 71.

이후 2월 26일에 정무원 결정이 있었는데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변천된 현실에 맞게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대외무역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을 첫자리에 놓고 수출품부터 먼저 생산하여 내보내는 원칙을 지키며 수출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수행에 대한 총화사업을 잘해야 한다<sup>37)</sup>

북한은 이번 정무원 결정에서 ‘전면적’, ‘대대적’ 등의 용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대외무역 증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북한의 대외무역 실상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한 바탕위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가까운 몇해 사이에 도달해야할 수출목표액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출품의 품종과 물량확대, 수출시장의 개척, 가공무역의 강화, 수출품의 질적제고, 관련기관 및 종사자들의 역할강화 등을 제시했다.

가공무역의 강화문제와 관련해 이 결정은 그 동안 수출 주종품목이었던 천연자원 등의 1차산품 수출을 최대한 지양하고 대신 이들을 반복적으로 가공한 가공제품의 수출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수출품의 질적 제고문제에 대해서는 상품의 질과 함께 상품구매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품포장을 개선하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무원의 결정은 “전반적인 수출품의 질과

37) 「중앙방송」, 1992.2.17.

38) 「민주조선」, 1992.2.26.

포장에서 1~2년 사이에 국제적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출품 생산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통한 기술기능 수준향상, 포장용지·포장자재 생산기지의 확대강화, 포장형식과 상표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sup>39)</sup>

#### 다. 수출확대를 위한 구체적 政策 推進現況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정책사례들은 UN가입, 일본과의 수교추진, 남북한의 관계개선, 대미접근 노력 등 일련의 대외정책들에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先鋒·羅津 자유무역지대의 건설과 유엔개발기구(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주관의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이다. 북한은 先鋒·羅津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미 외국인 기업법, 기업소득세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출입국 등 모든 관련 법규들을 1993년 상반기까지는 정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개발기구 주관으로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이 참여해 이루어지는 두만강개발 국제협력위원회는 1993년 7월쯤 고위 정부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북한의 움직임은 내부적인 법률 및 제도의 정비를 이러한 일정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은 일본 기자들에게 선봉·나진 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법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항만개발 및 확장과 철도, 도로건설 분야에 대한 일본의 투자, 경공업·전자공업부문에의 일본 기업진출을 초청한 것으로 보도되고

39) 「내외통신」, 주간판, 787호 (1992.3.19).

있다.<sup>40)</sup>

라. 수출산업발전에 소요되는 生産要素의 조달방법, 貿易의 형태

북한은 자본과 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들 특히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들여오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결합하는 합영·합작을 생산요소의 동원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 합작을 널리 진행하여 대외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질을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한다.<sup>41)</sup>

일본의 고도의 기술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활용하고 싶다. 보상무역, 합병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면 상사간의 거래를 추진하고 싶다.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sup>42)</sup>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는 수출품생산기지를 전망성 있게 꾸려나가야 한다.<sup>43)</sup>

40) 「한겨레신문」, 1992.2.27.

41)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 *op.cit.*, p. 71.

42) 김달현, “일본의 日·朝 무역회장과의 대담,” 「시사저널」, 1991.5.2, p. 48.

43)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 *op.cit.*, p. 71.

한수길 무역부부장은 외화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상(바터)무역과 함께 전매무역, 가공무역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개발기구 주관의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가공무역, 전매무역 증진의 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마. 北韓이 지향하는 貿易 파트너

북한은 지금까지 사회주의권에 치중했던 대외교역을 자본주의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외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최우선 무역의 파트너를 일본으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관계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나라들과는 물론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무역거래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김정일)<sup>44)</sup>

북한의 한수길 무역부부장은 종래 사회주의 국가간 무역제도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북한도 경화결제와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교역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우선 무역파트너로 아시아국가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를 지목했다. 이는 중시해야 할 무역대상국 순서로 사회주의 국가, 발전도상국,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sup>45)</sup> 실제로 북한은 작년 한부부장의 주장을 채

44) 한수길, *op.cit.*, p. 71.

45) *Ibid.*, p. 71.

택,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역량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순이 최근 「근로자」에 발표한 글에서 북한의 외교정책의 변화의 내용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아세아나라들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을 적지않게 가지고 있다. 아세아나라들은 호상리익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경제, 기술, 문화적 협조를 실현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변영하는 새 아세아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할 것이다.…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아세아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변영하는 새아세아를 건설해 나갈것이다.<sup>46)</sup>

북한은 일본을 수출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일본과의 수교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달현의 글에서 잘 시사되고 있다.<sup>47)</sup>

대일 무역은 우리나라의 수출여력이 작기 때문에 크게 신장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여력을 확대하는 것은 양국간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이다. 이제부터는 대외무역의 지도사상을 수출에 두고 수출산업의 확대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우리는 양국의 신속한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바라고 있으며 국교정상화후에도 일본과의 거래를 점점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sup>48)</sup>

46) 한수길 “평화롭고 변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는 것은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 「근로자」 (1991년 8호), p. 27.

47) 남북한관계 개선이나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은 일본과의 수교추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수교를 위한 보조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노동력에 대한 중앙의 강력한 통제가 외국자본을 끌여들이는 수출주도전략에 좋은 조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난제로 남아있다.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미 외국인 기업법, 기업소득세법안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외국인출입국 등 모든 관련 법규들이 1993년 상반기까지는 정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합영법의 한계를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수출확대전략의 성공여부는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핵문제로 교착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 미국이 핵문제가 해결된 후 남북한 및 북한·일본 관계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에 의하면,<sup>49)</sup> 미국의 새로운 패권주의 전략은 제3세계의 배신적 소국가들의 존재를 과장하여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새로운 적대국의 부상을 봉쇄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에 진출하여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의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의 북한진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도 동시에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수출확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과 남북한간 經協의 발전은 크게 제한을 받을 것이다.

48) 김달현, "일본의 日·朝 무역회장과의 대담," 「시사저널」, 1991.5.2, p. 48.

49) Bruce Cummings, "한반도 평화의 장애요인," 고려대학교평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3.30).



## (2) 南北經協 強化

북한은 남북관계도 경제위주의 대외무역정책과 상당부분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모든 남북관계가 핵문제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지난 3월15일 남북간에 핵사찰의 일정을 대체적으로 합의함에 따라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사히신문과의 회견에서 김일성은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으며 김용순은 가능한 빠른시기에 하겠다고 말했다.<sup>50)</sup> 이것은 수출확대를 가장 시급한 경제회복과 사회주의 체제수호의 전략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면 예상한대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영환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남북관계에서 경제위주의 실리주의로 이행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는 1990년 1월에 윤기복이 당중앙위원회 대남담당비서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윤기복은 모스크바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 인민경제대 교수(1956), 재정상(1967), 국가계획위 위원장(1969),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 제1부위원장을 10년 가까이 지낸 경력이 말해주듯 북한의 대표적 경제전문가이다. 공작전문가 아닌 경제전문가가 당중앙위 대남담당비서가 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시사적이다.

윤기복은 지난해 12월 13일 남북합의서를 탄생시키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서울의 북측대표단을 원격지휘하는 등 남북대화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윤기복의 스카웃에 대하여 외교부 직원들은 “결국 앞으로 남조선과의 대화전략이

50) 「한겨레신문」, 1992.4.3.

경제중심으로 세워지지 않겠느냐, 경제이론가인 윤기복이 남조선에서 주는 각종 경제적 호의를 마지못하는 척 하면서 최대한 수용, 경제를 일떠세우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sup>51)</sup> 윤기복을 대남담당 비서로 내세워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 체제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정주영이나, 김우중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대규모의 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온 것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남북간 경제교역량이 크게 늘면서 경제부문의 남북 교류 활성화가 엿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윤기복의 대남담당비서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2)</sup>

1991년 한해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진 물자교역액은 총 1억9천2백17만달러 (이중 반입액 1억6천6백만달러, 반출액 2천6백18만달러)로서 90년의 2천5백8만5천달러에 비해 약 8배가 신장되었다고 상공부가 발표했다.(1991년 1월 20일). 이것은 한국이 소련,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4번째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한간의 합작투자와 교역상담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남북한 경제인간의 접촉은 총 118건으로서 1990년의 11건보다 무려 10배이상 늘어났다. 교역에 참가한 업체도 130개사로서 1990년의 36개사에 비해 3.6배가 늘어났다. 반입건수는 총 328건으로서 90년의 75건보다 4배 늘었으며, 반출건수는 40건으로서 90년의 4건의 10배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반출의 경우 화학제품 1천1백40만달러, 섬유직물 7백20만달러, 가전제품 1백56만달러 등이

51) 「세계일보」, 1992.3.18.

52) “고영환 증언,” 「서울신문」, 1991.10.16.

주류를 이루었고, 반입품목은 비철금속과 철강재 7천2백80만달러, 공산물, 수산물, 농임산물, 생사 등 1차산품 위주로 되어있다.<sup>53)</sup>

이와같은 최근 남북간의 교역은 다음 몇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엄청난 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둘째, 반입중심이던 교역이 점차 반출이 늘어남으로써 교역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셋째, 교역의 품목이 상호보완적이며, 넷째, 품목이 다양화되고 참여하는 업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에서 직교역이 늘어나고 있다. 핵사찰 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1992년을 기점으로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합작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의 교역 이상으로 북한은 남한 기업인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방북에서 알 수 있다. 김우중 회장은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의 이름으로 공식초청되어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으로 갔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북한 방문기간중 김일성을 비롯해서 연형묵 총리, 김달현 부총리, 그리고 전자, 무역, 광업, 재정, 중공업, 봉제, 수산, 기계, 금속 등 12개 경제관련부서의 부부장들을 만났으며 이들은 소속기술자들까지 대동하고 나와 북한의 산업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리원 면방직공장, 평양선교피복공장, 모란봉TV공장, 덕천승리자동차공장, 평북구성공작기계공장, 황해은파고나산, 송남탄광, 원산수산물 가공공장과

53) 「내외통신」, 주간판, 783호 (1992.2.21).

해주 및 남포지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중 회장은 봉제의류 등 12개 분야의 합작사업을 포함한 경공업합작공장 설립과 북한내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그리고 제3국에 대한 건설 및 제조업의 공동진출이라는 3개의 협력사업을 북한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남북한의 합작사업을 위해 남포에 2백만평 규모의 남북합작기계 전용공단건설 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는가 하면 TV브라운관, 냉장고 등의 공장건설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남포공단에 와이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신발, 메리야스, 면방, 봉제, 완구, 양식기 등 9개공장을 합작으로 짓기로 하고 각 품목별로 연간 생산능력까지 확정했다고 하는 사실들은 남북교류의 전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sup>54)</sup>

그 밖에도 한국의 30여개 재벌들이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 코오롱상사와 북한과의 합작이 그 첫 사례이다. 코오롱이 1990년말 양말제조기계 2백50만달러치를 북한에 수출했다. 북한에 양말생산기계를 공급하는 대신에 완제품 양말을 받아 이를 유럽지역에 수출해서 기계판매대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되사기(buy back) 방식을 지난해에 처음으로 성사시켰다.

럭키금성은 가전제품, 생필품, 경소비재품목 등을 생산하는 합작공장건설을 추진중이다. 최근에는 봉제완구의 임가공에 착수했는데<sup>55)</sup> 지난 연말 북한 국영무역회사의 제3국지사를 통해 북한으로 봉제완구용 원부자재를 시범사업격으로 7천1백60달러치를 보냈

54) 「내외통신」, 주간판, 783호 (1992.2.21).

55) 「한국일보」, 1992.2.15.

다. 최근 북한에서 이 원부자재를 사용해 제작한 견본을 받아본 결과 품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측의 생산수율에 따라 사업의 확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1990년 홍콩과 미국지사를 통해 북한에 극비리에 양말 플랜트를 수출, 대북합작가능성을 타진했다. 최근에는 전자(칼러 TV 및 부품), 섬유(의류), 신발(운동화) 등의 3개 합작공장 설립에 관한 도상계획을 끝마친 상태이다. 투자규모가 공장마다 2~3백만달러 정도이며 북한의 대성무역 등 관련 무역업체와 합작할 계획이다. 북한과 50대50으로 투자하고 경영권은 삼성이 갖는 것이며 투자지역은 평양과 청진지역이다.

현대는 원산철도차량 합작과 금강산개발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은 연육가공공장 합작을 추진중이며, 효성은 직물, 신발, 봉제 등의 합작공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호남정유는 잉여설비의 북한이전을 추진중이며 한국강관은 북한에 연산 8만톤 규모의 강관공장을 추진중이다. 이들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있으며 기회만 주어지면 구체적인 추진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sup>56)</sup> 그러나 북한의 핵사찰 문제 때문에 모든 계획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 (3) 군축 및 군수산업의 民需化와 輕工業革命

북한이 1962년 12월 소위 '국방에서의 자위'를 선언하고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더 나아가 1966년에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군수산업부문에 막대한

56) 「신동아」 (1991.10); 「매일경제신문」, 1992.1.11.

투자를 하여왔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1967년부터 군사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표에서는 1972년 이후 군사비를 17%이하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군사비를 증대시킨 결과 인민경제비 지출에 크게 차질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둔화, 나아가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어려움을 초래하자 주민들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 1972년부터 실제 군사비규모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발표대로 인민경제비가 증가했다면 실질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율의 증가는 없었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1988년 현재 군사비는 GNP의 22%,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7)</sup>

<표-1> 북한정부의 세출구성비

년 도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 사 비	기관관리비
1966	68.5	17.2	10.0	4.2
1967	49.9	17.5	30.4	2.2
1968	48.9	17.3	32.4	1.8
1969	47.5	19.7	31.0	1.8
1970	47.3	19.9	31.0	1.8
1971	44.2	22.9	31.1	1.8
1972	55.5	25.4	17.0	2.1
1973	57.2	25.3	15.4	2.1

출처: 이석호, "북한의 군비통제정책," 「국제정치논총」, 제29집1호 (1989).

57) 이석호, "북한의 군비통제정책," 「국제정치논총」, 제29집1호 (1989), p. 178.

군사부문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투자 결과 북한의 군수산업은 북한산업중에서는 대외적 경쟁력이 가장 높은 산업이 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무기수출을 본격화하여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결과 현재 세계의 주요 무기수출국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의 무기수출액은 1988년의 경우 4.7억불로서 북한 군수산업 연간생산액 추정치의 32% 수준이다. 북한의 무기수출대상국은 중동국가로서 약 90%(1981~85년 기준)를 중동에 수출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작년 한해동안 모두 2억 6천7백만달러치의 무기를 중동에 수출해 미국(30억3천3백만달러), 유고슬라비아(5억1천2백만달러), 프랑스(4억2천6백만달러)에 이어 세계4위의 중동무기수출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동무기수입국 중에서 시리아가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스커드 C미사일 100기와 20대의 발사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이 미사일임을 보여주고 있다.<sup>58)</sup>

〈표-2〉 북한의 군수산업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북한	세계평균	개도국평균	한국	미국	소련
무기수출 / 총수출	19.6% (81-88:26.2%)	1.7%	0.9%	0.3%	4.4%	19.3%
무기수입 / 총수입	32.3% (81-88:25.7%)	1.7%	5.6%	1.2%	0.2%	1.0%

자료: US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of Arms Transfer* (1989).

〈표-2〉는 군수산업이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북한만큼 군수산업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 평균 1.

58) 「조선일보」, 1992.3.15.

7%에 비하면 북한의 군수산업은 총수출의 19.6%를 차지하며 총수입의 32.3%를 차지한다.

북한군사비의 과도한 지출과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군수산업의 중요성은 남북한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과도한 국방비의 경제적 부담과 또 한편 군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서 경제발전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군축을 추진하며 군수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것은 중국과 소련에서 처럼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기본적인 대안으로 본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군사훈련을 감소시킨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류난 등의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고 경공업발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산업에 직결되는 중화학공업에 투입하던 자본을 경공업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두번째의 해석은 병력규모나 군사훈련은 축소하되 기왕에 가장 높은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군수산업을 존속시켜 무기수출을 지속하여 외화획득을 계속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북간에 추진하고 있는 군축이 군수산업의 폐기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퇴조해가면서 무기의 판로가 퇴조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생활필수품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방지하고 군수산업을 강화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두가지 해석 중 어느 쪽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더 관측하고 연구할 과제로 남는다. 그런데 남북합의서와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군축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은 주목할 만하다.

## 6. 結論 및 展望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북한의 정책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확대정책, 남북경협 강화, 경공업 강화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김정일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 권력엘리트들의 성격변화, 주민들의 요구변화, 체제목표의 변화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80년 이래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최근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1992년 2월 정무원 결정으로 수출확대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북한의 개혁방향의 윤곽이 밝혀지고 있다.

수출확대전략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북한은 두만강유역의 자유무역지대 등을 설정하여 일본과 한국 등의 기업과 협작을 추진중이며, UN에 이미 가입했고, 일본과의 수교, 남북관계개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노동력에 대한 중앙의 강력한 통제는 외국자본을 끌여들이는 수출확대전략에 좋은 조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난제로 남아있다.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미 외국인 기업법, 기업소득세법안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외국인출입국 등 모든 관련 법규들이 1993년 상반기까지는 정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합영법의 한계를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핵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관계의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 핵문제는 남북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북한의 최근 수출확대전략의 특징은 철저히 ‘숨은 개혁’이라는 점과 사회주의 체제에 동화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수출확대정책의 양면적 전략은 1980년대 초기 중국이 취했던 정책과 방법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마치 중국에서 1978년 이후 덩소평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자는 四個堅持(공산당 영도, 사회주의노선, 프롤레타리아독재,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것처럼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대외개방적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고수를 견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하듯이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수출산업확대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북한식 개혁·개방의 양식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북한은 이미 방식면에서 중국의 개혁·개방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개혁의 깊이와 폭에서는 중국에 비하면 훨씬 미약한 정도에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休養—服 정책으로 사상을 대폭적으로 해방시켜 정치적 동원에 지친 인민을 휴식시켜 활력을 회복시켰으나, 북한은 사상교양과 대중적 정치동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김정일 체제의 정책방향이 남북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으로는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부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양면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이러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양면적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한국에서 의도하는 방향의 사회교류보다는 자본합작을 통해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적교류는 피하면서 경제교류는 본격화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교류를 하더라도 현재의 재미교포 방문처럼 '지도받는 방문'에 한정하여 자유화 바람의 유입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특구에 기초한 수출확대전략이 북한의 사회구성의 양대 기둥의 하나인 주체사상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경제특구건설로 외자가 도입되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운영될 기업에 충원될 노동자들과 중간 및 고급 관리자들과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된다. 경제특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종신토록 그 지역에 가두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특구와 사회주의 본토간의 인구이동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자본주의적 바람과 외부의 정보를 북한사회 전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경제특구에서 시행되는 물질적 유인동기와 업적주의가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물질적 동기와 관심이 주체사상의 이념을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식량과 생필품의 배급제 하에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수령의 개념이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특구 안에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봉쇄하기 위해서 특구안에서도 기존의 북한식의 배급제와 임금체계를 고수한다면 노동생산성 저하의 우려 때문

에 다국적 기업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외자에 의존하는 경제특구제도와 상품을 해외에 수출해야 하는 수출전략하에서는 자력갱생과는 달리 외부의 압력에 매우 취약해진다. 중국의 新華社 통신과 북경방송이 지적한대로 북한의 두만강지역개발은 대외개방의 시발점이 되어 주체사상의 점진적인 퇴색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개념만 남고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은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령의 상징인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정치적 개혁은 지연시키고 경제적 개혁은 촉진하는 것이 지도층의 의도이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경제적 개혁의 여파가 주체사상을 약화시켜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빈 면

## 第 2 會議 討論

김갑철: 상당히 많은 양의 논문인데 잘 요약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먼저 朝鮮日報의 도준호 선생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준호: 좋은 글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가 말씀하신대로 북한체제는 金正日 중심체제로 바뀌고, 정치적으로는 폐쇄정책을 취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점진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葛藤의 側面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갈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김일성 이후 북한체제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보면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의 기본 양대기둥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수출지향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권력의 중심은 종래의 黨에서 정무원 중심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종전보다 정무원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념을 강조하는 당과 정무원간에는 어떤 갈등이 필연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제·기술관료들이 개방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비축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1991년의 군비에산이 벌써 1965년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군과도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한스 마레츠키(Hans Maretzki)는 김일성 사후에 북한군이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 군과 김일성 이후 추진세력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일성이 사망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도 갈등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회담에 참가했던 분들은 전에 없던 갈등의 조짐에 관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김일성과 노동당의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헌법에 보완하려는 측면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짐작을 해봅니다.

다음은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정치·군사·교류분야의 세가지 중에서 교류문제를 말씀드리면 북한의 경우 경제협력에 더 치중하고 이산가족문제는 뒤로 미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교류 못지않게 이산가족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차후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 교류문제를 위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러한 점도 결국 북한체제내에서 하나의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美·日 關係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이 과연 북한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수교를 빨리 서두르고 싶어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제어하려는 입장입니다. 결국 北·日 修交에 있어서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든지 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달게 한 것도 미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美·蘇의 兩極體制가 깨지고 미국의 單極體制로 된 이상 미국 으로서는 얼마든지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근의 核問題도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교류는 급한 것도 아니고 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국연합과 중국의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독립국연합과의 우호유대관계도 종전의 소련 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최고의 盟邦은 중국이지만 韓·中 修交가 체결된다면 中國의 對北韓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이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는 여러가지 갈등을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만약 김일성이 죽게 될 경우 김정일의 능력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정일을 보는 시각은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는 측면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나 大衆性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아사히신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김일성이 10년 이상 살 수 있다면 북한의 개방체제는 좀 더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완전한 개방체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제까지 공산권에서 권력승계시 이전 정책을 계속하여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스탈린 사후에 마렌코프는 스탈린의 정책을 승계했지만 얼마가지 못하고 흐루시초프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역시 毛澤東 사후에 華國鋒이 권력을 승계했지만 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여 실패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同化的인 政治體制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실시한다고 해도 개혁·개방의 물결은 북한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근거는 권력승계의 정통성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이 언제 권력을 승계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갑철:** 다음은 충북대학의 도홍렬 교수입니다.

**도홍렬:** 논문제목은 김일성 이후의 정책방향인데 본문의 대부분이 김일성 이후의 경제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나름대로 경제정책 중심으로 김정일시대의 북한정책을 서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사회를 전망할 때 대부분의 논문들은 정치위주 혹은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북한사회를 분석하고 전망해 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指導者決定論的인 立場에서 김일성이 언제 죽느냐, 김정일의 성격이 무엇이나 또 주변인물이 무엇이나 하는 시각으로 북

한을 보아왔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한 하나의 反對論的인 立場에서 논문을 구성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논문의 내용은 결국 경제를 중심으로 북한사회를 전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내용상으로 북한은 수출주도적인 경제성장과 경제개발 정책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또 하나의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변수나 부분을 통해 북한사회를 보는 것은 바꾸어 말해 어떤 부분이나 부분의 성격을 중심으로 북한사회 전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현실과 동떨어진 오류나 착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북한사회 역시 정치·경제 기타 여러 사회부분들이 有機的인 關係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지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경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책을 전망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관련된 정치나 기타 사회분야와 연관시키면서 전체로써 가지는 특성을 보다 부각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고, 어떤 방법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럽고 부정적입니다. 발표자께서도 결국은 북한의 상황을 해결하는 정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며, 주체사상은 해이해지고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보다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채택한 정책때문에 오히려 체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결론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못된 길을 걸어 왔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당장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적어도 공산주의 정권수립 과정, 6.25전쟁, 전후복구건설 과정에서는 남한 보다 훨씬 앞서서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서 북한사회를 건설해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계체제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북한의 사회주의는 최악의 나쁜 길을 걸어왔으며, 그 결과는 지금 북한사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정치·사회문제의 근본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개방하면 망할 정도이고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했을 때 도리어 새로운 정책때문에 체제가 와해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정책을 전망하려는 과제는 이러한 兩面的인 側面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북한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현존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그 대표적인 예로 92년 1월 3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과 91년 5월 5일에 발표했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발표한 여러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노선의 기본을 제시하고 지금의 1인 공산주의 독재, 전체주의 체제를 지속시키면서 나름대로 체제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북한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는 앞으로 정책방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발표자께서는 북한체제 유지의 한 방편, 수단으로써

경제부분에서의 수출주도적인 경제개방, 부분적인 개방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북한이 대외무역이라든가 외화획득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1979년의 金日成 新年辭라고 기억됩니다.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최초로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공식거론하고 수출품 생산증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릴 것을 연설했습니다. 이후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는 대외무역의 다각화라든가 수출품의 우선생산, 품질향상 등을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84년에 합영법이 나타났고 계속해서 개방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횡수로 따져 그간 13년동안 외화획득이나 대내적인 경제회생을 위해 실시했던 무역정책과 합영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으며, 대내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수출주도의 개발독재 모델에 의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채택한다고 해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정치는 고수하고 경제는 부분적으로 개방한다는 이중적이고 상호모순적인 정책으로써는 북한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방법은 결국 중국의 길이라든가 그에 이은 자본주의 길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북한의 정책은 경제가 보완적이고 후차적인 정책이 되며 보다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관심분야는 어떻게 하면 현 1인체제, 김일성 우상체제, 세습체제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김갑철: 다음으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연세대학의 최평길 교수를 소개합니다.

최평길: 발표자께서 북한의 정책이 점차 경제적 개방, 무역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토론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정확한 실체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중요한 기본주제인 정책의 개념은 무엇이고 김일성이후의 정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김일성이후의 정치상황과 정책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소련식 정치개혁도, 중국식 경제개혁도 하지 않고 나쁜 것만 본다고 있는 고도의 혼돈속에 있습니다. 이 혼돈을 미국이나 일본이 도와줄리는 만무합니다. 미국은 지금 소련에 전혀 원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 완전히 넘어졌을 때 원조를 해주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자체내의 문제에 의해서 이제는 1945년 이후의 마셜플랜과 같은 것을 해줄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별수없이 한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련에서는 북한을 이래도 저래도 말을 듣지 않는 국제미아로 보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가만두면 국경까지 넘어와서 약탈할 변방약탈국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중국국무원 산하의 대외정책조정실장인 가우에 대사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구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1990년대의 북한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軍需産業 爲主의 중공업을 하다가 이제 겨우

民需産業의 경공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생산시설을 완전히 뜯어 없애버려야 앞으로의 수준에 어느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경제적인 비용면에서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측면과 이러한 정책을 집행할 북한체제의 기본 성격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김일성 이후의 정책방향과 흐름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조광생산능력이 50만톤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광생산능력이라는 것은 용광로가 있어서 원광석을 가지고 철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전기로를 가지고 고철을 녹여서 만드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한의 조광생산능력은 1960년대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현재 前 副總理였던 정준기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조광생산능력은 700만톤입니다. 반면 1960년대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는 포항종합제철에서만 2,100만톤, 전체적으로 2,300만톤, 내년의 광양개발을 포함하면 2,500만톤이나 됩니다. 남한에 이렇다 할만한 경제적인 지표가 없었던 1960년대에 북한은 자신만만했고 상당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우리식대로 살겠다고 할만큼 방어적입니다. 더우기 서울올림픽, 韓·蘇 修交 등 최근의 흐름속에 북한은 불안정한 자기 회의에 빠져 극도의 혼란속에서 일관된 정책이 없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정책집행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북한의 정책은 일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진흙탕에 마차 수레바퀴 지나가듯이 빠져서 빠져서 거리고 있습니다. 점진적이

고 부분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또는 보수파·개혁파들의 마찰속에서 겨우겨우 비정치적인 분야만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김일성·김정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미있는 사실은 소련이나 중국에서와 같이 북한에도 어느 정도의 개혁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東歐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극작가였던 하벨이 체코의 대통령이 되었고 서술이 퍼렝던 차우세스쿠도 처형되었습니다. 얼마전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위 위기관리 대응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보지 않았는가 하고 소련공산당 국제부의 몇 분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차세대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지도부들은 대개 세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제도권내의 노동당 핵심부분에서 테크노클래스로 성장한 사람들, 두번째는 해외경험이 많은 무역부라든가 외교관 생활을 한 중간관리층, 마지막으로 소련이나 동구권에 유학한 대학생과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60세를 전후해서 해외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테크노클래스들을 보면 중요한 사람들로 연형묵 總理, 강성상 前 總理, 박남기 당재정비서, 김용순 당국제부장, 그리고 김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연형묵, 강성산, 박남기 등은 6.25당시 체코공과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귀국해서 이들은 대기업소에서 매니저나 엔지니어를 지내다가 경제 지도일군으로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얼마전 南北對話事務局的 좌담회에서 이동복 특보게 고위급회담으로 평양에 갔을 때 연형묵

이나 여타 사람에 대해서 느낀 것이 없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특보에 의하면 평양에서 김정일 찬양축제에 관한 매스게임을 관람하던중 맨 마지막에 김정일 찬양노래가 나오는데 연형목이 별떡 일어나 나갑시다 하며 찬양노래가 있는 중인데도 모두를 데리고 나가더랍니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룹은 적어도 남북한 경제교류를 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룹들은 정치세력으로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령을 위해서라도 개혁을 하자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번째 그룹의 중간관리층은 수시로 해외에 나가서 여러 무역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체제나 모든 체제를 하루속히 대외에 개방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유학한 학생이나 군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 소련에 유학한 군인들은 매우 개혁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소련군사아카데미, 한국으로 말하면 국방대학원에 해당하는데 거기에서는 중자와 대자가 6명 내지 10명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코스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군사대학에서는 대위급 약 3백명정도가 5년 기간의 장기유학으로 1년은 소련어, 4년 동안은 보병, 포병, 기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 처음 선발될 때는 완전히 김일성의 충성에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차우세스쿠가 무너지고 엘친이 직선되는 것을 보며 무엇때문에 김일성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김정일이 집권하려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91년 6월을 기해 전원 소환되었는데, 최근에는 소련의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는 北韓軍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또다시 이들을 소련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최근 김일성은 심장병 전문가를 통해 페이스메이커를 넣었다고 보도가 되었지만 1990년대에는 自然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는 북한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기 북한은 별 수 없이 비정치적 분야의 경제개발에 치중해야 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건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되 한국에 상당히 의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굉장한 혼란의 요소가 생길 것입니다. 소련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하면 1~2년을 못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담당하는 중국 외교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2년전까지만 해도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 5년 이상은 갈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제는 1~2년도 못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유학생들은 머지않아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고 위에서 지적한 연행목이나 여타 개혁성향적인 그룹으로 연결되어 상당한 저항세력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김정일도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는 북한을 고려해서 한국도 내부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경제광역의 단일화가 있을 수 있고 김일성 사후에는 정계개편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정계개편이 아니라 남북한을 고려한 정계개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1990년대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1990년대를 위한 대구상화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갑철 : 발표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재진 : 도준호 선생께서 북한이 정책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밝혀주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잘 보완해주셨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인 김일성 이후의 정책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홍렬 교수께서는 경제결정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쓰고자 했던 의도가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논문의 제목은 김일성 이후의 정책방향입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너무나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정을 했습니다. 경제분야, 경제정책을 다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결정론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변화를 전망함에 있어 북한은 체제고수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요구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속에서 북한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수출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 북한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홍렬 교수께서 정치분야에 대해서 특히 체제고수 분야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셨는데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더이상 분석의 대상이 되지않는 常數로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정책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북한에서 체제고수라는 것은 이미 상수입니다. 다만 체제고수를 위해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 수단으로 경제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東歐와 蘇聯의 崩壞를 통해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붕괴의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입니다.

김정일의 1992년 1월 3일 담화는 담화의 전체내용이 왜 소련, 중국이 붕괴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그러한 붕괴가

북한에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인민대중이 사상이반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개조를 해야 된다는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지, 어떤 수정적인 노선을 취하게되면 역작용이 일어나서 체제가 붕괴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체제는 고수하면서 경제는 살려야겠다는 것이 북한지도층의 인식입니다. 현재 두만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정책방향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제시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조그만 기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주요 변수들을 통해 그 정책방향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결정론적인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홍렬 교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의 경제는 체제유지를 위한 하나의 보완책입니다. 그러나 체제고수를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부분적인 변화가 결국에는 북한이 의도하지 않은 바이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상부구조, 하부구조의 결정론에 기초한 도식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경제특구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보아서 북한에서 어떤 역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었습니다.

최평길 교수께서도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상당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북한을 보는 시각의 면에서 북한은 오래지 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긍정 또는 부정의 한마디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소련이 군사쿠테타로 혼란한 상황에

있을 때에 대부분의 인식은 군부쿠데타를 저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쿠데타가 저지되는 것과 또한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은 상당히 안정된 것 같으면서도 급격하게 붕괴하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것이 북한사회에 얼마만큼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지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왜 다른 사회주의 체제는 그렇게 붕괴했는데 북한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 역시 좀 더 심각하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갑철 : 방청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의 제시도 좋고 코멘트도 좋습니다.

장수련 : 南北經協強化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 겸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표자는 북한이 윤기복을 대남담당비서로 기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의 대남경제협력의 전망을 상당히 밝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문점에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북한은 '일괄합의 동시실천'을 완강히 고집하고 있고 반면 남한은 '개별합의 즉시실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질문입니다. 두번째, 발표자는 대남경제협력의 촉진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주영 회장이나 김우중 회장의 방북초청 사례를 들고 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당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부차적 타도대상인 매판자본가까지 상층통일전선전술의 차원으로 악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북측이 만약 남한과 경제협력의 순수한 필요성에서 이들을 초청했다면 기본합의서가 마련된 이 시점에

우리 기업인을 개별초청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교류협력분과위원회 등을 통해서 마땅한 기업인을 선별해 줄 것을 요청해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경제개혁이든 개방이든 당분간 그들의 경제수준이 남한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자신할 때까지는 남한이 아닌 흡수통일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제3국을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조선일보 1992년 3월 12일자 8면 “우리기업인 북한 너무 모른다”의 기사는 우리에게 상기하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조용헌: 최평길 교수께서 토론해주신 결론적인 면에 있어서 북한은 앞으로 일, 이년도 못간다는 말을 중국과 소련사람들이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치와 경제에서의 갈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東洋社會는 西歐와 달리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폭발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강조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인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김우중 회장의 말을 근거로 볼 때 북한에 있는 광물중에서 일부를 조금만 팔면 자기들의 긴급한 생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교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앞으로 적당히 움직일 것이라는 정책, 그 자체는 파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으로 볼 때 고집세고 일관성있게 나가야 파산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최교수께서 표현한대로 적당히 나간다면 파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

로 동구와 소련에서 먼저 붕괴했다는 자체가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일, 이년내에 북한이 빨리 붕괴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일평 : 발표자의 논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감하고 상당히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중국의 개혁을 모델로 이야기하셨는데 ‘개혁’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면에서 공감합니다. 최근의 마이클 옥슨버그(Michel Oksenberg)나 브루스 디킨스(Bruce Dickinson)이 쓴 논문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혁명에 대해서는 많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개혁에 대해서는 너무 연구를 안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련과 중국의 개혁을 비교하는데 있어 개혁의 유형을 분류하고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그 체제가 어떻게 붕괴·유지되느냐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개방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북한이 개방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과연 북한은 경제개혁의 의도가 있으며,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개혁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모델이라고 할까, 논문에서 지적하신 8·3소비생산운동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또한 분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준호 선생께서는 미국의 북한정책이 북한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반론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일, 3일 미8군 사령관 리스카시 장군이 국회국방분과위원회에서 한 말이라든지 태평양 사령관 라슨이 한 증언을 보면 오

히려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미국내의 국방예산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감축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소련 대신 하나의 적으로 만드는 國內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 : 코멘트하실 필요가 있으면 발표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진 : 장수련 교수의 세번째 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북한이 선호하는 것은 분명 남한이 아닙니다. 장교수께서는 제3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의 核査察 先決條件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북한은 한국의 흡수통합이나 완전 경제통합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경쟁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자본만 유치하여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얻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교수께서는 대남경제 협력문제에 관해 김우중과 정주영 회장의 방북초청을 통일전선의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북한은 南北經協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의 核問題에 상당히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이 아닌 윤기복이 대남담당비서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의미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평 교수의 북한이 과연 개혁할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개혁의도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사회주의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을 체제에 同化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 최평길 교수의 답변기회 신청이 들어와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평길: 조용헌 교수께서 저의 토론과 관련해서 북한체제가 일, 이년내에 몰락하기는 어렵다고 반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도와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의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지도통치이념이나 통치스타일로 어느 정도 유지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 북한체제의 변화에 관해 공통의 인식시각을 갖는 것은 1990년대에 상당한 정도의 변화와 위기가 있고 그것이 표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와 인식을 같이 하자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김갑철: 북한의 정책의도와 관련해서 김일성선집이라든지 연설문을 보면 그들의 혁명적이고 호전적인 독특한 사회주의 측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무엇인가를 의도했다고 해서 환경과 시스템의 능력면에서 마음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정책의도라는 것과 그것을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북한이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왔느냐 하는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상당히 기초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북한의 變化問題에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상은 하나인데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체제변화라고 할 때 그것이 南朝鮮革命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북한체제의 변화에 관한 對話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으로 뜻깊은 학술회의가 되었고 이런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附錄〉會議概要

### 開院 1周年 紀念 國內學術會議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日 時：1992年 4月 10日(金) 13：30~18：20

場 所：신라호텔 영빈관

- 13：30~13：50    登 錄
- 13：50~14：00    開會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00~16：00    第 1 會議：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 司 會：李容弼(서울大 教授)
  - 發 表：梁性喆(慶熙大 教授)
  - 討 論：金南植(平和研究院 研究委員)  
          徐鎮英(高麗大 教授)  
          安仁海(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16：00~16：20    Coffee Break
- 16：20~18：20    第 2 會議：김일성 이후의 政策方向
- 司 會：金甲喆(建國大 教授)
  - 發 表：徐載鎮(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 討 論：都俊鎬(朝鮮日報 北韓部長)  
          都興烈(忠北大 教授)  
          崔平吉(延世大 教授)